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방향 연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방향 연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진

책임 _ 권미애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차장)
공동 _ 이주원 (고령사회이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혜원 (고령사회이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문희 (고령사회이슈연구소 선임연구원)

자문진

(가나다순)

공선희 (제주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주임교수)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은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황규선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 단장)
황일성 (서울시50플러스재단 소셜학교 이사장)

협조

유용수 (인천시 복지국 고령정책과 과장)
김창현 (인천시 복지국 고령정책과 고령정책팀 팀장)
박경숙 (인천시 복지국 고령정책과 고령정책팀 주무관)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1. 연구 내용	11
2. 연구 방법	12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단계	13
1. 연구 추진 방향	13
2. 연구 세부 추진 단계	13

제2장 인천시 인구 및 정책 현황

제1절 인천시 인구 변화 추이 및 정책	17
1. 인천시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황	17
2. 인천시 노인 인구 현황 및 추이	30
3. 인천시 고령가구 현황 및 추이	31
4. 인천시 군·구별 노년부양비 현황 및 추이	33
5. 인천시 군·구별 노령화지수 현황 및 추이	34
6. 인천시 군·구별 노인 인구 및 고령화율 추이	35
7. 인천시 군·구별 고령가구 현황	36

제2절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과정 및 현황	37
1.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37
2.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40
3. 인천시 고령정책의 변화 및 현황	43
 제3장 국내·외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제1절 국내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55
1. 중앙정부의 고령정책 현황	55
2. 타 시·도의 고령사회 정책 현황	66
3. 국내 초고령 사회 정책 사례 분석	70
제2절 해외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83
1.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정책	83
2. 독일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정책	110
3. 프랑스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정책	143
4. 미국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정책	162
 제4장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제언	
제1절 고령정책 영역별 제언	187
1. 고령정책 자문 의견 분석	187
2. 고령정책 영역별 방안 제언	201
제2절 고령정책 방향 및 추진 체계(안)	205
1.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방향	205
2.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체계(안)	207
 참고문헌	211

표 목차

〈표 1-1〉 7대 특·광역시 총인구 및 구성비(2020~2050년)	6
〈표 1-2〉 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2020~2050년)	7
〈표 1-3〉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년)	8
〈표 1-4〉 2019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년)	9
〈표 1-5〉 연구 추진도	13
〈표 2-1〉 연령별 인천시 인구 구성 변화	19
〈표 2-2〉 인천시 군·구별 고령사회 분류	20
〈표 2-3〉 인천시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과제(안)	24
〈표 2-4〉 인천시 인구정책 주요 체계도	25
〈표 2-5〉 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고령사회 분야)	38
〈표 2-6〉 인천시 제1차 고령화 대책의 정책과제	39
〈표 2-7〉 정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 핵심 주제	40
〈표 2-8〉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 체계도	42
〈표 2-9〉 2016년도 인천시 영역별 주요 고령정책	44
〈표 2-10〉 2019년도 인천시 영역별 주요 고령정책	45
〈표 2-11〉 2022년도 인천시 영역별 주요 고령정책	48
〈표 3-1〉 제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57
〈표 3-2〉 제4기 인구정책 TF 분야별 세부 논의과제	59
〈표 3-3〉 2022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분야별 예산 현황	62
〈표 3-4〉 2022년 시행계획 정책대상별 예산 현황	62
〈표 3-5〉 2022 추진전략 분야별 고령 관련 중점과제	64
〈표 3-6〉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분야별 현황	66
〈표 3-7〉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고령사회 정책현황	67
〈표 3-8〉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영역	73

〈표 3-9〉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도시환경영역 주요 실행 사업	74
〈표 3-10〉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주거영역 주요 사업(안)	74
〈표 3-11〉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교통영역 주요 사업(안)	75
〈표 3-12〉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사회참여영역 주요 사업(안)	75
〈표 3-13〉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존중 및 사회통합영역 주요 사업(안)	76
〈표 3-14〉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시민참여 및 고용영역 주요 사업(안)	76
〈표 3-15〉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영역 주요 사업(안)	77
〈표 3-16〉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지역지원 및 보건복지영역 주요 사업(안)	77
〈표 3-17〉 논산시 100세행복과 주요업무	79
〈표 3-18〉 논산시 고령정책 소득 및 일자리 영역 주요 사업(안)	80
〈표 3-19〉 논산시 고령정책 건강 및 지역사회돌봄 영역 주요 사업(안)	81
〈표 3-20〉 논산시 고령정책 사회참여 및 학습 영역 주요 사업(안)	81
〈표 3-21〉 논산시 고령정책 고령친화환경 영역 주요 사업(안)	82
〈표 3-22〉 2022년도 고령사회대책 분야별 내용	91
〈표 3-23〉 일본 고령화단계별 인구특성 및 고용 대응 조치(2021년 추가비교)	94
〈표 3-24〉 효고현 복지부 산하 8개 과 주요 업무 내용	105
〈표 3-25〉 효고현 복지부 고령정책과 산하 5개 부서 주요 업무 내용	107
〈표 3-26〉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 조직구성 및 주요 추진과제내용	109
〈표 3-27〉 독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11
〈표 3-28〉 노인보고서(Altenbericht) 주제	114
〈표 3-29〉 독일 연금 개혁 연혁	117
〈표 3-30〉 독일 실업 보상 및 고령층 노동시장 관련 정책 도입 현황	119
〈표 3-31〉 독일 중·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120
〈표 3-32〉 은퇴자 수강 가능 과목 또는 프로그램 제공 지역별 대학 리스트	126
〈표 3-33〉 고령자 적합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건축 항목	128
〈표 3-34〉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등대 프로젝트	136
〈표 3-35〉 프랑스 고령화 단계별 정책	145
〈표 3-36〉 프랑스 고령자 고용정책	146
〈표 3-37〉 프랑스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147

〈표 3-38〉 프랑스 고령자층의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149
〈표 3-39〉 개인자립수당 특징	152
〈표 3-40〉 프랑스 사회·보건성 산하 고령자 복지정책 담당 부서	161
〈표 3-41〉 미국 총 인구 수, 연령대별 비율 전망	162
〈표 3-42〉 미국 고령정책의 주요 법적 제도	163
〈표 3-43〉 SECURE ACT의 주요 내용	164
〈표 3-44〉 WOA 핵심 프로그램	166
〈표 3-45〉 Senior Corps 활동 및 운영	173
〈표 3-46〉 앙코르U 기관(EncoreU Institutions) 명단	176
〈표 3-47〉 고령자 대상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178
〈표 3-48〉 미국 국립고령화위원회 주요 업적	180
〈표 3-49〉 미국 NCOA의 주요 사업	182
〈표 4-1〉 자문 영역 및 질의 내용	188
〈표 4-2〉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영역별 정책 제안	205
〈표 4-3〉 인천시 복지국 부서별 주요사무	208

그림 목차

[그림 1-1] 세계와 한국 인구 추이	4
[그림 1-2]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 추이	5
[그림 1-3]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5
[그림 1-4] 연구 세부 추진 체계	14
[그림 2-1] 시·도별 인구성장률(2020년, 2050년)	17
[그림 2-2] 인천시 연령별 및 성별 인구 변화(2002년, 2022년, 2042년)	18
[그림 2-3] 인천시 고령인구비율	20
[그림 2-4] 7대 특·광역시 연도별 고령화율 및 증가율	30
[그림 2-5] 7대 특·광역시 연도별 노인 수 및 증가율	31
[그림 2-6] 7대 특·광역시 연도별 고령가구 및 증가율	32
[그림 2-7] 7대 특·광역시 연도별 고령가구 비율 및 증가율	32
[그림 2-8] 인천시 군·구 연도별 노년부양비	33
[그림 2-9] 인천시 군·구 연도별 노령화지수	34
[그림 2-10] 인천시 군·구 연도별 노인 수 및 고령화율	35
[그림 2-11] 인천시 군·구 연도별 고령가구 수 및 비율	36
[그림 3-1]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60
[그림 3-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별 핵심 과제	61
[그림 3-3]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73
[그림 3-4] 논산시 고령정책 추진체계	79
[그림 3-5] 일본 고령화 추이와 장래인구추계	84
[그림 3-6] 일본 효고현 고령화 추이	104
[그림 3-7] 일본 효고현 복지행정조직도	105
[그림 3-8] 독일의 인구전략 체계	112
[그림 3-9] 독일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개괄적 조직도	133

[그림 3-10] 독일고령문제센터(DZA) 인력조직도	138
[그림 3-11] 독일고령문제센터(DZA) 홈페이지 및 연구보고서	139
[그림 3-12] LaS NRW 홈페이지 및 연간보고서	142
[그림 3-13] 미국의 고령자돌봄 전달체계	170
[그림 3-14] 미국의 국립고령화위원회(NCOA) 홈페이지	183
[그림 3-15] 미국의 고령자복지정책 추진체계	184
[그림 4-1]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방향(안) 모형	206
[그림 4-2] 인천시 복지국 조직도	207
[그림 4-3]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추진 체계(안)	2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초고령사회 의미와 과제

○ 국가 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추진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14)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2019년 수정 기본계획(2019~2020)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중앙정부의 계획은 국내 실정에 맞춰 공통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과 배경이 달라 어떤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유사한 농어촌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 예산 투입과 여러 자원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따라 다른 산출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런 측면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각 지자체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가 제안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전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 : 인구 감소 성장에 대한 대비 요구

○ 인구 전망

- 세계 2022년 79억 7천만 명 → 2070년 103억 명 증가
- 한국 2022년 5천2백만 명 → 2070년 3천 8백만 명 감소(1천4백만 명)

○ 인구 성장률

- 세계 2022년 0.83% → 2040년 0.54% → 2070년 0.18%

- 한국 2022년 -0.23% → 2040 -0.35% → 2070년 -1.24%

○ 고령인구 구성비

- 세계 2022년 9.8% → 2070년 20.1% (10.3%p 증가 전망)
- 한국 2022년 17.5% → 2040년 46.4% (28.9%p 증가 전망)

자료: 통계청(2022.9.5.), 보도자료: 2021년 장래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전국 및 인천시 인구 현황

○ 총인구 현황

- 전국 2020년 5,184만 명 → 2050년 4,736만 명 (증감률 -8.6%)
- 인천 2022년 295만 명 → 2050년 281만 명 (증감률 -4.7%)

○ 고령인구 및 구성비

구분		고령인구 증감률	고령인구 구성비 증감률
65세 이상 인구	전국	2020년 815만 명 → 2050년 1,900만 명 (증감률 133.1%)	2020년 15.7% → 2050년 40.1% (증감률 24.4%)
	인천	2022년 40만 명 → 2050년 110만 명 (증감률 177.8%)	2020년 13.5% → 2050년 39.3% (증감률 25.8%)
85세 이상 인구	전국	2020년 78.2만 명 → 2050년 440.8만 명 (증감률 464.0%)	2020년 1.5% → 2050년 9.3% (증감률 7.8%)
	인천	2022년 3.7만 명 → 2050년 25.3만 명 (증감률 579.8%)	2020년 1.3% → 2050년 9.0% (증감률 7.7%)

□ 인천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추진 경과

○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년)	
제1차 저출산 대책 목표 및 전략	
비전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 인천
목표	① 미래세대의 행복과 건전한 성장 ②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전략	①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 확장: 예비부부(청년층)부터 ② 출산장려의 적용범위 확장: 첫째 자녀부터 ③ 출산양육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제1차 고령화 대책 목표 및 전략	
비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

-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황
- 노인인구와 고령가구 현황 및 추이
- 군·구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인구 및 고령화율, 고령가구 현황 및 추이
-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과정 및 현황
 - 인천시 저출산·고령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 인천시 고령정책의 변화 및 현황
- 제3장 국내·외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 국내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중앙 정부, 타시·도)
 - 국외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 제4장 정책 제언
 - 고령정책 영역별 제언
 - 고령정책 전문가 자문 의견, 고령정책 영역별 방안 제언
 - 고령정책 추진체계(안) 제시
 -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 체계(안) 제시

나.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및 통계조사

- 문헌 및 통계 외 자료 분석
 - 전국 타시·도, 인천시 외 통계 자료 검토
 - : 정부 정책보고서 및 국가 통계 자료 참조
 - 중앙정부 및 전국 타시·도, 국내·외 고령정책 현황 조사
 - 인천시 내부자료 검토

2) 의견조사

- 고령정책 전문가 및 시(市) 유관 부서 의견 수렴
 - 정책 영역별 외부 전문가 구성 및 자문회의에 의한 의견 조사 및 분석
 - 시(市) 유관 부서 내부 의견 수렴

3. 주요결과

가. 연구 내용

□ 인천시 인구 및 고령정책 변화의 시사점

- 인천시 절대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 인천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시급
- 인천시 영역별 고령정책
 - [소득보장 측면]
 - 직접적인 정책보다 일자리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에 초점을 둬. 따라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에 관심 집중
 - [건강 및 돌봄 측면]
 - 중앙정부 공통사업을 2016년과 2019년 추진하였고, 2022년에 들어 자체 사업이 증가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서 지역 의료지원’, ‘공공보건 시스템을 이용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등 긍정적인 평가 가능
 - 향후 공공의료원 확충, 공공보건시스템 보강,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보건 - 돌봄체계 결합 추진 필요
 - [여가 및 사회참여 측면]
 - 정책대상자의 특성 변화에 맞춰 관련 사업의 지속적 개발과 자체 사업 구성이 많음. 중장년부터 고령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평생학습과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수립 필요
 - [고령친화환경 측면]
 - 인천시는 효문화 정착 사업과 안전한 삶에 관심을 두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연령통합적 사업 발굴이 요구됨
 - 고령친화적인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시급

□ 고령정책 자문 의견 분석

○ 자문 영역 및 질의 내용

고령정책 영역	주요 질의 내용
• 소득과 일 • 건강 및 돌봄 • 여가 및 사회참여 • 연령통합(고령친화)환경	• 고령정책 또는 고령사회정책 용어 사용의 정합성 • 의견 제시를 위한 영역별 고령정책 추진 내용 및 상황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이행 시, 현재의 고령정책 기초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유지 또는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이행 시, 가장 시급한 문제와 중점 정책과제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 및 방향 제안

○ 정부의 고령정책 추진 내용 및 상황

정책	내용
고용안전지원	• 사업주 대상 지원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보조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수 증가한 기업에 임금보조
재취업지원	• 고용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기업, 중장년 대상 단계별 맞춤 고용서비스,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 고령자 인재은행 : 취업능력 낮은 고령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층 대상 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전직지원 의무화 : 1,000인 이상 대기업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50~70세 퇴직전문인력 일-경험을 통한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50세 이상 신중년을 적합직무(사전 공표)에 채용 및 고용유지 시 지원금 제공
직업훈련 지원	• K-Digital 기초역량훈련 : 구직자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훈련 (35~54세 구직자대상) • 지역산업맞춤형 중장년 ICT훈련 : 실업 전후 중장년의 직무능력향상, 기회증대를 위한 ICT 활용분야 훈련 • 국가기술전력산업직종훈련 중장년 특화훈련 : 국기훈련 직종 중 중장년 취업을 높은 11개 직종의 훈련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 5060세대 맞춤 기술교육(폴리텍 캠퍼스별 특화전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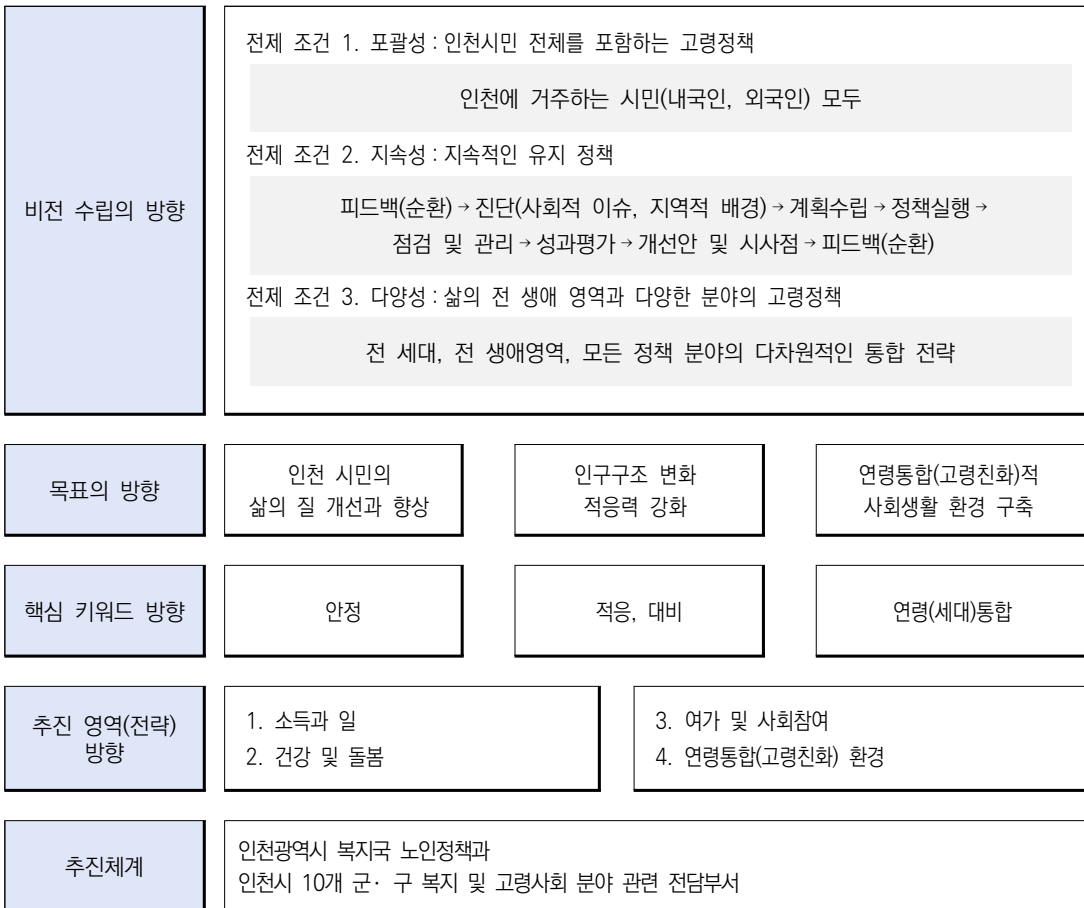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영역별 정책 제안

영역별 고령정책 제안	
소득과 일	• 지역기반 기업(관) 연계망 구축 • 생산적 고령자 일자리 컨설팅과 창출 • 고령자 일 환경 개선 및 조성 • 고령정책지원 관련 법제 정비 • 고용안정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 분야 제공기관의 다양성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강화 • 체계적인 고령정책 일자리 연구 및 사업 • 대상자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정책 프로그램 • 이·전직, 재취업 지원 의무화 및 직업훈련 강화 • 고령친화기업 및 산업 육성

영역별 고령정책 제안		
건강 및 돌봄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개발 및 모니터링 - 돌봄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 핵심 전담조직 활성화로 정책 기조 유지 - 건강 및 돌봄(예방의료 서비스) 증진	-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 정부사업의 지역적 특성과 연계성 반영 - 정서·심리 케어 지원
여가 및 사회참여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강화 - 사회참여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연계 지원 - 고령자 대상 세분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연령통합 (고령친화) 환경	- 연령통합도시 지역 환경 조성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추진체계 검토 - 고령자 및 고령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 고령사회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고령친화환경 조성 관련 연구 활성화

□ 고령정책 방향 및 추진 체계(안)

○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방향(안) 모형



○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체계(안)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추진 체계(안)					
1안	인천시 복지국				
	복지 정책과	복지 서비스과	장애인 복지과	(가칭) 고령정책과	보훈과
인천시 복지국 노인정책과 내 팀 단위 재구성 및 추가 업무 신설을 통한 재배치	복지정책 시설지원 생활보장 자활지원	통합돌봄 복지협력 자립서비스	정책 인권익지원 자립기반 서비스	고령정책 노인정책 행복한인생 노인돌봄요양 장사문화	보훈지원 진상조사
2안	(가칭)인천시 고령정책국				
	(가칭) 고령정책과	(가칭) 노후준비과	(가칭) 복지시설과	(가칭) 장사문화과	(가칭) 돌봄요양과
	기본계획 시행계획 고령정책관리 '국' 총괄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설관리	시설지원 감독/평가	시설관리 인프라조성	시설관리 장기요양
인천시 (가칭)고령정책국 확대 신설, 기존 노인정책과 업무 외 추가 고령사회정책 전반 업무 추가 확대					

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단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초고령사회 의미와 과제

-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점이 이제는 3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간적인 촉박함을 접하면서 현재 상황의 미흡함과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긴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슈들이 수 없이 제기되고 있음
 - 초고령사회로의 기준과 의미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함
 - 이미, 수 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되었고, 2022년 현재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곧 2025년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 고령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검색되는 키워드와 내용의 대부분이 ‘노인 빈곤, 우울, 고독사, 인구절벽(오너스), 경제성장률 저해, 돌봄의 공백과 사각화 등’ 사회 전 분야와 전 영역을 통틀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파동은 거대함
- 전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정부와 국민 모두 함께 고민하고, 정부는 그러한 고민의 선두 리더로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해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14)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2019년 제3차 수정 기본계획(2019~2020)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이와 같은 사회적 거대 이슈를 진단하고 대비하고자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는 비전하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의 3대 목표상을 설정함(대한민국정부, 2020)

- 중앙정부의 계획은 국내 실정에 맞춰 공통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과 배경이 달라 어떤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유사한 농어촌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 예산 투입과 여러 자원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따라 다른 산출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측면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각 지자체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가 제안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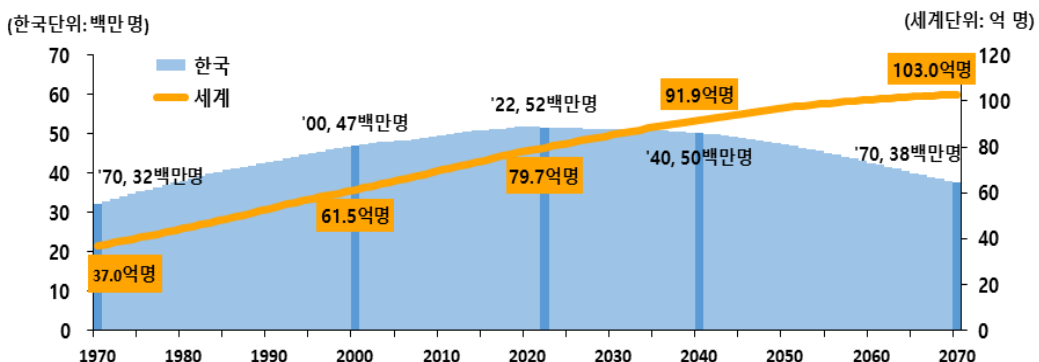
□ 전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 : 인구 감소 성장에 대한 대비 요구

- 최근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인구 전망, 인구 성장률, 고령인구 구성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인구 전망 (그림 1-1)

- 세계 인구 2022년 79억 7천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증가
- 한국 인구 2022년 5천2백만 명에서 2070년 3천 8백만 명 감소(1천4백만 명)

[그림 1-1] 세계와 한국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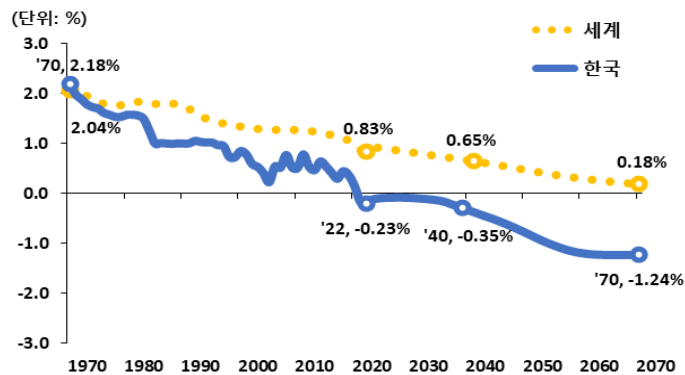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2.9.5.). 보도자료 : 2021년 장래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② 인구 성장률(그림 1-2)

- 2022년 현재 인구성장률을 보면, 전 세계는 0.83%의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0.23%로 감소 성장률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이는 2040년을 전망할 때 전 세계는 0.54%, 한국은 -0.35%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2070년이 되면 전 세계는 0.18%, 한국은 -1.24%로 더욱 감소하는 인구성장률의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그림 1-2]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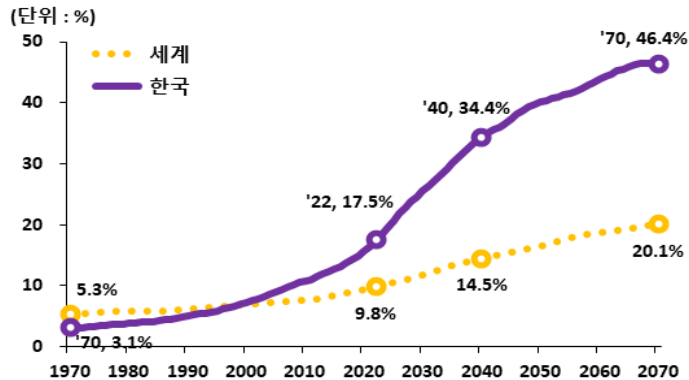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2.9.5.). 보도자료 : 2021년 장래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③ 고령인구 구성비(그림 1-3)

- 2022년 전 세계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9.8%에서 2070년에는 20.1%로 10.3%p 증가 전망
- 202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17.5%에서 2070년 46.4%로 28.9%p 정도 증가 전망

[그림 1-3]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2022.9.5.). 보도자료 : 2021년 장래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전체 인구수, 인구성장률, 고령인구 구성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 세계 역시 소폭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인구성장률 역시 2020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형태의 하향 곡선의 모습이 확인되고 고령인구의 증가율은 우상향 곡선의 양상을 띠
- 그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추이의 간극보다 더 극적인 변화의 곡선이 확인됨. 인구수와 인구성장률은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의 형태로 접어든 상황이며, 고령인구 구성비는 전 세계의 곡선의 상승보다 더 가파르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전망됨
-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별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과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음

□ 전국 및 인천시 인구 현황

- 2020년부터 2050년 까지 전국과 인천시를 포함한 7대 특·광역시 총인구, 고령인구 및 구성비를 전망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총인구 현황(표1-1)

- 전국의 경우 2020년 총인구는 5,184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 4,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대비 2050년 서울, 부산 등 모든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인천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4.7%) 할 것으로 보임

〈표 1-1〉 7대 특·광역시 총인구 및 구성비(2020~2050년)

(단위 : 만 명, %)

지역	총인구(만 명)							'20년 대비 '50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증감	증감률(%)
전국	5,184	5,145	5,120	5,087	5,019	4,903	4,736	-448	-8.6
서울	962	921	895	875	854	826	792	-170	-17.7
부산	336	321	308	296	283	267	251	-84	-25.1
대구	241	230	220	211	202	192	181	-61	-25.2
인천	295	296	296	297	295	290	281	-14	-4.7
광주	148	144	140	136	132	127	121	-27	-18.0
대전	149	144	140	137	134	130	125	-25	-16.4
울산	114	109	104	100	95	90	84	-29	-25.9

자료 : 통계청(2022.5.26.). 보도자료 :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② 고령인구 및 구성비(표1-1)

- 전국 고령인구의 전망은 2020년 815만 명(15.7%)에서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 2050년 1,900만 명(40.1%)에 이를 전망이며, 전남, 전북, 강원 등 시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함
-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한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급증해 2020년 대비 2050년의 고령인구는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인천의 경우 2020년 부산(18.7%), 대구(16.1), 서울(15.4%), 광주(13.8%), 울산(12.1%)에 이어 인천(13.5%) 순으로 구성비가 20% 미만이지만, 2050년이 되면 부산(43.6%), 대구(42.1%), 울산(41.9%) 다음으로 인천의 고령인구 구성비(39.3%)가 증가하는 양상이 예측되어 급속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됨

〈표 1-2〉 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2020~2050년)

(단위:만 명, %)

지역	65세 이상 인구(만명)								85세 이상 인구(만명)							
	'20년	'25년	'35년	'45년	'50년	2020년 대비 2050년			'20년	'25년	'35년	'45년	'50년	2020년 대비 2050년		
						증감	증감률 (%)							증감	증감률 (%)	
전 국	815	1,059	1,529	1,834	1,900	1,085	133.1		78.2	118.5	194.6	355.1	440.8	362.7	464.0	
서 울	148	185	248	285	293	145	98.4		11.4	17.9	32.8	57.6	69.6	58.2	512.7	
부 산	63	79	102	110	110	47	74.4		4.9	7.6	13.5	23.7	27.2	22.3	455.5	
대 구	39	49	68	76	76	37	95.8		3.3	5.2	8.5	15.1	18.3	15.0	451.1	
인 천	40	55	86	105	110	71	177.8		3.7	5.6	9.9	19.7	25.3	21.5	579.8	
광 주	20	26	38	45	46	26	125.8		1.9	2.9	4.8	8.2	10.1	8.2	420.2	
대 전	21	27	38	46	47	27	128.9		2.0	2.9	4.9	9.0	11.1	9.1	464.6	
울 산	14	19	31	35	35	22	157.0		1.0	1.5	2.8	5.9	7.4	6.4	633.7	
구성비, 증감(%, %p)																
지역	'20년	'25년	'35년	'45년	'50년	증감률(%)			'20년	'25년	'35년	'45년	'50년	증감률(%)		
전 국	15.7	20.6	30.1	37.4	40.1	24.4			1.5	2.3	3.8	7.2	9.3	7.8		
서 울	15.4	20.1	28.3	34.5	37.0	21.7			1.2	1.9	3.7	7.0	8.8	7.6		
부 산	18.7	24.7	34.5	41.2	43.6	24.9			1.5	2.4	4.6	8.8	10.8	9.4		
대 구	16.1	21.4	32.2	39.7	42.1	26.0			1.4	2.3	4.0	7.9	10.1	8.8		
인 천	13.5	18.6	28.8	36.4	39.3	25.8			1.3	1.9	3.3	6.8	9.0	7.7		
광 주	13.8	18.1	27.5	35.3	38.1	24.2			1.3	2.0	3.5	6.4	8.3	7.0		
대 전	13.8	18.7	28.1	35.3	37.8	24.0			1.3	2.0	3.5	6.9	8.9	7.6		
울 산	12.1	18.0	30.5	39.0	41.9	29.8			0.9	1.4	2.8	6.5	8.8	7.9		

자료 : 통계청(2022.5.26.). 보도자료 :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 전반적인 인구변화의 경향은 점차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양극적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전체 인구에 대한 정책 수립과 함께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다학제적인 접근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예방하고 보호하는 소극적 관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정책과 기반조성에 대한 지역별 논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함

□ 인천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추진 경과

- 인천시는 2017년 12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이하 ‘센터’로 명명)’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고령·노인·중장년 관련 정책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센터는 인천시 복지국 고령정책과 소관 부서로 관리·감독과 부서 내 운영 사업 등으로 연결된 지점이 많음. 특히,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인천시정과 노인복지 전반에 관련한 정책연구로 본 연구 또한 고령정책과로부터 제안받아 진행됨

①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 인천시가 수탁연구용역을 제안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기본계획으로 보육과 고령화 부분을 모두 다룸(표 1-3)
- 2017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보육 담당부서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한(2018~2020년)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함

〈표 1-3〉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년)	
제1차 저출산 대책 목표 및 전략	
비전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 인천
목표	① 미래세대의 행복과 건전한 성장 ②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전략	①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 확장 : 예비부부(청년층)부터 ② 출산장려의 적용범위 확장 : 첫째 자녀부터 ③ 출산양육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제1차 고령화 대책 목표 및 전략		
비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	
목표	①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노년 ②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환경 조성	
추진전략	① 고령화 대책의 대상 확대 : 청년기부터 시작하는 노년 대비 전략 추진 ②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노인 기본 생활 안정화, 고령친화 환경 조성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인건강관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부양·돌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 고령친화환경 조성	[세부과제] - 은퇴자 인생이모작 컨설팅 및 사회활동 연계서비스 - 인천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노후소득 설계 -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운영

자료 : 이미화, 유해미, 권미경, 이정원, 김나영, 이재희, 윤지연, 장문영(2017).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0). 인천광역시·육아정책연구소.

② 2019년 제1차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 2017년에 연구되어 수립된 기본계획 이후 저출산 분야와 관련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인천시 해당부서에서 수립한 후 고령사회 분야에서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고령정책과 내부 요구에 의해 연구 제안을 받아 「제1차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연구를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추진되었고(표 1-4), 2023년 제2차 중장기 계획 또한 제안 검토되어 연구 수행을 예정하고 있음

〈표 1-4〉 2019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년)

비전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	
목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추진기반	①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환경 조성 ②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디자인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성	
추진전략 정책과제	[6개 영역, 16개 중과제, 36개 소과제] ① 노후 소득보장 강화 ②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③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④ 통합 돌봄의 강화 ⑤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⑥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자료 : 권미애, 김제희, 김신경(2019).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이와 같이 인천시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력과 추진 과정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관심 또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국내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 및 지자체의 현황과 정책 사례를 살펴 인천시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2. 연구 목적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정책 방향 모색
- 2023년 제2차 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기본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기초 선행연구로 활용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전 세계 및 전국,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황 및 추이 검토
- 국내외 고령정책의 방향 탐색
 - 정부, 타 시·도, 인천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해외 국가 등
- 영역별 고령정책 제언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자료 기준 연도: 2022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및 이전 발간물 및 자료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행정통계, 학위 및 학술논문, 단행본, 연구기관 보고서, 각종 보도자료, 관련 사이트 등)
-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기준 연도: 2022년

☐ 공간적 범위

- 전 세계: 일본 외 영어권 국가
- 전국 타 시·도, 인천시

☐ 내용적 범위

- 전국 타 시·도, 정부,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및 현황 검토
- 국내외 고령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 초고령사회 대비 영역별 고령정책 방향성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및 통계 외 자료 검토 및 분석

- 전국 타 시·도, 인천시 통계 자료 검토
: 정부 정책보고서 및 국가 통계 자료 참조
- 중앙정부 및 전국 타 시·도, 국외 고령정책 현황 조사
- 인천시 내부자료 검토

○ 외부 전문가 및 시(市) 유관 부서 의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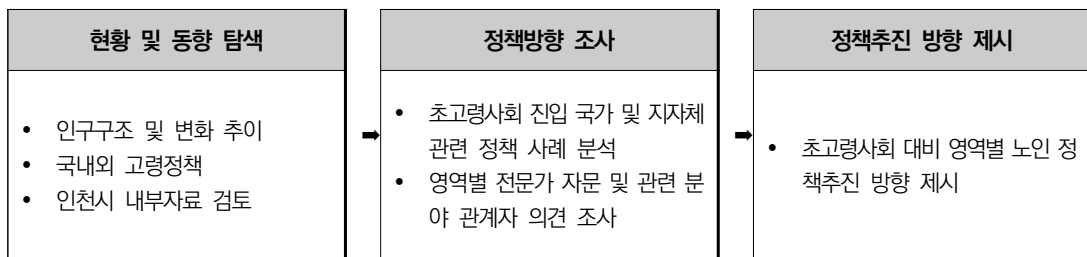
- 정책 영역별 외부 전문가 구성 및 자문회의에 의한 의견 조사
- 시(市) 유관 부서 내부 의견 수렴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단계

1. 연구 추진 방향

- 본 연구의 추진으로 검토될 내용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 국가, 국내 지자체 등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적용되고 있고, 향후 요구되는 정책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에 있음
- 지속적인 인구변화로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면서 어떠한 정책이 인천시에 요구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각적인 관점으로 영역별 고령정책의 방향을 탐색하여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내외 동향을 참고하여 인천시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함(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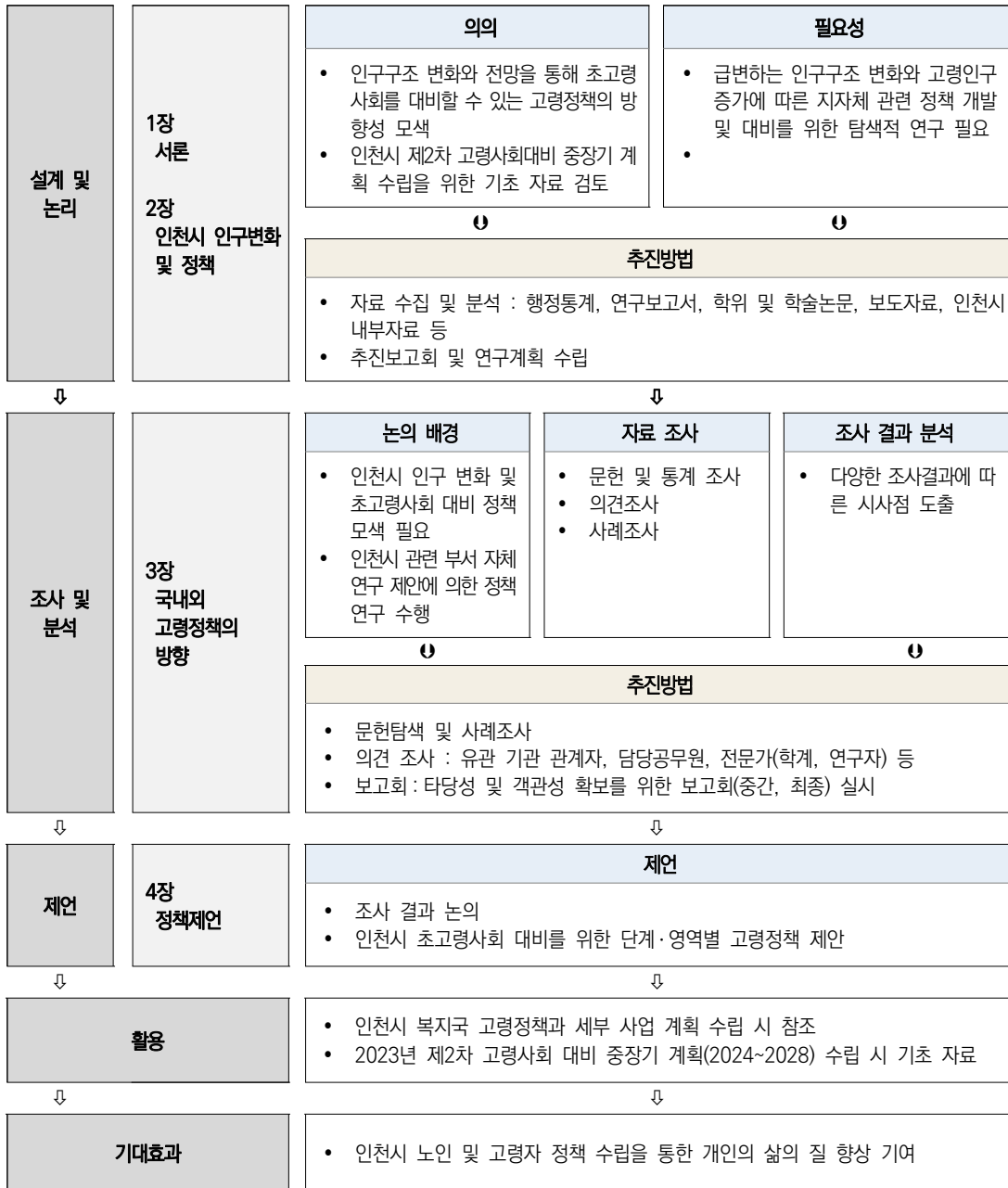
〈표 1-5〉 연구 추진도



2. 연구 세부 추진 단계

-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추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설계 및 논리와 조사 및 분석, 정책제언으로 구분함(그림 1-4)
- 각 단계별 연구보고서 구성 내용과 추진방법에 따른 객관적 자료 조사와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감

[그림 1-4] 연구 세부 추진 체계



2

인천시 인구 및 정책 현황

제1절 인천시 인구 변화 추이 및 정책

제2절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과정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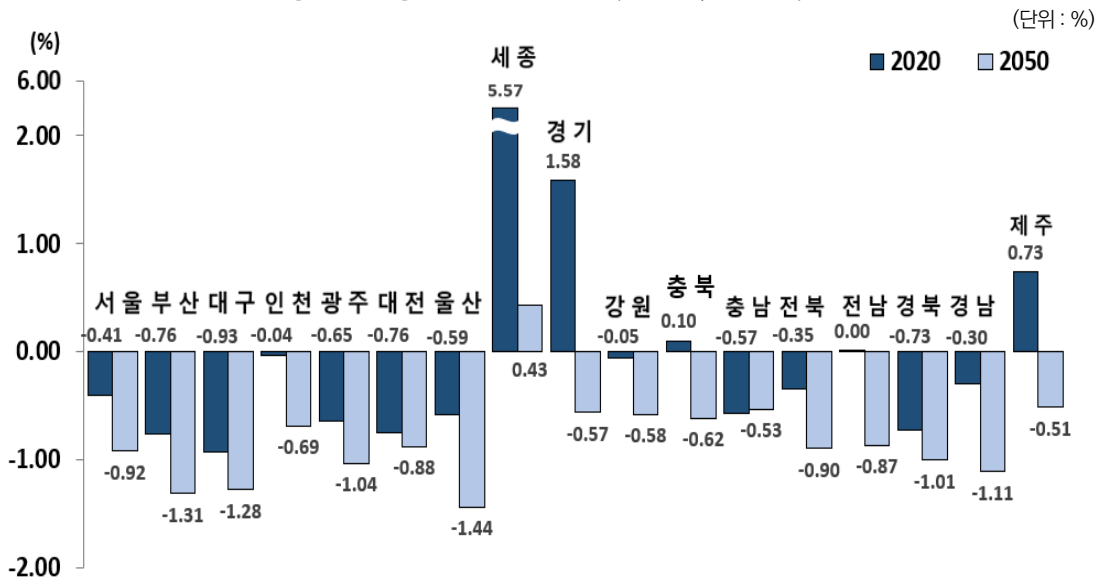
제1절 인천시 인구 변화 추이 및 정책

1. 인천시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황

1) 인천시 인구 동향

- [그림 2-1]은 2020년 및 2050년 시도별 인구성장률 추이를 보여줌
- 2020년부터 대구(-0.93%), 부산(-0.76%), 대전(-0.76%) 등 12개 시도는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이 시작됨. 2035~2039년에는 인천(2035년), 강원·충북(2038년), 충남(2039년)에서, 2040년에는 경기·제주까지 마이너스 인구성장이 예상됨
- 2017년 영남권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2019년 호남권, 2036년 수도권, 2039년 중부권까지 모든 권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은 2020년 인구성장률 0.66%에서 2036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2050년에는 -0.69%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1] 시도별 인구성장률(2020년, 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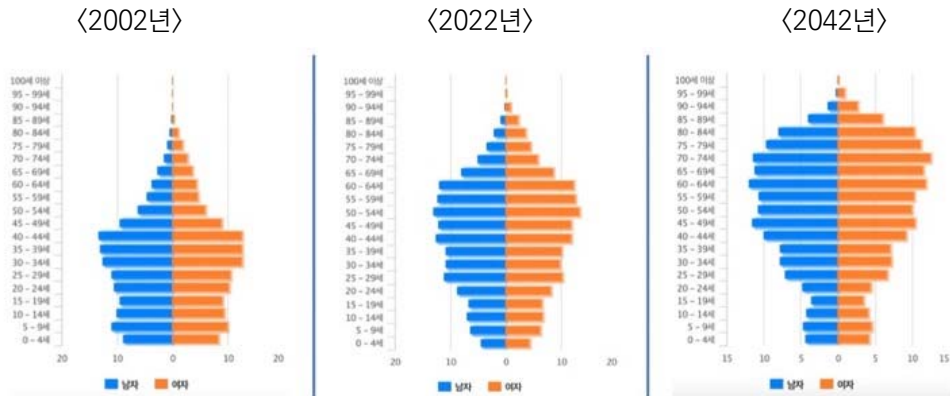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 [그림 2-2]와 <표 2-1>은 인천시의 전반적 인구 구성과 추이를 엿볼 수 있게 함

- [그림 2-2]는 20년 간격으로 인천시의 연령 별 인구구성을 인구 피라미드 형태로 제시한 것임.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소년인구(0~14세)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노인 집단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음. 2022년 이후 역삼각형에 가까운 항아리 구조로 변화함
-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기대수명의 차이에 따라 노인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모든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2-2] 인천시 연령별 및 성별 인구 변화(2002년, 2022년, 2042년)



자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22). 「시도 인구 추계 피라미드」.

- <표 2-1>은 연령별 인구 구성을 전국과 비교하여 상세히 나타낸 것임. 유소년 집단(0~14세)의 비중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임(1990년 : 27.1%, 2047년 : 9.1%).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고점(2010년 : 75.0%)에 다다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2047년 : 53.1%).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1990년 : 4.0%, 2047년 : 37.8%).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은 2022년 6.0%에서 2040년 16.8%, 2047년 2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망됨. 이는 전국 대비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 증감 비율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냄

〈표 2-1〉 연령별 인천시 인구 구성 변화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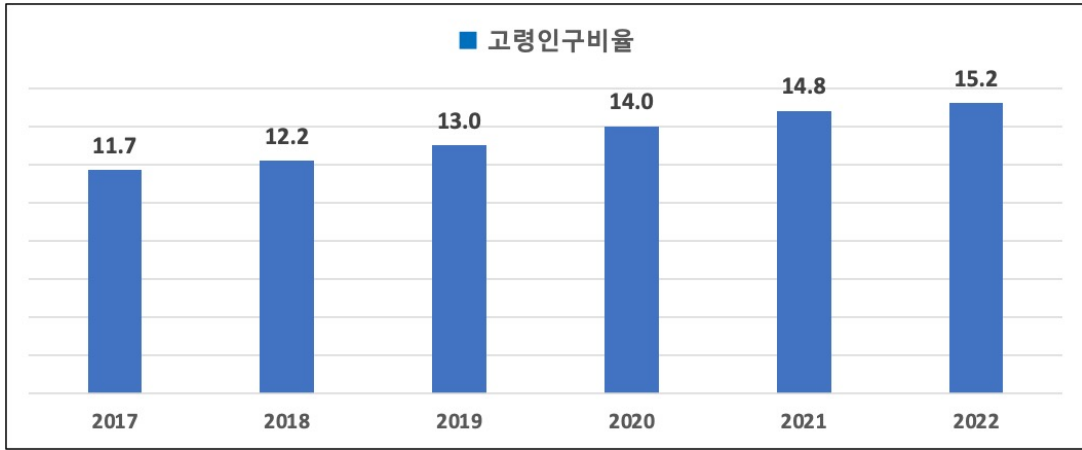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2030년	2040년	2047년
인 천 시	계		1,897	2,522	2,723	2,951	2,962	3,031	3,031	2,947
	0~14세	수	514	590	450	367	346	292	295	268
		구성비	27.1	23.4	16.5	12.4	11.7	9.6	9.7	9.1
	15~64세	수	1,307	1,795	2,043	2,188	2,167	2,022	1,736	1,566
		구성비	68.9	71.2	75.0	74.1	73.1	66.7	57.3	53.1
	65세 이상	수	76	138	230	397	449	718	999	1,113
		구성비	4.0	5.5	8.4	13.4	15.2	23.7	33.0	37.8
	75세 이상	수	21	44	83	161	177	274	508	639
		구성비	1.1	1.7	3.0	5.4	6.0	9.0	16.8	21.7
전 국	계		42,869	47,008	49,554	51,781	51,846	51,927	50,855	48,911
	0~14세	수	10,974	9,911	7,979	6,297	5,985	5,000	4,983	4,503
		구성비	25.6	21.1	16.1	12.2	11.5	9.6	9.8	9.2
	15~64세	수	29,701	33,702	36,209	37,358	36,887	33,947	28,649	25,620
		구성비	69.3	71.7	73.1	72.1	71.1	65.4	56.3	52.4
	65세 이상	수	2,195	3,395	5,366	8,125	8,975	12,980	17,224	18,787
		구성비	5.1	7.2	10.8	15.7	17.3	25.0	33.9	38.4
	75세 이상	수	695	1,091	1,948	3,475	3,730	5,319	8,866	10,872
		구성비	1.6	2.3	3.9	6.7	7.2	10.2	17.4	22.2

자료 : 통계청(2019a). 「장래인구추계」.

- 인천시는 2022년 기준 고령인구 15.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강화군(34.7%), 옹진군(28.0%), 동구(24.0%)와 같은 도서 지역 및 원도심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20%이상)로 진입하였음
- 인천시 내에서 가장 고령 비율이 높은 강화군(34.7%)과 가장 낮은 연수구(11.0%)의 비율 차이는 23.7%로 그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 2-3]과 <표 2-2>는 인천시의 고령인구비율과 구·군별 고령사회 단계별 진입 현황을 나타낸 것임
- [그림 2-3]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낸 것임. 2020년 14.0%, 2021년 14.8%, 2022년 15.2%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3] 인천시 고령인구비율

(단위: %)



자료 : 인천데이터포털(2022). 「인천광역시 고령인구비율 현황」. 재구성.

○ <표 2-2>는 인천시의 군·구별 고령사회 진입의 단계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인천시는 군·구별로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이르기까지 고령인구비율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음

<표 2-2> 인천시 군·구별 고령사회 분류

(단위: %)

구분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인천시	강화군	34.7%	미추홀구	18.2%	서구	11.8%
	옹진군	28.0%	부평구	16.2%	연수구	11.0%
	동구	24.0%	중구	15.0%		
			남동구	14.9%		
			계양구	14.6%		

자료 : 통계청(2022).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인구현황」.

□ 시사점

○ 인천시의 인구 동향 변화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시 절대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 인천시 총인구는 2019년 기준 296만 명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35년에 30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천시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고령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나,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피라미드 모양도 2000년 조형구조에서 2020년 역삼각형에 가까운 항아리 구조로 변화함
- 인천시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 인가증가율이 하락하다가, 2020년 인구 감소세로 전환됨. 2020년 대비 2050년 인천의 인구는 -14만 명으로 5% 미만 감소할 전망이다
- 인천시 노인인구는 2022년 기준 449,337명으로 전체인구의 15.2%를 차지함. 전국 17.1%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인천시 장래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7년 20.7%(초고령사회), 2037년 30.4%, 2047년 37.8%로 전망되고 있음.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기 위한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이 시급함
-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10.5%에서 2045년에는 36.3%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폭은 25.8%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035년에 각각 49.85%, 4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천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 전망

- 인천시 총인구는 지난 20년간 증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됨. 인천시 인구는 20년간 16.2%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동구(-15.3%), 계양구(-10.0%), 부평구(-6.4%), 미추홀구(-2.7%)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같은 기간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중구(88.9%), 연수구(39.7%), 서구(58.8%)는 인구가 증가하였음. 경제자유구역과 신시가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천시 군·구별 인구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추정됨
- 강화군(34.7%), 옹진군(28.0%), 동구(24.0%)와 같은 도서 지역 및 원도심 지역에서 이미 초고령사회(20%이상)로 진입하였음. 인천시 내에서 가장 고령 비율이 높은 강화군(34.7%)과 가장 낮은 연수구(11.0%)의 비율 차이는 23.7%로 그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시급

- 향후 30년 이내에 인천시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신규 출생아가 적은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이로 인해 장래에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총부양비 및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인천시 사회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2) 인천시 인구 정책

○ 아래 <표 2-3>은 인천시 인구정책의 비전과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정리한 것임

□ 비전 : 모든 세대와 함께 살고 싶은 지속가능 상생도시 인천

□ 목표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령별·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정책 지원

□ 기본방향

○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체계적인 접근

- 지난 15년간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임신 출산 보육 지원 등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음

*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목표 : (제1·2차)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 -> (제3차)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 총인구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 1인 가구 확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새로운 계층의 유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원도심-신도심 간 지역불균형 심화 등 인천시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근본적인 정책 수립 필요

○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

- 지역별로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가지 인천시의 특성을 감안, 대상별·지역별·연령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되, 인천시 전체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
- 출산 및 보육지원 : 신혼부부 및 임산부 가정의 출산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전(全)주기적 지원, 기존 인구의 사망률 감소
- 고령자 지원 : 고령자의 4중고(四重苦) 해소를 위한 일자리 확충, 교통환경 개선 주거지원, 여가·문화 확대, 평생교육 및 복지 지원 강화
- 청년·생산연령 지원 : 타 지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인구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확충, 주거지원, 평생교육, 여가·문화 지원 확대

- 지역 균형발전 : 신도시 지역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기존 원도심과 도서 지역 등 상대적 발전이 부족했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 도서 지역 생활인프라 향상
 - 미래 인구변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반 조성
 - 가치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구 유형에 대응한 도시기반 확충, 교육과 일자리 마련, 여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
 - 양성평등 : 성별 가치관 변화에 따른 양성평등 문화의 실질적 확산,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1인 가구 : 청년층 및 고령자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지원 정책 마련
 - 외국인 증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주요 인구계층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외국인 지원 : 인천시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지원과 사회 통합, 자녀 세대의 국내 인재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정착 주기별·세대별 지원 강화
 - 다문화 사회 대응 : 다문화 커뮤니티 대표성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내국인 대상 사회통합 기반 조성, 유학생-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 인천시 인구 현황에 대한 연구원의 자체 분석과 시민들의 인구정책 설문조사,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인천시의 연령별·지역별·가구특성별 인구구조 현황 분석, 자연적·사회적 인구증감 요인 분석, 행정동 및 기초구역 단위 지역별 인구현황 분석
- 5대 추진전략
- 출산율 제고 및 사망률 감소
 - 고령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도시환경 개선
 - 청년·생산연령 유입 확대
 - 新 인구집단 정착 지원
 -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

〈표 2-3〉 인천시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과제(안)

구분	내용
개요	인천시의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하고, 연령별·계층별·지역별 인구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체계적 인구정책 수립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살고 싶은 지속가능 상생도시 인천
주요목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령별·계층별·지역별·맞춤형 정책 지원
전략	1. 출산율 제고 및 사망률 감소 2. 고령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도시환경 개선 3. 청년·생산연령 유입 확대 4. 新 인구집단 정착 지원 5.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

자료: 이인재 외(2020).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_시정밀착형 보고서」, p.135를 이용하여 재구성.

□ 인천시 인구정책의 추진과제 및 주요 세부사업

○ 추진과제

- 안정적 출산 · 양육 지원
- 신혼가구 주거지원 확대
- 양성평등 문화 정착
- 교통사고 및 자살 최소화
- 고령자 일자리 확대
- 고령자 맞춤형 교통환경개선
- 고령자 주거 지원 확대
- 고령자 여가 · 문화 확대
-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
- 고령자 복지 강화
-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층 정부 환경 안정화 및 주거지원 확대
- 장년층 직업평생교육 강화
- 청년층 여가문화 확대
- 안정적 정착 및 생활만족도 제고
- 자녀 양육 역량 강화 및 자녀 교육 지원
- 사회통합 및 교류 강화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 도서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프라 확대

○ 주요 세부사업

- ‘결혼-임신-출산-육아’까지 전(全)주기적 지원 확대
-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인천시 전체로 확대
-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 정기적 고령자 노동수요 모니터링을 통한 일자리 DB 및 매칭 시스템 구축
- 고령자 특화 교통안전정책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 고령자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
- 인천시 고령자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및 여가학교 운영
-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평생교육 강화
- 기존 고령자복지시설 개선, 유희시설의 복지시설화로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연구개발 분야 청년 인재 유치
-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 장년 친화 기업 컨설팅
-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여가 · 문화공간 확대
- 맞춤형 언어 통번역 및 생활관련 정보 제공 강화
-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 역량 강화
- 다문화 커뮤니티 대표성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환경 개선
- 어촌뉴딜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 이상의 인천시 인구정책의 주요 내용을 체계화하면 아래 <표 2-4>와 같음

<표 2-4> 인천시 인구정책 주요 체계도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 세부과제
모든 세대가 함께 살고 싶은 지속가능 상생도시 인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령별 ·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정책 지원	출산율 제고 및 사망을 감소	안정적 출산·양육 지원	•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주기적 지원 확대 • 출산 전 건강지단 지원 확대 • 공공서 높은 보육시설 확충 • 보육시설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 세부과제
			신혼가구 주거지원 확대	• 신혼주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신혼 희망타운 건설 • 신혼부부 주택마련 저금리 금융상품 개발
			양성평등문화 정착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일-가정 양립 지원 추진단 역할 강화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지원
			교통사고 및 자살 최소화	•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 교통안전 위반율 감소 방안 마련 •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중·장년층 사회관계망 지원을 통한 자살 최소화
	고령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도시환경 개선	고령자일자리 확대		• 정기적 고령자 노동수요 모니터링을 통한 일자리 DB 및 매칭 시스템 구축 • 고령자 대상 교육훈련 인프라 및 일자리 운영 기관 기능 강화 • 기존 고령자 일자리 사업 내실화 및 다양화 • 세대통합 일자리 창출 및 고령자 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 고령자 일자리 전달체계 및 참여기관 확대 • 고령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고령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고령자 맞춤형 교통환경개선	• 고령자 특화 교통안전정책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안전용품 보급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고령자 주거지원확대	• 고령자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적용 • 도서지역 실버주택 공급
			고령자 여가·문화 확대	• 인천시 고령자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및 여가학교 운영 • 고령자의 자원봉사, 여가, 사회참여일자리를 연계·교환 플랫폼 구축 • 고령자 여가문화 시설의 다각화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	•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평생교육 강화 • 지역밀착형 고령자 평생교육 기반 확충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고령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연계프로그램 마련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 세부과제
			고령자 복지강화	• 기존 고령자복지시설 개선, 유흥시설의 복지시설화로 서비스 접근성 확대 • '효드림 복지카드'를 활용한 고령자 복지 혜택 다양화 • 고령 1인가구 지원 확대 •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개선
	청년·생산 연령 유입 확대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 연구개발분야 청년 인재 유치 • 청년창업기업가 정착 지원 • 디지털-제조 청년융합 인재 육성
		청년층 정주 환경 안정화 및 주거지원 확대		•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년층 직업평생교육 강화		• 장년 친화 기업 컨설팅 • 장년 및 고령근로자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고용연장을 위한 고용 지원금 사업 강화 • 인천형 장년층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구축
		청년층 여가문화 확대		•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여가·문화공간 확대 • 청년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및 시설 발굴
	新 인구집단 정착 지원	안정적 정착 및 생활만족도 제고		• 맞춤형 언어 통번역 및 생활관련 정보 제공 강화 • 결혼이민자 대상 학력신장, 맞춤형 취업 및 주거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지원 기능 강화
		자녀양육 역량 강화 및 자녀교육 지원		•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 역량 강화 •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습·돌봄·복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이주민 자녀의 인천시 우수인력으로 육성 및 채용
		사회통합 및 교류 강화		• 다문화 커뮤니티 대표성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인천시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사회통합 기반 조성 • 내국인 대상 다문화 수용성 가치 확산을 위한 맞춤형 비판적 다문화교육 강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환경 개선 • 원도심 생활 SOC 공급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도시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확대		• 여촌뉴딜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 '섬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 활성화

자료 : 정혜은(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p.131-138을 이용하여 재구성.

3) 고령자 대상 영역별 인구정책 현황

인천시 인구정책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부과제 내용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득 및 일자리, 건강 및 지역 돌봄, 사회참여 및 학습, 고령친화환경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함

□ 소득 및 일자리

- 고령자는 은퇴 이후에도 자아실현이나 사회공헌(일하는 즐거움)을 이유로 경제적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
 - * 만 55~79세 고령자의 64.9%가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고 응답함(통계청, 2019)
 - * 근로 희망 사유로 '생활비(57%)' 다음으로 '일하는 즐거움(35.9%)'을 꼽음(지은정 외, 2015)
- 은퇴 전·후 고령자의 인력 DB 구축 및 전문성을 갖춘 고령자와 숙련기술·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 간 매칭 시스템을 구축함
- 고령자의 직무와 경험 평가를 통한 직무분석 Tool 개발 및 고령자의 인력풀 구성과 관내 기업의 직무 수요 모니터링을 통한 고령자-기업 간 연결을 활성화하고 직업전문학교, 폴리텍 대학 등에 고령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함
- 세대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공단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직무 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청년층 세대에 전수하고 창업으로 연계를 시도함
- 고령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일자리 확대는 고령자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돕고, 인천시 고령자 대상 복지비용 절감,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함

□ 건강 및 지역 돌봄

- 인구의 고령화는 부양비 및 의료비의 증가, 독거 고령자 및 고독사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인천시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고령 정책 수립 필요함
- 기존 관내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개선, 활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함
- 세대 간 갈등해소, 고령자 심리·정서 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자살예방, 학대예방, 치매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주도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복지부와 연계하여 구축 및 운영함

- 1인 고령 가구 대상의 지원을 점검,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주력함
- 인천시 고령자들의 삶의 질 및 생활만족도의 향상과 육체적 · 정신적 건강 향상을 도모함

□ 사회참여 및 학습

- 고령자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 여가, 사회참여 일자리를 연계 · 교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함
- 고령자 대상 여가문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고령자 여가문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함
- 고령층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노후생활의 지원을 기대함
-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돕는 지역 대학연계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하여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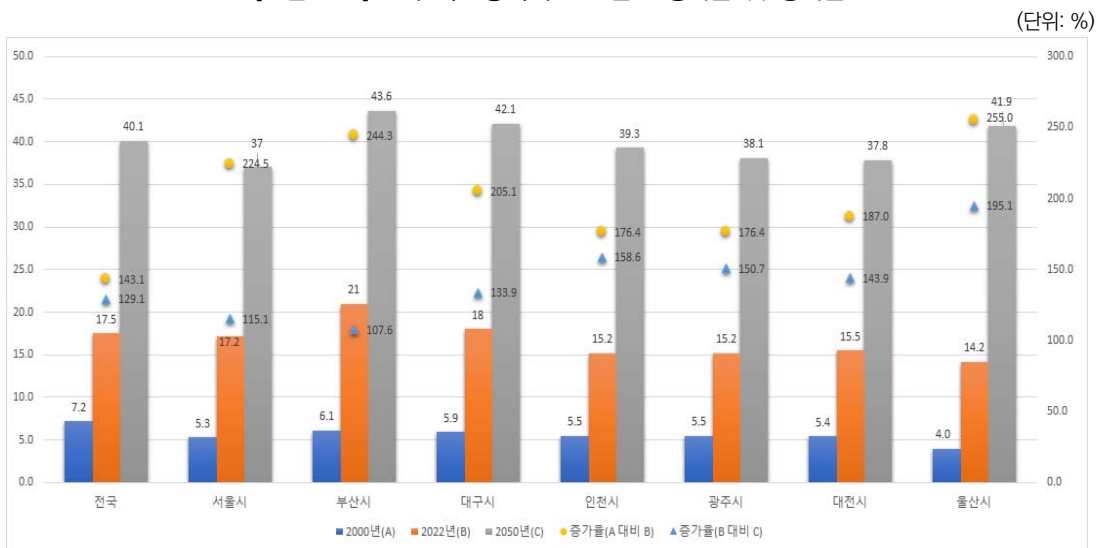
□ 고령친화환경

- 고령자의 이동 안전을 돕는 특화된 교통안전정책 및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를 강화함
- 고령자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은 도서지역에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도서지역 빈집을 활용한 단독주택형 실버주택 공급도 유도함
- 고령자의 심리적 · 육체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고령친화적 설계 등을 통하여 주거 안정성 확보를 기대함

2. 인천시 노인 인구 현황 및 추이

- [그림 2-4]는 7개 특별 및 광역시의 연도별 고령화율과 그 증가율을 나타냄
 - 2022년 인천시의 고령화율은 15.2%로 7개 특별 및 광역시 중 울산시(14.2%) 다음으로 광주시(15.2%)와 두 번째로 낮음
- 고령화율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그동안 인천시의 고령화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향후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2000년 대비 2022년 고령화율은 인천시(176.4%)와 광주시(176.4%)가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2022년 대비 2045년의 고령화율의 증가율은 158.6%로 울산시(19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2-4] 7대 특·광역시 연도별 고령화율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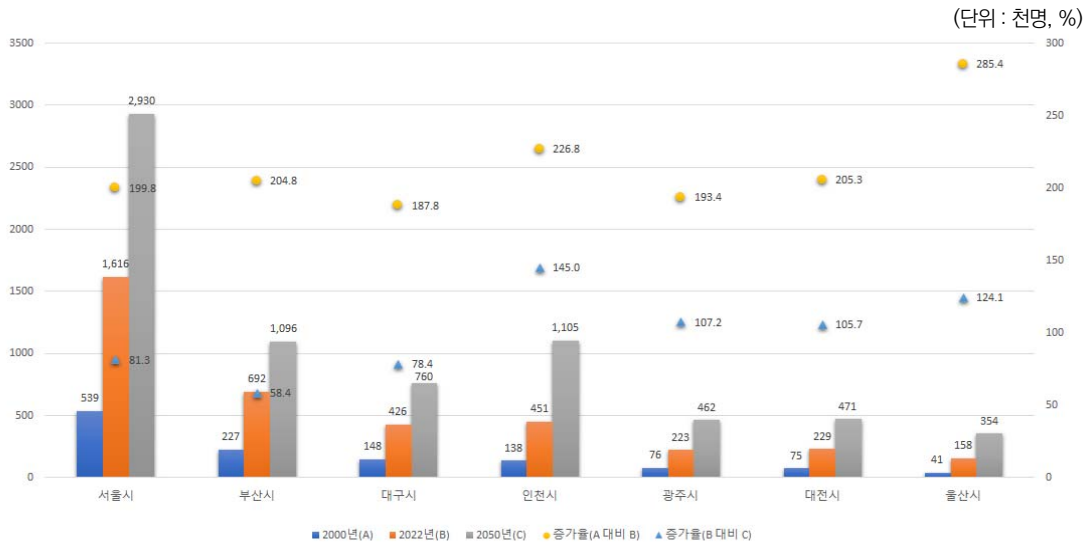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

- [그림 2-5]은 7개 특별 및 광역시의 연도별 노인 수와 변화를 보여줌
 - 2022년 인천시의 노인 수는 약 451천 명으로 7개 대도시 중 서울시(1,616천 명)와 부산시(692천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2050년 인천시 노인 수는 1,105천 명으로 예측됨. 이는 7개 대도시 중 서울시(2,930천 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나, 부산시(1,096천 명)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임

- 인천시의 노인 수는 그간 빠르게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인천시의 2000년 대비 2022년의 노인 증가율은 226.8%임 이는 울산시(28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임
 - 향후 노인 증가율을 보여주는 2022년 대비 2050년의 인천시 노인 증가율은 145.0%임 해당 증가율은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음

[그림 2-5] 7대 특·광역시 연도별 노인 수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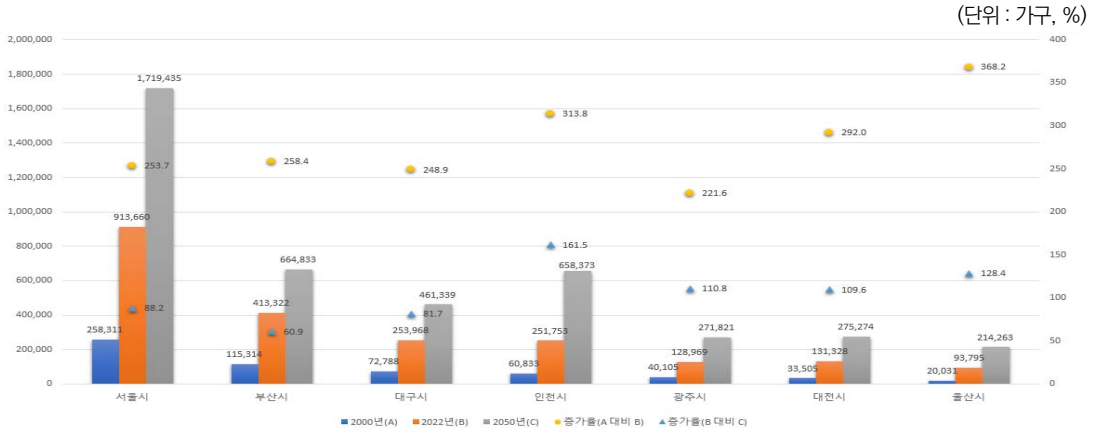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

3. 인천시 고령가구 현황 및 추이

-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음
- 인천시의 고령가구는 2022년 기준 약 252천 가구임. 이는 2000년의 약 61천 가구에서 313.8% 증가한 것으로 7개 특별 및 광역시 중 울산시(36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임
- 인천시의 고령가구는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50년 인천시의 고령가구는 약 658천 가구로 2022년 대비 16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7개 특별 및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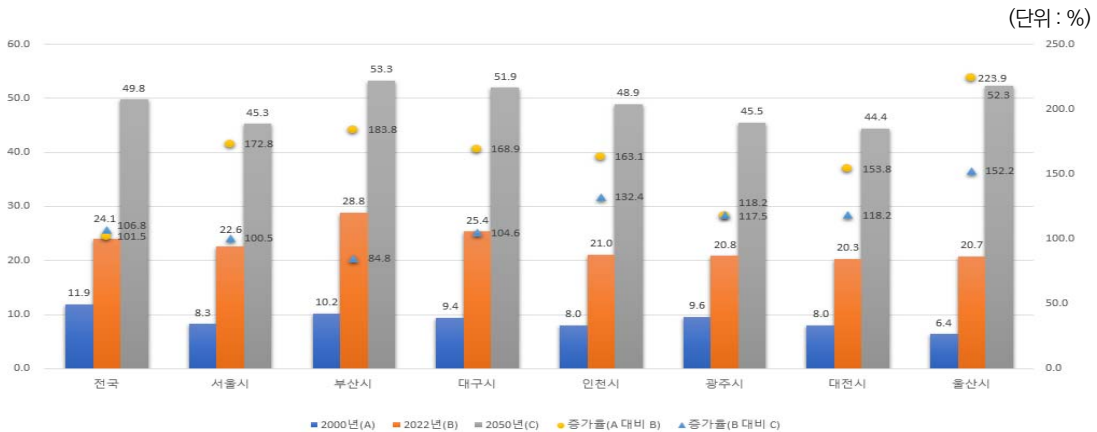
[그림 2-6] 7대 특·광역시 연도별 고령가구 및 증가율



자료: 통계청(2020a). 「장래가구추계」.

- [그림 2-7]은 고령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 도시별로 나타낸 것임
연도별로 인천시의 고령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8.0%, 2022년 21.0%, 2050년 48.9%로 고령가구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볼 수 있음
- 2000년 대비 2022년의 인천시 고령가구 비율의 증가율은 163.1%임 이는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높은 증가율은 아니며 그동안 인천시의 가구 구성이 고령가구보다는 비고령가구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줌
- 그러나 2022년 대비 2050년의 고령가구 비율의 증가율은 132.4%로 울산시(15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이는 향후 인천시의 급속한 고령화가 전망됨

[그림 2-7] 7대 특·광역시 연도별 고령가구 비율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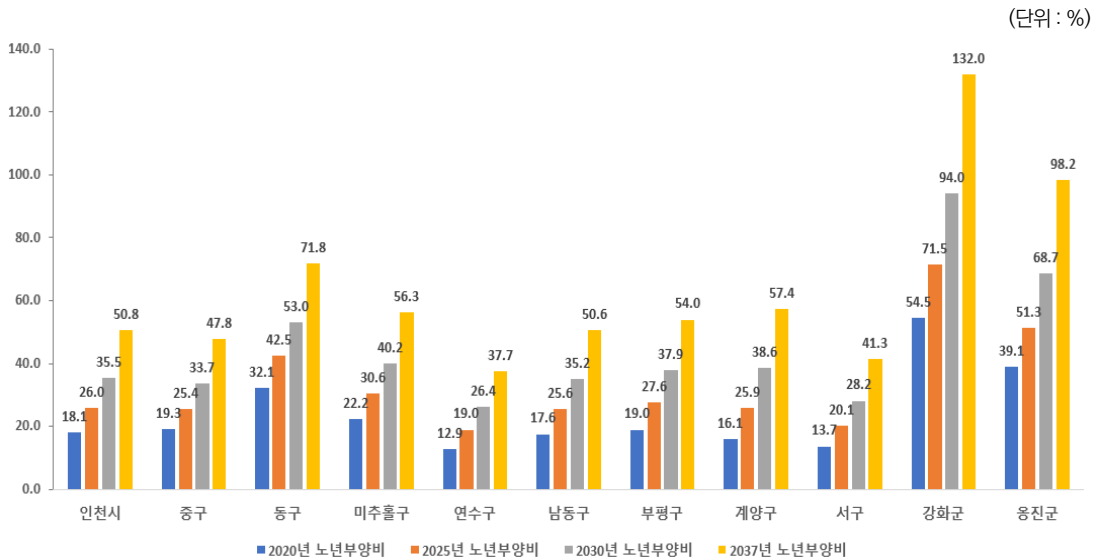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a). 「장래가구추계」.

4. 인천시 군·구별 노년부양비 현황 및 추이

- [그림 2-8]은 인천시 군·구별 노년부양비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임
- 2020년 기준 인천시의 노년부양비는 18.1%임 이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이 약 18.1명이라는 것을 의미함
- 2020년 기준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강화군(54.5%), 옹진군(39.1%), 동구(32.1%)의 노년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 2037년 역시 강화군이 132.0%의 가장 높은 노년부양비를 보여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이 119.3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옹진군(98.2%)과 동구(71.8%) 역시 높은 노년부양비가 예상됨

[그림 2-8] 인천시 군·구 연도별 노년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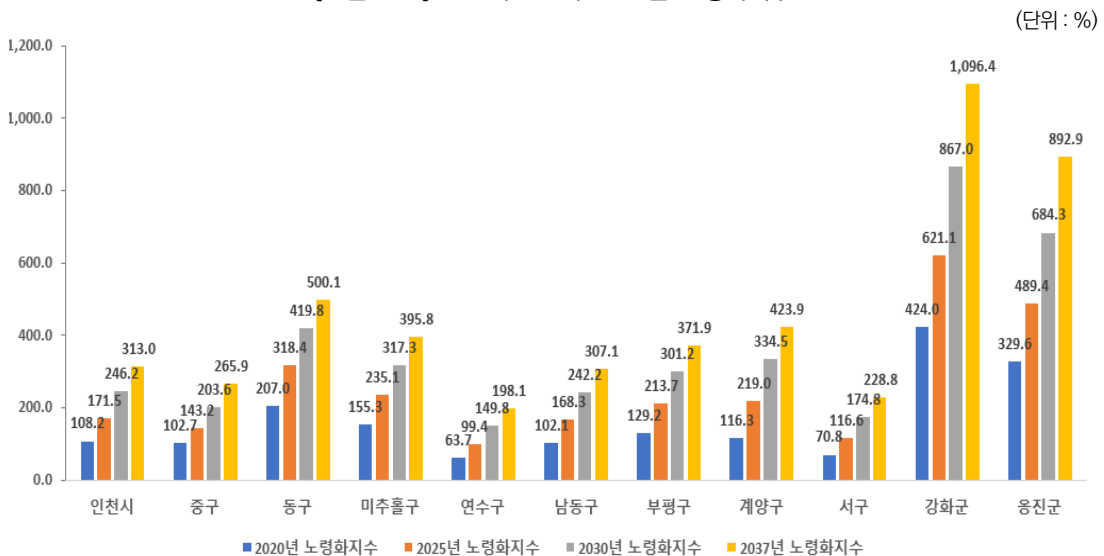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0b). 「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주 : 노년부양비=노인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100.

5. 인천시 군·구별 노령화지수 현황 및 추이

- [그림 2-9]는 인천시 군·구별 노령화지수를 연도별로 제시한 것임
-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0년 인천시의 노령화지수는 108.2%이고 2037년에는 313.0%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기준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강화군(424.0%)과 용진군(329.6%), 동구(207.0%)의 노령화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2037년은 강화군의 노령화지수가 1,096.4%로 가장 높고, 용진군과 동구가 각각 892.9%와 500.1%로 뒤를 이음 강화군의 경우에는 유소년 100명당 약 1,096명의 노인 수를 보여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그림 2-9] 인천시 군·구 연도별 노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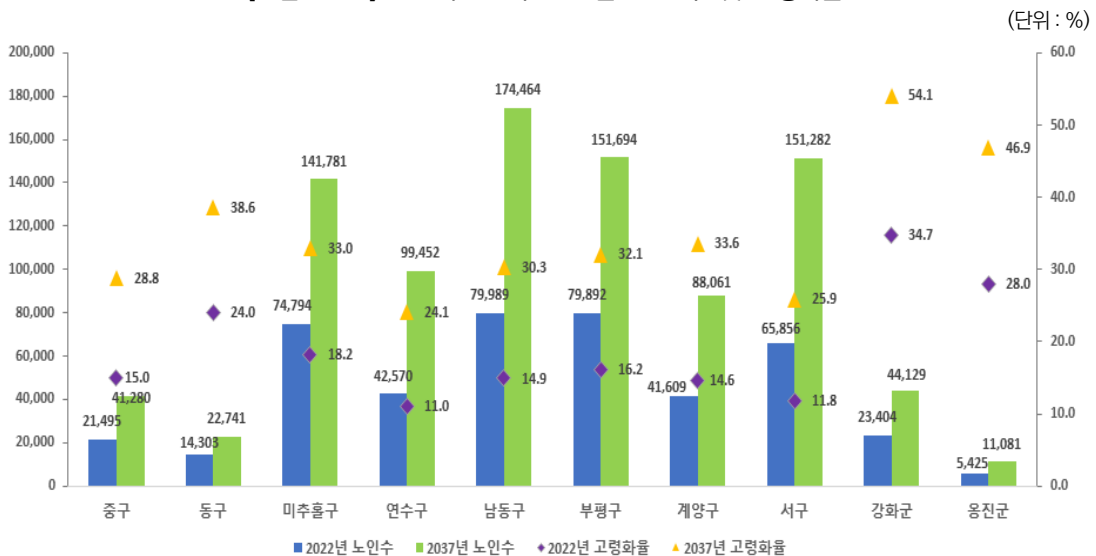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0b). 「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주 : 노령화지수=노인인구(65세 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6. 인천시 군·구별 노인 인구 및 고령화율 추이

- 인천시 군·구별 노인 수 및 고령화율 추이는 [그림 2-10]과 같음
- 2022년 인천시 10개 군·구 중 남동구(79,989명)와 부평구(79,892) 미추홀구(74,794명)의 노인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2037년 역시 남동구(174,464명)와 부평구(151,694명)의 노인 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 서구(151,282명)의 경우에는 2022년과 달리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고령화율은 2022년 기준으로 강화군(34.7%)과 옹진군(28.0%), 동구(24.0%)가 상대적으로 높고, 2037년 역시 세 곳의 고령화율이 10개 군·구 중 상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강화군 54.1%, 옹진군 46.9%, 동구 38.6%)
- 다만, 같은 기간 동안 계양구(130.1%)와 서구(119.5%), 연수구(119.1%)의 고령화율 증가율이 매우 높음

[그림 2-10] 인천시 군·구 연도별 노인 수 및 고령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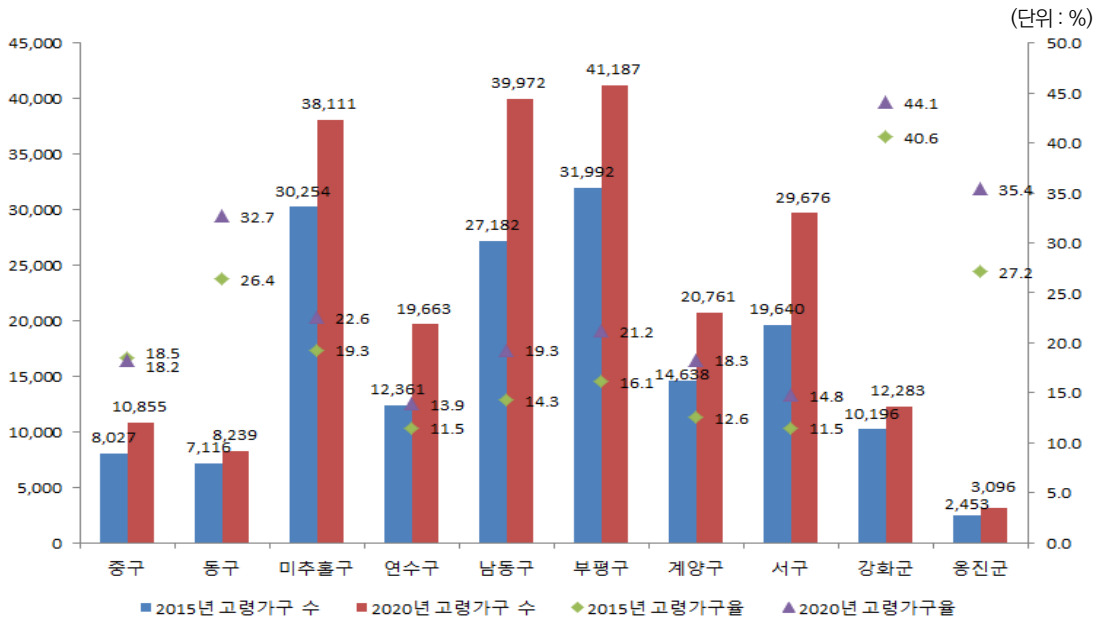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c). 「인천광역시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7. 인천시 군·구별 고령가구 현황

- [그림 2-11]은 노인 가구주로 구성된 가구 현황을 군·구별로 나타낸 것임
- 2020년 기준 고령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로 약 41천 가구이며, 남동구(약 40천 가구)와 미추홀구(약 38천 가구) 역시 높은 고령가구 수를 보임
- 2015년과 2020년의 고령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연수구(59.1%)와 서구(51.1%), 남동구(47.1%)의 고령가구 증가율이 10개 군·구 중 상대적으로 높음
- 2020년 기준 고령가구율은 강화군(44.1%)과 용진군(35.4%)과 동구(32.7%)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고령화율의 증가율은 계양구(45.2%)와 부평구(31.7%), 용진군(30.1%)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2-11] 인천시 군·구 연도별 고령가구 수 및 비율



자료: 통계청(2021). 「인구총조사」.

제2절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과정 및 현황

- 정부에서 수립한 고령정책 관련 기본계획 범위를 고려함과 동시에 인천시 정책 환경의 특성과 추진 가치 등을 반영한 고령정책을 수립함
- 저출산 대응 시민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사회 전반적 긍정적 가치관 부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함
- 인천시의 고령정책 추진 방향은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과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¹⁾

1) 기본 방향

- 추진배경 : 인천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비전 :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
- 목표 : 나이 들이 불안하지 않은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과 가족과 지역사회가 노인돌봄을 분담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환경 조성
- 추진전략 :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기본생활 안정화, 고령친화환경조성, 고령화 대책의 대상을 은퇴자나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 및 중장년까지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역적 자원의 전략 추진
- 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
 - 정부에서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 범위를 고려하여 제1차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2017년에 수립함
 - 정부 차원의 목표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위한 것이며, 인천은 안정적인 삶을 기초로 증가하는 고령인구가 사회적으로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지님

1) 인천광역시·육아정책연구소(2017).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수립.

- 정부는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확대, 여성고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고령자의 근로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것,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으로 성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는 만드는데 주력함. 인천시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대상을 폭넓게 하며 이질적인 형태가 아니라 생활에 근접하고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둠
- 아래 <표 2-5>는 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고령사회 분야에 관해 비교한 것임

<표 2-5> 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고령사회 분야)

구분	정부 제3차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	인천시 제1차 기본계획: 다 함께 플랜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
목표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노년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환경 조성
추진 전략	- 노후 소득보장 강화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 고령화 대책의 대상 확대 -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노인 기본생활 안정화, 고령친화 환경 조성
실행 기반	- 민간-지역-정부 협력으로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문화개선 대대적 확산 -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 인프라 확립	- 고령정책과의 기능 강화 - 고령화 대책 기금 조성 - 지역 고령자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정기 조사 실시 - 고령화 대책 홍보 강화 및 체계화

자료 : 권미애 외(2019),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연구 용역 보고서」, p.248-249.

2)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 정책과제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인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 노인부양·돌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 고령친화환경 조성

□ 세부과제

- 은퇴자 인생이모작 컨설팅 및 사회활동 연계서비스
- 인천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노후소득 설계
-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운영
- 독거노인가구 맞춤형 실버임대주택 사업 및 정기 생활지원 방문 서비스
- 노인 환자 부양 가구 특화 주거시설 개조 지원 사업
- 독거노인세대 생활지원 서비스
-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추가 장기 계획 사업)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6>과 같음

<표 2-6> 인천시 제1차 고령화 대책의 정책과제

비전	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노년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은퇴자 인생이모작 컨설팅 및 사회활동 연계 서비스 · 인천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노후소득 설계
		노인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환 경 조성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 은퇴자 인생이모작 컨설팅 및 사회활동 연계 서비스 ·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 독거노인세대 생활지원 서비스
		노인부양·돌봄· 일상생활지원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 독거노인가구 맞춤형 실버임대주택 사업 및 정기 생활지 원 방문 서비스 · 노인 환자 부양 가구 특화 주거시설 개조 지원 사업 · 독거노인세대 생활지원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조성	·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자료 : 이미화 외(2017).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p. 185를
참조하여 재구성.

2.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²⁾

1) 기본 방향

- 2019~2023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의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있어, 배경을 이루는 정부와 인천시의 기본계획 핵심 주제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할 공통 주제를 도출함. 아래 <표 2-7>은 정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 핵심 주제를 정리한 것임

<표 2-7> 정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 핵심 주제

구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정책로드맵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핵심주제	소득보장 신중년 지원 사회참여 건강과 돌봄 환경 노년기 기반	소득 준비 참여 건강 마무리	소득보장 건강 및 의료 사회활동 돌봄
공동주제	소득,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건강·의료 / 돌봄, 생애마무리		

자료: 권미애 외(2019).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연구 용역 보고서」, p.249.

- 인천시의 기본계획과 맞춰 도출한 핵심주제는 노후소득,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돌봄, 생애마무리로 총 5가지 영역을 제시함
- 수립방향
 - 준비하고, 리드하는 고령사회 예방적 정책
 -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환경 구축
 - 연령통합(세대통합) 도시 조성
 - 고령자의 재능과 경험이 선순환하는 사회공헌 구조
 -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고령사회 정책’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객관적 정책 수립의 타당성 제고
- 비전: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
- 목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2) 이하의 내용은 권미애 외(2019)의 자료를 참고함.

○ 추진기반

- 고령인구가 함께하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환경 조성
-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시민으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2) 정책과제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의 정책과제는 대과제와 중과제, 소과제로 구분됨

○ 대과제 (6과제)

- 노후 소득보장 강화
-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 통합돌봄의 강화
-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 중과제 : ‘노후소득 설계’,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스마트 Job 지원’,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기반 정비’의 16과제임

○ 소과제는 각 대과제와 중과제별로 36개로 구성됨

○ 각 과제를 정리하면 <표 2-8>과 같음

○ 두 가지 계획의 정책과제를 통해 그동안 인천시 고령정책의 방향이 크게 ‘소득 및 일자리’, ‘건강 및 돌봄’, ‘여가 및 사회참여’, ‘고령친화환경’에 맞추어져 왔음을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2016년과 2019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보건복지부, 2016; 2019)과 인천고령사회대응 중장기 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 자료(인천광역시, 2022)를 이용함

〈표 2-8〉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 체계도

비전	목표	정책과제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더 나은 고령사회 를 여는 인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후소득 설계	·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의 다양화 추진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	
			스마트 Job 지원	·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창업 지원 ·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구축 ·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제고	· 지역기반 노인적합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 인천효드림복지카드 도입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다변화 ·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통합 돌봄의 강화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 사물인터넷을 통한 안심안부 서비스 확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고령친화환 경 기반 조성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 고령운전자 스티커(실버마크) 부착 확산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 고령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 고령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

자료: 권미애 외(2019).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p.250-254를 이용하여 재구성.

3. 인천시 고령정책의 변화 및 현황

- 각 연도의 고령정책은 중앙정부의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인천시 2016년 고령정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대한민국정부, 2015)을 반영하고, 2019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과 수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9~2020)」(대한민국정부, 2019)의 영향을 받으며, 2022년 고령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대한민국정부, 2020)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의 2016년, 2019년, 2022년 주요 고령정책을 소득 및 일자리, 건강 및 지역 돌봄, 사회참여 및 학습, 고령친화환경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1) 2016년도 고령정책

- ‘소득 및 일자리’ 영역
 - 주요 정책 : 기초연금내실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
 - 2016년 인천시의 고령정책은 <표 2-9>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건강 및 돌봄’ 영역
 - 주요 정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노인건강진단, 치매센터 운영,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운영 등이 있음
 - 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들임. 제3차 기본계획은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과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치매 대응체계 강화,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노인안심생활 지원 등을 추진계획으로 제시함(대한민국정부, 2015)
- ‘여가 및 사회참여’ 영역
 - 주요 정책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과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노인여가문화 보급사업,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와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함(대한민국정부, 2015). 상기의 인천시 ‘여가 및 사회참여’ 사업은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고령친화환경’ 영역

- 주요 정책 :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됨
- ‘고령친화환경’ 영역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추진계획과 결을 같이 함. 동(同) 계획에서는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해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발굴 포상, 홍보 등을 통한 범사회적 효행장려 풍토 조성 등이 이야기됨(대한민국정부, 2015)

〈표 2-9〉 2016년도 인천시 영역별 주요 고령정책

영역	예산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소득 및 일자리(2) (공통2)	공통	기초연금내실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지급 65세 이상 70% 노인들 대상 지급
	공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시행
	공통	독거노인 보호 강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건강 및 돌봄(5) (공통2, 자체3)	공통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체	노인건강진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희망자 대상
	자체	치매센터 운영	치매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자체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운영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 지원
	공통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여가 및 사회참여(6) (공통1, 자체5)	자체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경로당 운영비 및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자체	노인자원봉사축제 참가지원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자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거리질서 계도, 환경정화, 청소년 선도, 아동지킴이 등
	자체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소규모 집단 경작지 조성 및 제공
고령친화환경(1) 자체(1)	자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어버이축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인천광역시편을 참조하여 재구성.

2) 2019년도 고령정책

- 2019년의 인천시 고령정책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2-10>과 같음
- ‘소득 및 일자리’ 영역
 - 주요 정책: 기초연금 내실화,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건강 및 돌봄’ 영역
 - 주요 정책: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등 치매환자 지원, 노인돌봄종합 및 기본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자살 예방사업,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등
 - 2016년에 비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함. 그러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중앙정부 추진에 의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여가 및 사회참여’ 영역
 - 주요 정책: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과 환경개선, 여가문화 보급,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 교육기회 확대 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추가
 - 사회참여 영역과 관련하여 수정된 제3차 기본계획이 기존의 제3차 기본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고령친화환경’ 영역
 - 주요 정책: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효문화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효문화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은 2016년과 동일하게 제3차 기본계획에 기반 한 것으로 보임. 한편,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2조의2에 기초함(법제처, 2021)

<표 2-10> 2019년도 인천시 영역별 주요 고령정책

영역	예산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소득 및 일자리(2) (공통2)	공통	기초연금 내실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대상 기초연금 지급
	공통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일자리 창출
건강 및 돌봄(15) (공통14, 자체1)	공통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공통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치매 국가책임제)	저소득 치매환자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영역	예산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공통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발견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족 교육 등
	공통	시립요양원 건립	치매전담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지원
	공통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장, 개보수, 신축 등 지원
	공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 등급 외(A,B) 대상 방문 및 주간보호
	공통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대상 수행인력 및 운영비 지원
	공통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1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1개소)
	공통	단기가사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 및 만 75세 이상 부부가구 대상
	공통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독거노인 고독, 자살 등 예방프로그램 인력 및 운영비 지원
	공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장비 점검 인력 및 운영비 지원
	공통	사할린 동포 입소시설 운영 지원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입소노인 시설운영비 지원
	공통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공통	노인자살 예방 적극적 대응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	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홀로 사는 어르신택 지능형 안심폰 구입·설치
여가 및 사회참여(8) (공통3, 자체5)	공통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공통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0세 이상 은퇴·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참여 수당, 활동실비
	공통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및 운영
	자체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경로당 운영비 및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자체	노인자원봉사축제 참가지원	노인자원봉사축제 참가를 위한 부대비용 지원
	자체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기반 조성	노인 자원봉사대 운영비 지원
	자체	고령자 여가 및 교육기회 확대	노인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고령친화환경(2) (자체2)	자체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
	자체	효문화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어버이날 등 경로행사, 효행장려센터 운영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인천광역시편을 참조하여 재구성.

3) 2022년도 고령정책

- 2022년의 인천시 고령정책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2-11>과 같음
- ‘소득 및 일자리’ 영역
 - 주요 정책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공통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크게 증가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계획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에 보다 구체화됨(대한민국정부, 2015; 2020). 이와 함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편, 퇴직 전문인력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이 추진계획으로 제시됨(대한민국정부, 2020)
- ‘건강 및 돌봄’ 영역
 - 주요 정책 : 방문건강서비스, 치매환자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 노인자살 예방 사업 등 (2019년과 동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었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과 응급안심서비스 사업이 새롭게 공통사업으로 추가됨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2017년 9월 중앙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도입됨. 이와 관련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에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대한민국정부, 2020).
- ‘여가 및 사회참여’ 영역
 - 주요 정책 : 경로당 지원 사업(공통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전환됨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증가하였고, 단순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사업에서 벗어나 연령통합적이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중범위적 사업이 새롭게 시도됨
 -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와 콘텐츠 개발,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교육 기반 확충 등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대한민국정부, 2015). 이와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를 위해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을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대한민국정부, 2020).

○ ‘고령친화환경’ 영역

- 주요 정책 : 고령자의 교통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사업(저상버스 도입 확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노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고령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고령사회 인식개선 등)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의 정책과제 하에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과 고령자이 교통복지기반구축 등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함(대한민국정부, 2020). 따라서 상기의 인천시 고령친화환경 조성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표 2-11〉 2022년도 인천시 영역별 주요 고령정책

영역	예산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소득 및 일자리(10) (공통4, 자체6)	공통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공통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노인일자리 제공(인건비, 부대비 지원)
	공통	영주귀국 사활린한인 특별생계비 지원	복지부재배정사업, 정착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공통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및 교육	실전창업 교육과정 운영 및 공간 지원
	자체	전문시니어 직업훈련 교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자체	市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市 노인인력개발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자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
	자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자체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지원	노인적합일자리 공모 및 선정기관 지원
건강 및 돌봄(32) (공통10, 자체22)	자체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교육사업	생애교육 및 진로설계를 통해 재취업 지원
	공통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예방, 조기진단 등 유기적 치매통합관리
	공통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치매 국가책임제)	저소득 치매환자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공통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공통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피후견인 및 후견인 발굴 및 활동 지원
	공통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
	공통	영주귀국 사활린한인 입소시설 운영 지원	사활린동포복지회관 입소노인 시설운영비 지원
	공통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신축, 개보수, 장비보장 등 지원
	공통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담, 교육 제공
	공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필요 취약노인 대상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영역	예산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여가 및 사회참여(24) (자체24)	공동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기관 호스피스 제공 및 사업 관련 교육
	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자체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이동진료	만성질환 노인 대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자체	독거노인 관리 사업	파스, 구강위생 용품 등 지원
	자체	거점 인지기강센터 운영	건강프로그램 지원, 쉼터 운영
	자체	저소득층 어르신 의료비 지원	보청기 구입비 및 개인 시술비 지원
	자체	인천 손은 약손사업	취약계층 무료수술 및 진료사업
	자체	뇌건강학교 운영	뇌건강 북카페 운영 및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자체	중증 치매노인 돌봄기법 도입	휴머니티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운영
	자체	도서지역 등 건강증진 사각지대 개선	웅진군 내 안저·안압검사 지원
	자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등급자)	기초수급자 등 시설이용비용 지원
	자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등외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자체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등급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시설이용비용 지원
	자체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등외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등급외자 비용 지원
	자체	개인(노인) 운영시설 지원 및 관리	개인(노인)운영 무료 및 실비 시설 보조금 지원
	자체	IoT 지능형 안심폰 보급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서 IoT 안심폰 보급 및 통신료 지원
	자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만 60세 이상 취약 고령자 무료급식 제공
	자체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배달 급식소 인력 지원	영양사 또는 조리사 인력 지원
	자체	재가노인 식사 배달	만 60세 이상 거동 불편 고령자 식사 배달
	자체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	쉼터 운영비 지원
	자체	저소득 독거노인 등 간병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자체	웰다잉 교육	존엄한 죽음 및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교육
	자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지원
	자체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안전한 활동지원	안전용품 및 계절용품 지원
	자체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만75세 이상 취약 고령자 복지카드 지원
	자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전용 사랑상품권 지급
	자체	장수노인 활동비 지원	1941년 이전 출생자 장수노인활동비 지급
	자체	50+ 지원단 운영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자체	고령자 여가 및 교육기회 확대	50세 이상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영역	예산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자체	활기찬 노후를 위한 백세누리 프로그램	세대격차 해소, 사회적응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자체	민간시설 활용 여가보급 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재료비 지원 등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 확대	디지털정보화교육 및 비대면 프로그램 신규 편성 및 확대 추진
	자체	개방형 경로당 사업	개방형 경로당 조성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자체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809개소)
	자체	어르신 행복 공동밥상 지원	조리 교육을 통한 공동조리 및 공동식사 지원
	자체	재무설계 교육 및 상담	재무설계 교육 및 생애설계 상담 실시
	자체	전문인재 양성(제2 경력개발 교육)	경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자체	생애설계교육	안정적인 노후생활대비 교육 지원
	자체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50+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자체	어르신 지역사회 참여 지원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교육 실시
	자체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지원	소규모 경작지 분양(이용료 무료)
	자체	5080 오팔청춘 선배학교 운영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및 일자리 활동 지원
	자체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사업	동별 경로당 선정, 특색사업 추진
	자체	50+세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기반 조성	전문적인 지원체계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자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지원	셔틀버스 운영비 및 운전원 인건비 지원
	자체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특강 운영	신중년을 위한 정보화교육 및 인문학 특강 운영
	자체	책으로 만나는 실버도우미 양성 및 활동 지원	만65세 이상 여성 대상 활동 지원
고령친화환경(9) (공통4, 자체5)	공통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
	공통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교통 및 도로 안전시설 설치, 교통사고 감소
	공통	자연친화적 장사 인프라 구축	장사시설(봉안당, 자연장지 등) 설치
	공통	어르신을 위한 행복버스 운영	취약 고령자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순환버스 운행
	자체	서비스(정보) 맵 제작	노후준비 관련 정보제공 책 제작
	자체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고령친화 가이드 개발 및 실행 연구비
	자체	노인 교통안전 교육	노인 대상 정기적 교통안전교육 실시
	자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고령사회 관련 연구 및 사업 운영
	자체	세대통합 사업	어버이날 등 기념행사 및 효행장려센터 운영

자료 : 인천광역시(2022). 「제1차 인천고령사회대응 중장기 계획(2019~2023) 2022년도 고령사회대응 시행계획(안)」, 재구성.

4) 시사점

- 인천시의 고령정책 변화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세대 진입에 따른 학력, 소득, 근로 능력 측면에서 노인집단의 다양화 및 특성 변화로 기존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 질적 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됨. ‘소득 및 일자리’ 영역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소득보장’ 측면에서 사회수당 등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보다는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고령세대 일자리의 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퇴직 후 경제활동 및 일정 수준의 소득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건강 및 돌봄’ 영역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인천시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됨. 2016년, 2019년은 상당수의 정책이 중앙정부와의 공동사업이었으나, 2022년에 들어서는 자체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음.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서지역 의료지원 사업과 인천시 공공보건 시스템을 이용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향후 공공의료원 확충 등을 통해 공공보건시스템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돌봄체계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가 및 사회참여’ 역시 사업이 크게 확대된 영역임. 고령세대의 특성이 과거의 노인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므로 이에 맞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해당 영역의 거의 대부분은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장년부터 고령정책의 대상에 포함하여 평생학습과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고령친화환경’은 과거 효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위주의 사업에서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편의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고령세대의 안전한 삶에 관심을 두는 사업이 활성화 됨. 또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령사회 관련 연구 및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연령을 뛰어넘는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
-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고령친화적인 주거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의 폭을 넓히고 있음. 고령친화 주거환경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개조 지원이나 주거모형 개발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3

국내·외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제1절 국내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제2절 해외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제1절 국내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1. 중앙정부의 고령정책 현황

1)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 2021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21.12) 발표에 의하면 국내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총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전망치였던 2029년에서 8년이나 단축 된 2021년 현실화 됨.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 내외의 감소폭 예측되며, 2030년에 5,120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총인구의 변화는 인구의 자연 증감(출생아 수 - 사망자 수)과 인구의 국제 순 이동으로 조사함. 통계청의 출생·사망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2020년 3만 2611명, 2021년 5만 7300명의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졌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혼인전수 대폭 감소와 국제 순유입 급감으로 총인구수가 감소세로 전환 됨
 - 합계출산율은 0.81, 조출생율(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1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함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축소사회의 도래,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의 단축이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기준 현재 3,737.9만 명이었으나 2025에 177만여 명이 감소한 3,561만 명, 2070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인 1,737만여 명으로 감소할 전망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국내 노동공급 감소와 경제규모 축소,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과 고령층, 외국인 등 인적자원 확보 및 양성 노력이 필요함
- 저출산 기조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기관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학령인구는 향후 20년간 최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2020년 기준), 따라서 교육기관의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혁신이 필요함
-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수도권 권역 광역시와 지방 거점도시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전망됨
 -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추월하였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소멸고위험 지역이 전체 228개 시군구의 47%인 108로 집계됨

- 지방 거점도시 개발과 지역 활성화를 통해 비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인구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 710만 명)가 고령층으로 편입됨에 따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세계에게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됨
-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자(75세이상)가 되는 2030년 이후를 대비한 의료와 돌봄서비스 등 후기고령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2) 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2022. 2.10)

- [논의분야] 2022년 2월 발표된 제4기 인구정책 TF의 주요 논의분야를 살펴보면 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인구구조 현황과 영향을 고려한 4개 분야를 정하여 분야별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음
- 1) 생산연령인구확충, 2)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3) 고령사회대비, 4) 초저출산대응의 4개 분야에 각각 하위 세부 논의 방향과 주제를 정하였음
- 먼저, 생산연령인구확충 분야는 기존의 전망 보다 악화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하여 여성, 외국인, 고령층, 생산성의 하위 세부 논의 방향을 정하였음
-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분야에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문제와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령인구, 병역자원, 지역소멸대응으로 하위 세부 논의 방향을 정하였음
- 고령사회대비 분야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른 고령층 인구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 의료와 돌봄, 노후소득, 제도 및 인프라의 세부 논의 방향을 정하였음
- 초저출산대응 분야는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악화된 저출산 기조를 수년 이내에 반등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산율 지원방안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 방향을 세웠음
- [대응시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대응시기를 구분하고,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제시
- 단기 대응으로 분류한 분야는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충격을 시급히 대응할 분야로 5년 내 대응이 필요한 분야가 해당됨

- 중기는 10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분야로, 지금부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야가 해당됨
 - 장기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10년 이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개혁 등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련해야 하는 분야임
- 제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의 논의분야와 대응 시기에 관한 내용은 <표 3-1>과 같음

〈표 3-1〉 제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대응 강화			
현황·영향	4대 분야 및 3단계 대응시기 구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① 생산연령인구 확충	여성	단기: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외국인	단기: 외국인력 활용 강화
		고령층	단기 + 중기: 고령자 고용 활성화
		생산성	단기: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질적 보완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②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	학령인구	단기: 학령인구 감소 대응
지역소멸		병역자원	단기: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소멸대응	중기: 지역소멸 대응
베이비붐세대 고령층(65세) 진입	③ 고령사회 대비	재정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베이비붐세대 초고령층(75세) 진입		의료·돌봄	장기: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확충
		노후소득보장	장기: 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령친화 제도·인프라	장기: 고령층 진화 제도·인프라 개선
저출산 장기화	④ 초저출산 대응	지원강화 및 환경조성	단기: 초저출산 대응

자료: 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 합동(2022).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을 참고하여 작성됨.

- 분야별 추진방향 앞서 살펴본 4개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중에서 고령자 관련 중점 논의과제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음
- 먼저 논의분야 1의 생산연령인구 확충에서는 그간 고령층의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와 고용연장 기반마련, 기업의 고령자 지원 강화 등의 기존의 주요 대책과 더불어 새롭게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의 추진과 고용·임금체계의 유연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경사노위 연구회 운영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 또한, 고령자 연령계층별 차별화된 고용활성화

-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의 개선과, 취업정보 확대 방안 등 고령자 고용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방안을 계획 중
- 논의분야 2의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의 하위분야인 지역소멸대응 분야에서 초광역권의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와 수도권 의 인구와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지원으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도시와 지역 간 매칭과 협력 등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책을 논의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통해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함
 - 논의분야 3 고령사회 대비 분야에서는 먼저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대책을 고심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국민연금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 건강보험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사전적 질병예방을 통해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고령층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확충 분야에서는 고령층의 필요도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연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AI와 IT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공급능력을 혁신시키는 방안을 논의함.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방안으로는 노인돌봄분야 요양과 간호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양성체계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간 기능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서비스의 조정 및 연계방안 마련 등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적정 서비스 규모 유지 방안을 제시함
 - 노후소득보장 분야에서 논의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 및 확대, 운용수익률의 향상방안,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책 등을 논의함. 다음으로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이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은퇴 후 노령층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고령친화 제도와 인프라 개선 분야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주거와 교통, 사회참여 분야와 문화 분야 등 고령자 복지정책에 대한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방향 검토를 제시함.

이를 위해 고령층 통계산출에서 연령을 세분화 하여, 세분화된 연령계층별로 복지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에 따른 고령친화 비즈니스의 성장을 예상하여 제품과 서비스 등 수요 발굴과 체계적 육성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시함

〈표 3-2〉 제4기 인구정책 TF 분야별 세부 논의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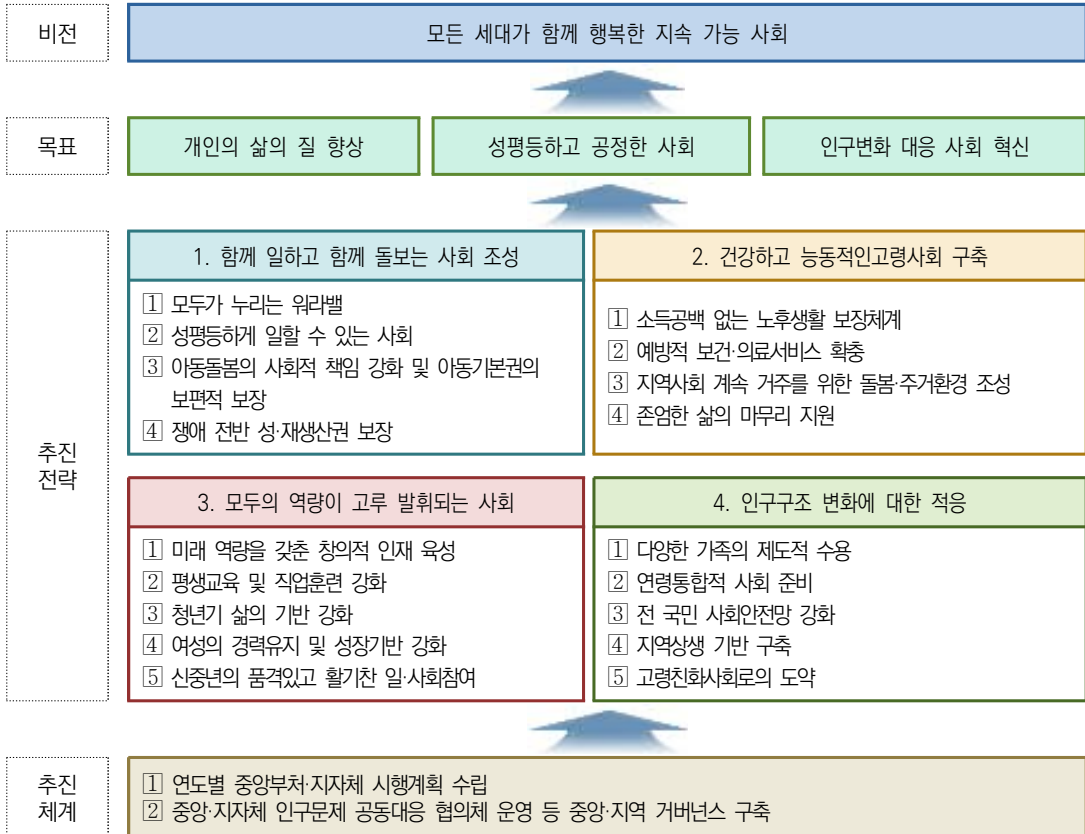
제4기 인구정책 TF 분야별 논의과제		
① 생산연령인구 확충	여성	- 해당사항없음
	외국인	- 해당사항없음
	고령층	- 고령자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고용·임금체계 유연화 등 제도개선 통한 사전 준비 방안 - 고령자 연령계층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고용활성화 -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하여 취업정보 확대, 직업훈련의 개선, 고령자 고용관련 인프라를 확충
	생산성	- 해당사항없음
②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	학령인구	- 해당사항없음
	병역자원	- 해당사항없음
	지역소멸 대응	- 초광역권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 - 소멸위험지역의 자립역량 강화 방안 -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다극체제로의 전환 등 중장기 대응전략
③ 고령사회 대비	재정	-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요인관리 -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 수요 사전 억제 방안 - 인구구조 변화 고려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의료·돌봄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의료·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확충 방안 - 중앙·지자체 연계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 적정 서비스 규모 유지 방안 마련 - AI와 IT 신기술을 통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공급능력 혁신
	노후소득보장	-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등 노령층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 확대, 공적연금 보완 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고령친화 제도·인프라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참여·주거·문화·교통 분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층적·장기적 방향 검토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육성지원
④ 초저출산 대응	지원강화 및 환경조성	- 해당사항없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 합동(2022).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을 참고하여 작성됨.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그림 3-1]와 같음

[그림 3-1]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참고 작성.

○ 2022년도 시행계획의 정책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①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강화 ② 전 세대의 삶의 질 개선 지원 ③ 사회시스템의 탄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④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추진기반 강화로 분류됨[그림 3-2]

-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② 전 세대의 삶의 질 개선 지원방안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하였고 (2022년 6천명), 노인일자리 확대 (2022년 84.5만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 사업 추진함.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지원 사업 등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전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상병수당의 시범사업도 도입하였음.

- ③ 사회시스템의 탄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였음. 2022년에서 2031년까지 연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그 비전으로 책정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함. 추진전략은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②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③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4개 분야별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과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4대 추진전략 중 특히 고령화 관련 정책으로는 ②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전략이 제시되어 있으며,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 돌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조성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별 핵심 과제를 구성하고 있음

[그림 3-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별 핵심 과제

전략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중요한 핵심 과제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노인 빈곤 완화 ·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방문형 건강관리 활성화 · 치매노인·가족 종합관리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제고 ·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이용 유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및 교통복지기반구축 ·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 20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4개의 추진전략에 전체 예산(지방비 포함) 전년 대비 6.2조원이 증가한 78.9조원으로 책정됨<표 3-3>

- 추진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으로는 1.1조원 증액하여 영아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부모 육아휴직 활성화와 아동수당 연명확대 예산, 다자녀국가장학금 등 예산을 확대하여 전 년기준(2021년) 1.8조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 추진전략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서는 기초연금(1.1조 증가)과 노인일자리의 확대(0.21조 증가)부분의 예산이 증가되었음
- 추진전략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예산으로는 그린스마트 스쿨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도입하는 사업 예산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음
- 추진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는 1조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표 3-3〉 2022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조원)

추진전략	2022년 예산(비율)	2021년 예산(비율)
1 함께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39.6(50.2%)	36.6(50.3%)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4.2(30.8%)	23.5(32.4%)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0.1(12.8%)	9.7(13.3%)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9(6.2%)	2.9(4.0%)
합계	78.9(100%)	72.7(100%)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 국제표준인 OECD예산분류기준을 활용하여 가족, 노인, 주거, 고용, 교육, 보건, 기타의 7개의 정책분야로 2022년 시행계획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55.4%가 주거분야와 노인분야에 책정되어있음. 전년 대비하여 증액된 예산의 증가분 대부분이 교육과 가족분야에서 발생되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낮음.〈표 3-4〉

〈표 3-4〉 2022년 시행계획 정책대상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계	가족*	노인*	주거	고용	교육	보건	기타
2022년	789,348	192,444	200,392	237,087	83,029	38,759	6,852	30,785
	100%	24.4%	25.4%	30.0%	10.5%	4.9%	0.9%	3.9%
2021년	726,799	179,874	189,095	232,197	92,872	8,533	6,081	18,146
	100%	24.7%	26.0%	31.9%	12.8%	1.2%	0.8%	2.5%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 가족과 노인은 OECD SOCX 분류기준에 따른 예산 분류.

- 2022년 시행계획의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 중 중장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이 있고,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고령자 복지주택 및 주택개조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음
- 추진전략 분야별 중점과제 중 고령화정책 관련 과제의 세부 내용은 <표 3-5>와 같음
 - 추진전략 2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노년세대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형 신규일자리 모델 개발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확대,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강화와 고령친화 금융환경을 구축하여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를 마련코자 함.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를 활용한 방문형 건강관리 방법의 활성화,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종합관리를 통해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지원코자 함.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통합 돌봄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거지원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 사업을 마련하였음. 마지막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및 전문기관 확충, 웰다잉 기반 구축을 위한 생애말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코자 함
 - 추진전략 3의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의 중점과제에서는 평생교육과 직업 훈련 강화를 목표로 이러닝을 비롯한 스마트 플랫폼을 고도화시켜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성인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계속고용 지원사업과 전직·재취업 지원사업, 사회참여·여가 등 분야에서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음
 - 추진전략 4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에서는 연령통합적사회 준비를 위한 관련 지표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정착 유도를 중점과제로 제시함.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ICT 스마트 케어 기술개발 및 보급, 스마트 재활 제품과 건강관리 제품 개발 추진을 통해 고령친화사업지원책을 제시함

〈표 3-5〉 2022 추진전략 분야별 고령 관련 중점과제

추진전략 분야	관련 중점과제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해당사항 없음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①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노인빈곤 완화] -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노년세대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형의 신규일자리 모델 개발, 민간형 일자리 비중확대 (전체 노인일자리 중 민간형 일자리 비중 : 21년 18.3%→22년 19.8%)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기준 완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활성화 등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 - 수탁 가능한 재산범위의 확대, 고령층 대상 신탁서비스 출현 유도 등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②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 사업 참여 전·후의 검진결과와 진료기록을 비교하여 건강생활 실천(걷기, 건강교육 참여 등), 건강결과(혈압, 혈당 등)를 평가해 건강포인트 적립 -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혈압, 당뇨병자를 종합관리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22년 하반기) [방문형 건강관리 활성화]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확대 - 거동 불편 환자 대상의 일차의료 방문 진료 시범사업 [치매 노인·가족 종합관리] -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을 지속하며, 가족 상담수가 도입을 추진함 - 조기진단과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속지원하고,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주거환경 조성 [통합돌봄 기반마련] -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추진 [주거지원] -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주택공급 (1천호 지원 계획)과 주택개조(1.9만 호 지원 계획) 지원 사업 - 중산층 고령자의 주택수요와, 건강관리·돌봄·요양 등의 복합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고령자 서비스 연계주택 모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공공형 택시와 버스, 군 단위 지역 소형버스 및 100원 택시 운행 지원(82개 군 단위 지역) ④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상담사 육성 지원, 연명의료

추진전략 분야	관련 중점과제
	결정 관련 건강보험수가 적용(22년 1월), 의료기관 정기 사업설명회 등 개최 [호스피스 서비스] - 호스피스 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및 전문기관의 확충, 지역 권역센터(10개소)를 활용한 지역 병상 모니터링 [웰다잉 기반 구축] - 경로당과 복지관을 활용하여 '생애말기 교육프로그램' 제공, 사전장례의향서 및 유언장 작성 문화 확산 추진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접근성 제고] - 이러닝, 가상훈련 등 비대면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 [평생교육] - 저소득층 성인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지원 [직업훈련] - 코딩·빅데이터·메타버스 등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계속고용 지원] - 희망은퇴 연령까지 계속고용 유도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도입,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 직무평가도구 보급, 직무중심 기업 임금체계 개편지원,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등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지원 [전직·재취업 지원] - 만50세 이상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 대상 인건비 지원, 퇴직예정자 대산의 전직지원 서비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회참여·여가 등] - 고령자 맞춤형 여행 문화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퇴직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형 일일 제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제도개선] - 고용과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제도 전반에 존재하는 연령주의 문제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지표개발] - 우리사회의 분야별 연령통합 수준 진단과 평가가 가능한 종합적 연령통합지표 개발의 추진 ④ 지역 상생 기반 구축 [지역정착유도] - 지역 문화 특성 연계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지원 사업 - 농촌 살아보기 사업 지원 확대 - 부처 공모사업의 가점, 할당량 부여, 지방소멸대응기금중성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사회시스템] - 장래인구추계를 고려하여 교원, 장병, 주거 계획(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등 '23~'32) 수립

추진전략 분야	관련 중점과제
	[재정안정화] -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를 추진하는 등 사회보험 보장성과 지출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고령친화산업] -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의 재정립, 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51억), ICT 스마트 케어 기술이나 재활, 건강관리 제품 개발 지원(49억) 등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품 및 기술 개발 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2년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작성됨.

2. 타 시·도의 고령사회 정책 현황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2022년 시행계획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보건복지부, 2022)은 총 사업비 규모 8.45조원(순지방비)으로 2021년 전년 대비 약 0.98조원 증가하였으며 총 과제 수는 6,718개로 집계됨. 사업은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음. 국비보조사업인 공통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6.0%증가한 41.5조원으로 울산과 충북 이외 모든 지자체에서 전년대비 증가폭을 보였음. 울산(3.4% 감소)의 경우 사업 및 예산 규모가 작아 변동률이 높고, 충북(0.01% 감소)의 경우 감소폭이 미미함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추진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이 전체 예산의 43%,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사업에 전체 예산의 29%가 투입될 예정임. 각 추진 분야별 예산과 과제 수는 <표 3-6>과 같음

<표 3-6>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분야별 현황

(단위 : 억원, 건, %)

추진 분야	예산	과제 수
총계	84,494 (100%)	6,718 (100%)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36,711 (43%)	3,097 (46%)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4,202 (29%)	1,264 (19%)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21,800 (26%)	1,560 (23%)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775 (2%)	797 (12%)

자료 :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 7대 특·광역시 고령사회 정책현황

- <표 3-7>에서는 제4차 기본계획 2022년 지자체별 시행계획 중 7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고령화 현황 및 자체사업 중심의 고령사회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음
- 2021년 12월 31일 인구 기준 서울과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나타낸 지역은 부산시(20.3%)이며, 다음으로 대구(17.5%)로 나타남. 2022년 예산책정 비용은 서울시가 전체 예산 7조 9,576억, 자체사업예산 6,582억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각각 5조 1,064억, 6,435억), 인천시(4조 4,516억, 7,853억) 등 순으로 나타남

<표 3-7>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고령사회 정책현황³⁾

구분 (고령화율)	분야별 주요 사업		2022년 예산 (자체사업)
서울 (16.8%)	고령사회 구축	·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제공서비스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으로 고독서 방지 (예산 8,060만원)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만 60세 이상 한의약적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7,500만원)	7조 9,576억원 (6,582억원)
	역량발휘	· 시니어합창단 : 만 56세~75세 남녀, (주1회 연습, 연1회 정기공연 지원, 3,100만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공원지킴이: 공원관리에 고령자일자리 결합 (30,200만원) ·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세대 공감 공모사업 :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세대 통합/ 치매 등 돌봄 필요한 고령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환경구축 등 사업 발굴 지원 (10,000만원)	
부산 (20.3%)	고령사회 구축	·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 사업 (320,000만원) ·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운영 : 1인 독거노인에 대한 대안가족 및 협동조합 형성지원 (30,000만원)	5조 1,064억원 (6,435억원)
	역량발휘	· 중장년층 취업지원 경비원 양성사업 : 경비원 업종 취업 필수교육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지원 (600만원) · 50+인생학교 운영 : 중장년층을 위한 노후준비 프로그램(1,200만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독거어르신 스마트돌봄 시콜백서비스 : 독거어르신 세대에 시콜백서비스를 실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930만원)	
대구 (17.5%)	고령사회 구축	· 시니어클럽운영 :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지원(구군 8개소, 260,700만원) · 100세이상 노인 부양지원금 지원 (500만원) ·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지원 : 만65세 취약계층, 독거노인 대상, 혹한기 및 폭염기 긴급물품지원 사업(32,000만원)	2조 5,236억원 (5,840억원)
	역량발휘	· 핵심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 기업 중장년 핵심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38명, 58,000만원)	

3) 제4차 기본계획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고령화율이 2장의 통계청 수치와 상이함.

구분 (고령화율)	분야별 주요 사업		2022년 예산 (자체사업)
인천 (14.6%)	고령사회 구축	·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사업 : 인천 동구 거주 만75세 이상자에게 목욕탕 및 이미용실 상품권 12만원 지급 (79,800만원) · 장수노인활동비 지급 : 인천시 거주 1941년이후 출생자 대상 (55,800만원)	4조 4,516억원 (7,853억원)
	역량발휘	· 활기찬 노후를 위한 백세누리 프로그램 (8,400만원) · 찾아가는 육아코칭 활동가 양성사업 : 50~60 경력단절 여성 대상 육아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11,000만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 3세대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원 사업 (33,000만원) · 효행수당 : 만70세 이상 부양하는 4대 이상에게 월 10만원 부양수당 지급 (500만원)	
광주 (14.8%)	고령사회 구축	· 소득공백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578,800만원) · 빛고를 효령노인타운 운영(900,000만원) · 만성질환 건강지킴이 교실 (100만원)	8,709억원 (1,943억원)
	역량발휘	· 빛고를 50+ 일자리사업 (70,000만원)	
대전 (15.2%)	고령사회 구축	·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11,800만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 대상 60세 이상자 (223,800만원) · 시니어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취업과 봉사활동, 건강문화 프로그램 제공 (9,000만원)	1조 5,006억원 (2,538억원)
	역량발휘	· 5060 청춘대학 운영 : 인생설계 및 일자리 교육(4,600만원)	
	인구구조 변화대응	· 인구정책 문화공간 팝콘플레이스 조성 :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 공간 조성 (7,000만원)	
울산 (12.6%)	고령사회 구축	· 노인운동경기대회 참가지원 (3,000만원) · 어르신 영화보러가는날 운영 : 만65세이상 관내 거주자 대상 (1,100만원)	9,381억원 (623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2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참조하여 정리.

○ 서울시 고령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 0.64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고령화율은 16.8%(2021년 12월 기준), 기대수명 84.8세(2021년 12월 기준)로 전국 평균인 83.2세를 상회하고 있음

- 서울시 고령사회 정책의 목표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의 실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각적인 예방형·맞춤형 의료와 보건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 취약 고령자에 대한 스마트 돌봄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구축과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세 가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부산시는 2015년 2월 전국의 특·광역시 중 최초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1년 9월에 역시 전국 7대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현재(2021년 12월 기준) 부산시의 고령화율은 20.3%를 나타내고 있음. 부산시는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세대 진입으로 고령화의 가속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부산의 경우 2006년부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으며, 20~40대 여성 인구의 비율이 19.6%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음
- 대구의 2021년 고령화율은 17.5%로 나타남. 2004년에 고령화율 7.38%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화율 14.04%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인구구조 현황에서 단순히 고령화율만 놓고 보면 대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17.1%)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구시 구·군별 고령화 편차가 심하여 이미 중구, 동구, 서구, 남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임
 - 대구시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7명으로 0명대로 떨어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0년 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0.84) 대비 낮은 수치임.
 - 대구시는 2022년도 고령화 관련 중점시책으로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사랑방에서 개방형 커뮤니티공간으로 전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운영 활성화 사업,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편성함
- 광주는 2020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21년 기준 고령화율 14.8%를 기록하였음. 시 전체의 고령화율과 달리, 지역 내 고령화율 편차가 큰 편으로 동구의 경우 이미 201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1년 현재 고령화율 21.9%를 나타내고 있음. 광산구의 고령화율은 21년 기준 9.9%에 불과함.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1명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 년 동기 대비 출생아수가 10.2% 증가하며, 2021년 3분기의 합계출산율이 0.9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생율이 증가하였음
 - 광주의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8년 38.4%에서 2021년 41.1%로 증가하고 있음. 기초생활수급자현황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1년 기준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24.0%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광주의 독거노인가구 역시 2018년의 23.4%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29.9%를 나타냄.
 - 최근 5년간의 고령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광주에서는 연령, 건강, 소득, 욕구 수준 등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 전 영역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고령사회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역별 복지서비스 이용 격차와 불균형을 포착하여 수요에 기반한 노인복지시설의 단계적 확충을 마련하기로 함

- 울산은 2020년 기준 고령화율 12.6%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지역이나 울산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9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처음으로 1명대 미만인 0.98명을 기록함. 유소년과 학령인구,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본격적인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구조 변화가 전망됨
- 특히, 젊은 도시 울산을 이끌던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통계청에 의하면 울산의 고령사회 진입은 2023년,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8년으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됨. 신중년·고령자를 위한 경제활동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로 인한 노인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자 수, 치매환자 수의 지속 증가는 돌봄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울산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한 울산’을 2022년 고령사회 정책의 추진목표로 제안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정하였음. 세부 역점 시책으로는 스마트 돌봄 인형 지원 사업, 은빛 세대 디지털 라이프 지원 사업, 신중년 활력 PLUS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 생애설계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국내 초고령 사회 정책 사례 분석

1) 전북 정읍시⁴⁾

□ 추진 배경

- 정읍시는 2014년 노인인구 비율 26%로 초고령사회 진입함. 지역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과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함

4) 이하의 내용은 박진경 외 (2020)의 자료를 참고함.

- 생애주기 관점에서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는 포괄적 도시환경 조성을 추구하며 세대 통합 차원의 접근으로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함.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고 그들의 욕구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하며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참여 활동을 증진하고자 함
- 2014년 정읍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함

□ 추진경과

- 2014.02. WHO의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기반으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계획 수립
- 2014.12.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 2015. 생애맞춤형 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연구 워크숍 실시
- 2016.02. 실행계획 수립 최종보고, 2016년 9월 고령친화사업단 구성
- 2016.11. 고령친화사업단 노인상담사 양성(100명)
- 2016.12. 고령친화만족도 조사(평균 2.38, 2014년 대비 0.17점 상승)
- 2018. 정읍시 고령친화도시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최종점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부터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추진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의 개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WHO, 2007)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의 목표
 -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개발 계획, 정책 접근 방안 제공
 - ② 가입 도시들 간 교류
 - ③ 모범사례 소개 및 정보 공유
 - ④ 참여 도시들 간 개발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비용효과성 점검 및 평가
- WHO(2007) 고령친화도시 구성요소 : 3개 분야, 8대 영역
 - ▶ 물리적 환경 : 1) 외부환경 및 시설, 2) 교통, 3) 주거
 - ▶ 사회·문화·경제적 환경 : 4) 여가 및 사회활동, 5) 존중 및 사회통합, 6) 고용 및 사회공헌
 - ▶ 정보화·지역사회 보건 : 7) 의사소통 및 정보, 8)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제고 ·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 고령자의 가족, 사회, 문화, 종교, 여가활동 접근성 제고 · 행정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교통 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및 편의 환경 구축 · 고령자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고령자 이미지를 향상할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 지역사회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주거 환경 안정성 (Housing) ·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비용 및 공공 설계 ·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실현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 정보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인적 자원의 활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의 확대 ·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건강 및 지역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자료 : 고령친화서울 홈페이지(http://afc.welfare.seoul.kr/afc/index_new.do).

•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제주를 비롯하여 6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북 정읍시, 부천시, 충남 논산시 등 29개 지자체가 가입 완료됨(2021. 04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북 정읍시가 2014년에 가장 먼저 가입했으며, 경기 수원시, 부천시, 광주 동구, 충남 논산시 등이 가입되어 있음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2010). 「WHO 세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전략」. 참조하여 재구성.

□ 추진방향

- 미션 :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가족 공동체, 생애맞춤형(복지)도시, Age-friendly City 정읍!
-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도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도시 조성
- 비전 : 지속 거주, 활기찬 노후, 고령친화 공감공동체
- 핵심가치 : 행복과 편의성, 참여와 활동성, 화합과 자율성, 도전과 독립성
- 추진전략 :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 고령친화사회 환경 조성, 고령친화 프로그램 관리 및 변화 유도
- 목표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 생동감 있는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 공존 위한 품격 높은 배려와 존중, 소통 기반 조성
-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역지원과 보건의 복지 기반 조성

□ 추진영역

- 정읍시 고령친화도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 지역지원/건강 서비스 환경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표 3-8〉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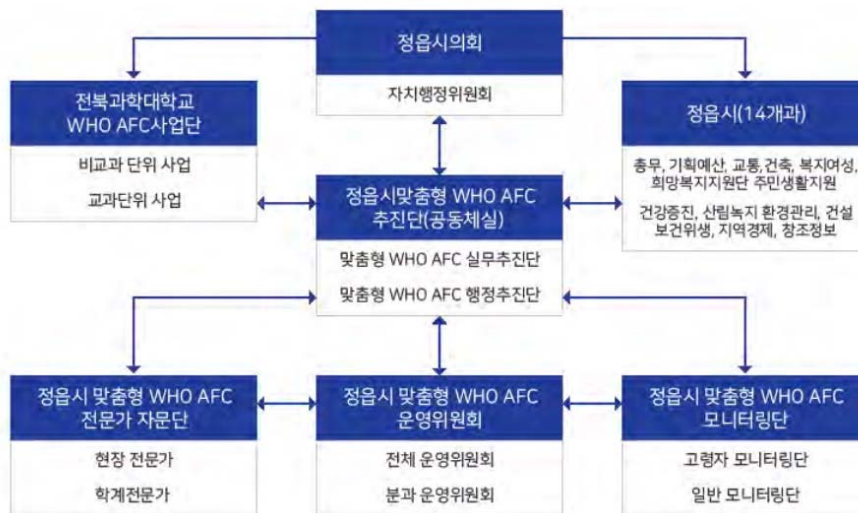
물리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	지역지원/건강 서비스 환경
• 외부공간, 빌딩 • 교통 • 주거, 주택	• 사회참여 • 존중, 사회통합 • 시민참여, 고용 • 평생교육 • 다문화	• 의사소통, 정보 • 지역사회지원, 보건

자료 :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161.

□ 추진체계

- [그림 3-3]은 정읍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를 도식화한 것임
- 정읍시 맞춤형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단이 중심 역할을 하고 정읍시의회, 전북과학대학교 WHO AFC 사업단, 정읍시 14개 부처, 전문 자문단, 운영위원회 및 모니터링단이 참여함

[그림 3-3]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자료 :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161.

□ 주요사업

- 도시환경 : 주요 실행 사업으로 고령친화 비즈니스, 공중화장실과 공원관리, 쓰레기 분리수거/분뇨냄새, 도로 안전성 관련 사업 등이 있음

〈표 3-9〉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도시환경영역 주요 실행 사업

영역	실행과제
고령친화비즈니스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매뉴얼 개발 - 고령친화병원 인증제 도입
공중화장실 및 공원	- 공중화장실 관리원 배치-유급직원 - 공공화장실 및 공원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교육 - 공원관리원 배치-유급직원 - 시민자율공원관리위원회 활동 강화
환경	- 농촌지역 마을단위 분리수거대 설치 및 주민교육 강화 - 악취측정기구 구비 및 악취제거 모니터링단 운영/활성화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권역별 추가설치(5개)
도로	- 도시지역 고령자 밀집지역에 고령친화 보행자 표지판 설치 - 교차로 주의 운전(반사경, STOP사인) 설치 - 도로 및 승강장에 쉼 의자 설치 - 고령친화도로(산책로) 정비(코코넛 매트) -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 재정비

자료 : 박진경 외(2020).「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주거 및 주택/교통 : 고령친화적 주거/주택, 경로당/마을회관, 고령자 주거지원과 관련된 실행과제가 도출됨

〈표 3-10〉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주거영역 주요 사업(안)

영역	실행과제
고령친화적 주거/주택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거주주택의 안전도 점검 시행 - 고령친화주택 개조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도입 및 확대 - 노후주택 수리사업을 고령친화 주택으로 유도
경로당/마을회관	- 경로당 유형화 사업(cafe형, 숙박형, 일자리형) - 경로당 평가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고령자 주거지원	- 주거지원서비스 지원금 단계적 확대 - 고령자 주거지원센터 설립

자료 : 박진경 외(2020).「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교통 : 신호등/교통안전, 승강장/교통정보, 교통안전교육, 오지교통/버스배차와 관련된 실행과제가 도출됨

〈표 3-11〉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교통영역 주요 사업(안)

영역	실행과제
신호등/교통안전	• 카운트 신호등 또는 숫자 신호등으로 교체 • 횡단보도 입구에 칼라 야간형광 스티커 설치(야간) •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승강장/교통정보	• 버스승강장에 탑승유도 승차플랫폼 설치 • 대중교통(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교통안전교육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고령자전거 이용자 수신호 교육
오지교통/버스배차	• 고령자 개별가정 및 방문시설(경로당, 미용실, 슈퍼 등) 대중교통 시간표 배포 및 부착 • 복지택시 증차

자료 :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참여 : 고령자 자원봉사, 고령자 중심 프로그램, 농촌지역 프로그램, 홍보관 규제 영역 관련 사업이 실행중임

〈표 3-12〉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사회참여영역 주요 사업(안)

영역	실행과제
고령자 자원봉사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고령자 자원봉사교육 강화 • 전문분야별 동아리조직 구성 및 자원봉사 활동연계
고령자 중심 프로그램	• 젊은 세대의 고령자 이해, 고령자의 젊은 세대 이해 프로그램 개발 •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농촌지역프로그램	•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고령자 취미, 교육, 강좌 확대 • 고령 이동취약자와 농촌지역 고령자를 위한 행사 차량지원
홍보관 규제	• 시의회에서 조례로 규제방안 검토

자료 :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존중 및 사회통합 : 고령자 위원회, 고령자 중심 재능발휘, 고령자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가 개발됨

〈표 3-13〉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존중 및 사회통합영역 주요 사업(안)

영역	실행과제
고령자 위원회	- town-hall 미팅 시스템 구축 - 시장 직속의 고령자 정책위원회 구축
고령자 중심 재능 발휘	- 고령자 중심 기획 및 실시 행사/프로그램 개발 - 전통문화 및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고령자 이미지 제고	- 초·중·고 학교에 고령자 이해 프로그램 개설 - 정읍시 노인현장(예, 10개명) 및 신고령자 표식 개발 - 미디어에서 아름다운 노년 부각 기회

자료 : 박진경 외(2020).「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복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시민참여 및 고용 :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고령자 재취업 지원, 고령자 취·창업 지원, 근로환경 조성 관련 실행과제를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표 3-14〉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시민참여 및 고용영역 주요 사업(안)

영역	실행과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체 확대 - 노인생산물품 보호시장 마련
고령자 재취업 지원	- 고령자 적극 채용 기업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고령자 지역 적합 직종 개발 육성 방안 - 노인취업지원센터 역할 강화
고령자 취·창업 지원	- 고령자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 창업 매니저 파견사업(전문직종관계자, 교수 등) - 평생교육원에 고령자 창업과정 개설
근로환경 조성	- 고령친화업체 인증제 확대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정읍시 작업환경 네트워크 활성화 - 전통시장과 아파트 내 노점매대 설치 및 운영(노점 고령자 이력제 실시)

자료 : 박진경 외(2020).「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복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 정보 접근성/민감성, 의사소통 프로그램, 정보기기 활용, 정보전달 방안과 관련된 실행과제 중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표 3-15〉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영역 주요 사업(안)

영역	실행과제
정보 접근성/민감성	지역학교와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	- 사랑방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시행 - 고령자의 연령대별 정보화 교육 교과개발 및 운영
정보기기 활용	- 핸드폰 덮개 돈보기 보급 - 실버정보 옴부즈맨 프로그램운용(기존 노인일자리 활용) 3세대 정보기기 선생님 파견(경로당 등) 봉사
정보전달 방안	- 마을회관에 정보재생기 설치 - 중요한 정책·정보 지역 방송사 자막 서비스 협조 - 정읍시 및 협력기관단체에 고령친화 인쇄물 제작 매뉴얼 안내서 배포

자료 :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복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지역지원 및 보건복지 : 치매돌봄 체계, 복지관 이용 접근성, 사회지원 체계, 건강 취약자 응급대응 관련 사업이 진행 중임

〈표 3-16〉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지역지원 및 보건복지영역 주요 사업(안)

영역	실행과제
치매 돌봄 체계	- 치매전문 주간보호센터 설치/증설 - 경미 치매노인 지역사회 배치지원 시스템 마련 - 경로당순회 치매예방교육강화 - 치매 코디네이터 양성(지역사회교육강사)
복지관 이용 접근성	- 보건진료소 의료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강화 - 경로당 통합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사회지원 체계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확대
건강취약자 응급대응	- 위험군 환자 고령자들의 가정에 약상자 보급 - 흡한기와 폭염기 승강장에 그늘막 설치

자료 :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복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 충청남도 논산시

□ 추진 배경 및 경과

- 논산시는 꾸준한 고령인구의 증가세로 2016년에 이미 고령화율 22.8%의 초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지역 개발 정책에서 고령화 대응방안을 고심하며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준비를 시작
- 2016년 3월 논산시정 부서별 협업을 통한 고령정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분리하여 100세 행복과를 신설함
- 100세 행복과에서는 노인 마을 공동체, 노인복지 행정, 행복배움, 공동체 건강분야 등의 사업을 진행함
- 2018년에 전국에서 8번째, 충청남도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음

□ 추진방향

- 비전 : 살던 곳에서 살고 싶은 도시 논산
- 목표
 - 【인프라】 사람 친화적 환경이 정비된 도시 : 편리하고 친화적인 환경 정비로 관계의 고립을 막는 마을 만들기
 - 【서비스】 자기다움을 지키며, 안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고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네트워크】 지역주민 누구나 사회와 관련을 가지며 거주 가능한 도시 : 사회참여, 사회공헌 기회가 보증되고, 지역주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추진전략
 - 【1단계】 자생력 강화단계 : 고령친화적 서비스의 확대로 자생력을 강화함
 - 【2단계】 인프라 구축단계 :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 【3단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완성단계 :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완성

□ 추진체계

- 고령정책 관련 주무부서는 100세 행복과로 2017년 1월,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전담부서로 분리되었음

-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논산독거노인 돌봄센터 등 지역 내 기관과 협업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 재난 안전관리, 소방교육,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등의 시책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3-4] 논산시 고령정책 추진체계



자료 : 논산시청 홈페이지(<https://search.nonsan.go.kr/RSA/front/Search.jsp>).

- 논산시의 100세 행복과에서는 어르신정책, 어르신시설, 행복대학, 종합사회복지관의 4개 영역에 대한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3-17] 논산시 100세행복과 주요업무

영역	실행과제
어르신정책	• 어르신회관 설치·등록 및 관리·지원 업무 • 어르신회관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 업무 •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고령친화 및 고령화대책 관련 업무 • 어르신 놀이터 업무 • 기초연금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 관리 등 • 시니어일자리센터 관련 업무
어르신시설	• 장사시설(묘지, 자연장, 장례식장 등) 신고 및 허가 업무/공설봉안당 시설관리 등 • 어르신 돌봄 센터 관리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업무 추진 및 관리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관리 등 • 어르신교실(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사업 지원 • 어르신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등 업무 추진 • 어르신 학대 업무
행복대학	• 행복대학 업무 추진 행복대학 학사운영 및 강사관리(강사교육, 간담회 등) • 한마음 글마실 소식지 및 행복대학 기자단 운영 • 행복대학 유튜브 및 오디오 북 등 추진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 • 작은도서관 운영

영역	실행과제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관리 • 아·미용실 및 자원봉사자 관리 • 경로식당운영 관리 • 민방위전용교육장 사용 승인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자료 : 논산시청 홈페이지(<https://search.nonsan.go.kr/RSA/front/Search.jsp>).

□ 주요사업

- 논산시의 고령친화도시는 WHO의 8대 영역을 참고하여 3개 영역, 8개 분야로 설정하여 52개 지표를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주요사업을 본 보고서에서 분류한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소득·일자리】 : 논산시는 소득 및 일자리 영역에서 고령자 취업지원 및 고령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0세 행복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복나눔 공동체 운영사업,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과 사회개발과의 전통보유 농촌어르신 소득원 개발 사업 등이 있음

〈표 3-18〉 논산시 고령정책 소득 및 일자리 영역 주요 사업(안)

과제	실행부서
행복나눔 공동체 (시니어일자리 센터) 운영 사업	100세 행복과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	100세 행복과
전통보유 농촌어르신 소득원 개발 사업	사회개발과

자료 : 박진경 외(2020).「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복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건강·지역사회돌봄】 논산시의 건강 및 지역사회돌봄 분야에서는 논산시 거주 고령자는 물론 모든 지역주민에게 의료와 보건,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 지키기, 큰 병 예방하기부터 치매 안심지원센터, 고령자의 정서적인 건강까지 돌봐주는 노인자살예방사업 등이 해당됨

〈표 3-19〉 논산시 고령정책 건강 및 지역사회돌봄 영역 주요 사업(안)

과제	실행부서
독거노인돌봄 서비스	100세 행복과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사업	100세 행복과
특화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	100세 행복과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위생과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사업	보건위생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공공시설사업소
건강100세 관리센터 운영사업	건강도시지원과

자료: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복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참여·학습】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논산시 거주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회참여 촉진 시책으로는 행복경로당 관련 사업, 노인대학 운영 사업, 어르신 한글대학 사업, 자원봉사센터 사업과 행복공동체 사업 등이 있음

〈표 3-20〉 논산시 고령정책 사회참여 및 학습 영역 주요 사업(안)

과제	실행부서
행복경로당 운영 및 지원	100세 행복과
어르신 한글대학 운영사업	100세 행복과
어르신 한글대학 문예한마당 사업	100세 행복과
노인대학(노인교실) 운영 사업	100세 행복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관광체육과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100세 행복과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 조성 사업	100세 행복과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	주민생활지원과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과
시민정보화 교육	자치행정과

자료: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복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고령친화환경】 논산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물론,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논산시의 전 세대를 위한 환경 만들기를 고심하고 있음. 먼저, ‘교통’부분에서는 고령자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있음
- ‘주거’부분에서는 고령자의 주거편의성을 높이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논산시는 고령친화환경 정비 분야 내에 ‘존경과 사회적 포섭영역’을 두어 전 세대가 융합하는 논산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인의 날 축제와 장수마을 사업이 있음

〈표 3-21〉 논산시 고령정책 고령친화환경 영역 주요 사업(안)

과제		실행부서
교통	장애인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 관리	
	시민중심 도로시설물 관리	
주택(주거)	노후 공공인대주택 시설 개선	도시재생과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도시재생과
	취약계층 주택 유지 보수 사업	도시재생과
존경과 사회적 포섭	노인의 날 축제	100세 장수과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장수마을) 사업	사회개발과

자료 : 박진경 외(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제2절 해외 고령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1.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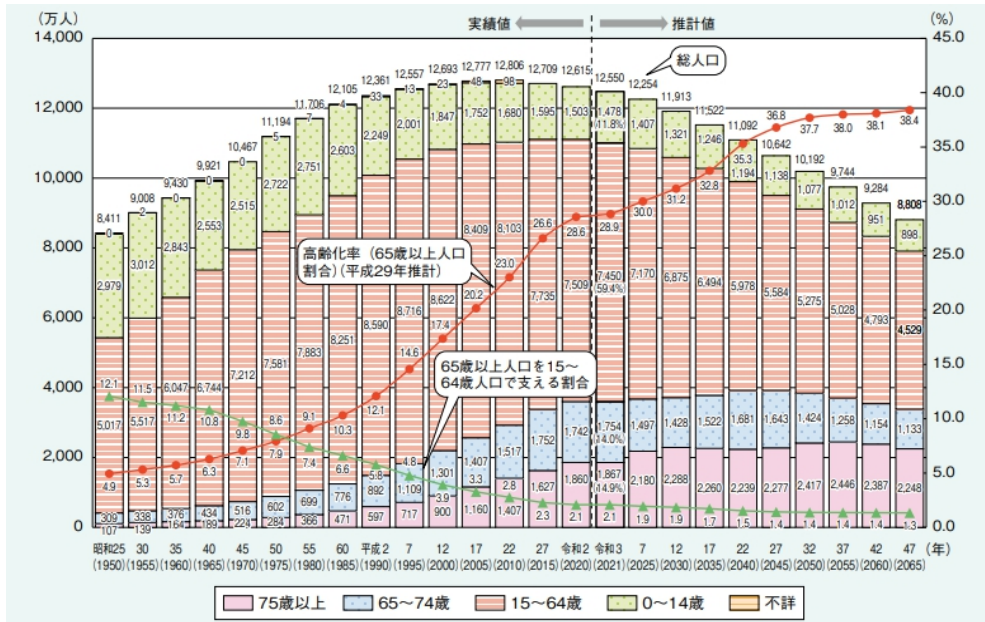
1) 인구고령화 현황

□ 2022년도 고령사회백서

- 일본 내각부에서 공표한 2022년도 고령사회백서(令和4年版高齢社会白書)에 따르면, 2021년 10월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550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 3,621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9%로 집계됨.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45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 대 고령자 비율은 2.1:1을 나타냄⁵⁾
 - 고령자 인구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하면, 전기고령자인 65세~74세 인구가 1,754만 명으로 총인구의 14%,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수가 1,867만 명으로 총인구의 14.9%를 차지하며 전기고령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음
 -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65년도 일본 인구구성은 2.6인 중 1인이 65세 이상자, 3.9인 중 1명이 7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1970년 고령화율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994년에 고령사회,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음(20% 이상 기준으로는 2005년, 21% 기준으로는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까지 각각 24년, 11년 소요되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음
 -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그리고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 특수 출생율을 들 수 있음. 단카이세대가 고령자로 편입하며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됨.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한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인구는 2010년 1억 2,806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로 돌아섰음. 생산가능인구(15~64세)수는 1995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5) 일본에서 고령자의 용어는 문맥이나 제도마다 대상이 달라, 일률의 정의가 없음. 「고령 사회 대책 대강」(2018년 2월 각의 결정)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편의상 일반 통념상의 「고령자」를 널리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현실에 비추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함. 고령자의 정의와 구분에 관하여, 일본노년학회와 일본노년의학회에서 75세 이상을 고령자의 새로운 정의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음(2017년 3월). 일본의 고령사회백서에서는 일반 통념인 6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보며, 고령자를 65세 이상 74세미만과 75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음.

[그림 3-5] 일본 고령화 추이와 장래인구추계



자료: 일본 내각부(2022) 「2022년도 고령사회백서 (令和4年版高齢社会白書)」.

2) 고령정책 현황

□ 일본 고령정책의 기본 틀

- 일본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에 단계별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일본 고령정책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고령사회대책회의」, 「고령사회대책대강」의 세 가지 기본 틀 안에서 시행하고 있음
 -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직후인 1971년 사회교육 심의회 답신에서 일본정부에서 처음으로 바람직한 노인상을 제시하며 ① 건강, ② 학습 기회, ③ 생활 보장, ④ 보람 획득, ⑤ 직업 기회, ⑥ 여가 활동, ⑦ 세대 간 교류와 차세대 육성, ⑧ 자원봉사의 관점에서의 학습을 언급함. 또한 노인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늙다 老)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5년에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국민 모두가 평생 안심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구 고령화의 실태를 명확히 하고 고령사회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95)」과 「고령사회대책대강(1996)」을 발표

- 일본 정부의 고령정책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음(1995년 공포 및 시행, 법률 129호)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고령사회대책의 기본 이념으로서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 공정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자립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풍요로운 사회의 구축을 내걸고 있음.
 - 동법은 고령사회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하는 국가의 책무, 고령사회대책에 대해 국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시책을 실시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상호연대를 강화하며 스스로의 노년을 건강하게 충실히 영위할 국민의 노력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여, 생활환경 등에 대해 국가가 강구해야 할 시책을 규정하고,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서 「고령사회대책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정하고 있음
- 「고령사회대책회의」는 내각 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각료를 위원으로 하는 특별기구로, 매년 고령사회대책에 필요한 관련부처 간 상호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및 중요사항의 심의, 대책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음. 「고령사회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고령사회대책대강」안을 작성함
- 「고령사회대책대강」은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사회대책의 중장기에 걸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으로, 1996년 최초의 대강이 책정된 후,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2018년 제4차 대강이 각의 결정되었음
 - 「고령사회대책대강」의 하기의 3대 기본방침에 따라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함
 - 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희망에 따라 본인의 능력을 살려 활약할 수 있는 연령차별 없는 사회(Ageless)
 - ② 지역 생활기반 정비로 고령자가 안전·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 ③ 기술혁신의 성과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고령사회대책을 지향
 - 「고령사회대책대강」은 ① 취업·소득 ② 건강·복지 ③ 학습·사회참여 ④ 생활환경 ⑤ 연구개발·국제사회공헌 ⑥ 전 세대의 활약 추진의 6개 세부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 세부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취업·소득 분야: 연령차별 없는(Ageless)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자산 형성 지원 등을 도모

- ② 건강·복지 분야: 건강 만들기의 종합적 추진, 지속 가능한 요양 보험제도 운영, 간병 요양 서비스 이직률 제로의 실현, 지속 가능한 고령자 의료 제도의 운영, 치매 고령자 지원 시책 추진, 인생의 최종 단계의 의료지원, 지역사회 지지의 구조 만들기 지원
- ③ 학습·사회참여 분야: 학습 활동의 촉진, 사회 참가 활동의 촉진 등을 도모
- ④ 생활환경 분야: 풍요롭고 안정된 주생활 확보, 고령사회 적합 지역개발 종합 추진, 교통 안전 확보, 범죄와 재해 등으로부터의 보호, 성년 후견 제도 촉진 등을 도모
- ⑤ 연구개발·국제사회에의 공헌 분야: 선진기술의 활용 및 고령자 비즈니스 활성화, 연구 개발 추진과 기반정비, 해외국가와의 연구 과제 공유 등 도모
- ⑥ 전 세대의 활약 추진 분야: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1억 총활약 플랜」(2016년 6월 각의 결정), 「일하는 방법 개혁 실행 계획」(2017년 3월 일하는 방법 개혁 실현 회의 결정), 「새로운 경제 정책 패키지」(2017년 12월 각의 결정) 사업과 연계 도모

□ 2022년도 고령사회대책

- 일본 내각부의 「2022년도 고령사회대책」 관련 예산은 총 22조 9,744억 엔이며, ① 취업·소득분야 예산이 13조 2,243억 엔, ② 건강·복지분야 예산은 9조 7,053억 엔, ③ 학습·사회참여 분야 199억 엔, ④ 생활환경 분야 33억 엔, ⑤ 연구개발·국제사회공헌 분야 66억 엔, ⑥ 전 세대의 활약 추진 분야 150억 엔으로 취업·소득 분야와 건강·복지 분야 두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 99%를 상회하고 있음

- 이하부터는 본 보고서에서 분류한 4개 영역에 맞추어 이에 해당하는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 분야를 정리하고 있음

① 소득 및 일자리(고령사회대책의 취업·소득 분야)

- 「소득 및 일자리」분야에서는 일본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령제한 없이 전 국민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데 노력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적연금 제도 구축과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 ‘연령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원격 근무 형태의 보급 등 취업기회와 근무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공,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취업 확보 조치, 근로자의 커리어재설계, 리스킬링 등의 능력개발 지원, 여유 있는 직장 환경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

-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적 연금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일하기 방식의 다양화, 장기화되고 있는 고령기의 취업 확대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구축, 연금제도에 대해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산 형성 등의 지원’을 위해 저축제도 보급 등을 도모하고 고령기에 대비한 계획적 재산형성을 돕고자 함. 기업연금·개인연금제도에서는 ‘국민연금법’ 등 일부를 개정하여 법률에 의한 확정저출연금(DC)의 가입 가능 연령의 인상, 수급시기 선택지의 확대, 탈퇴일시금, 기업형 DC 가입자의 개인형 DC(iDeCo) 가입의 요건 완화 등 꾸준히 제도의 재검토와 시행을 위해 노력하며, 중소기업의 퇴직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보급촉진을 위한 시책을 실시중임
- ‘자산의 유효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책으로는 주택금융지원기구에 있어서, 고령자의 주생활 관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리버스 모기지 보급 촉진책과 저소득 고령자 가구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각 지역사회 복지 협의회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의 대출을 실시해주는 부동산 담보형 생활 자금 대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② 건강 및 지역 돌봄(고령사회대책의 건강·복지 분야)

- 「건강 및 지역 돌봄」분야에서는 일본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만들기 시책인 ‘건강 일본 21(2013년 추진)’에 따라 기업, 단체,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의 추진을 이어감
-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장년기부터의 건강교육, 방문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대처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 책으로 운동의 습관화를 도모하여 생활 습관병의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고령자의 적절한 영양관리를 위해 건강 지원 배식 서비스를 추진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전문 인력을 배치함. 또 고령자의 산책을 통한 건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천공간과 시내공간을 융합하여 양호한 공간 형성을 목표로 ‘강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2025년⁶⁾과 2040년의 일본 사회 보장 대비를 목표로 2020년에 개정한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 사회복지법, 2020, 법률 제 52호「地域共生社会の実現のための社会福祉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시책, 간병서비스 제공 체제 정비, 의료와 요양, 간병 데이터 기반 정비, 간병

6) 단카이세대가 75세이상의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

인력 확보, 업무 효율화 등의 시책이 포함되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간병 돌봄 서비스의 충실화를 통하여 관련 종사 인력의 이직률 '0'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간병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필요한 간병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정착을 위해 고령자용 주택, 지역밀착형 서비스, 간병 의료시설 정비, 유료 노인홈 등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한 지원과 더불어, 간병 인력 확보를 위한 간병 종합 확보 기금을 새롭게 신설하고 해당 기금으로 간병 노동환경의 개선, 취업촉진 등 지역의 시책을 지원하고 있음. 대표적인 재정 지원책으로 전국의 지자체에 「지역 케어 회의」를 보급하고, 이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회의관련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간병과 경제활동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업, 간병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간병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이의 원만한 실행을 위하여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한 지도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간병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위해 사업주에 대한 행동계획의 책정 등을 실시하며, 특히,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가족 간병을 위해 이직, 퇴직하는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일 가정 양립지원 플래너에 의한 커리큘럼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유급 휴가제도 마련, 간병 휴업의 원활한 이용과 자유로운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유급 간병휴업과 직장복귀를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특히 후기고령자의 인구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자 의료 제도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음. 주목할 것은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고령자 보건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사업의 코디네이터, 의료전문직 배치 비용 등을 '후기고령자의 조정 교부금' 중 '특별 조정 교부금'을 마련하여 재정지원 하고 있음
- 치매 발병을 늦추고, 치매진단이 되더라도 희망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회만들기를 목표로「치매시책추진대강」을 마련하고 '공생'과 '예방'을 치매대책의 기본틀로 정하여 치매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음

7)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은 도도부현 단위(지자체단위) 국민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강제 가입되어 운영되며, 피보험자가 75세 이상이 되었을 때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이행되는데, 보험자는 도도부현 단위로 설치되는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 및 지역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경영하고, 사회, 경제, 문화, 그 외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지역주민의 요구, 생활 과제의 파악, 지역커뮤니티 형성, 담당자가 연계하는 구조 만들기 등의 대처를 통해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지원 구조 만들기를 활성화시켜 지역 복지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표적으로 지역의 「접착형 상담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는데, 1년 365일, 24시간 원스톱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③ 사회참여 및 학습(고령사회대책의 학습·사회참여 분야)

- 「사회참여 및 학습」 분야에서는 ‘학습활동 촉진’과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학습활동 촉진’의 내용 중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사업에서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학습지도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봉사에 관련된 활동에서 고령자와의 교류를 포함한 체험활동을 장려하여 세대 간 교류 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 초·중학교 학교개방으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여유교실에 대해서는 지방 공공 단체가 사회교육시설이나 스포츠 문화시설 전용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17년 개정된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2018년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사회보장 등의 이해촉진을 위한 교과과정’을 사회과와 기술, 가정과에 마련하여 젊은 세대가 고령자 및 고령사회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도록 교육현장차원의 지원에 힘쓰고 있음
- 고령자의 다양한 디지털 활용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지방 공공 단체 등과 제휴, 이용방법에 대한 상담 대응지원을 하고, ICT를 활용하여 고령자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어 디지털 활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실행하고 있음
- 더불어, 경제교육을 위한 체제 정비를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자산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 리터러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생 단계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강화함
- ‘사회참여활동 촉진 분야’에서는 지역기반의 자주적 활동 조직인 고령자클럽 지원 등 지역 고령자의 사회참가 활동을 지원하며, 고령자 사회활동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22년 11월, 가나가와현의 요코하마, 가와사키, 사가미하라시에서 「전국건강복지제」를 개최함

- 퇴직교원, 기업퇴직자를 활용한「지역 학교 협동 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지역인재육성, 향토학습, 방과 후 학습 등 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지역 고령자가 지지하는 배움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임
- 지역의 고령자들이 유상자원봉사에 의한 수익창출과 스스로의 건강만들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령자 생명 활동 촉진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유지 및 생활지원 서비스의 기초 준비를 촉진하고 있음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고 고령퇴직자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싶은 사업자와 고령자를 매칭하는 인재 배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④ 고령친화환경(고령사회대책의 생활환경 분야)

- 「고령친화환경」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과, 고령친화적인 지역 개발, 이를 통해 교통이나,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고령사회 적합 지역개발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건축, 교통, 공공시설 무장애화 등의 종합 대응책을 통해 고령자가 지역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결국 고령자뿐 아니라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책으로 다세대를 배려한 마을 만들기 종합추진대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주생활 기본계획(전국계획)」의 목표에 따라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쉬운 주거의 실현, 다양한 세대가 서로 지지하고, 고령자가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커뮤니티의 형성과 마을 만들기, 빈 집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의 추진, 미래에도 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주택 보급과 관리, 수리 및 리폼, 거주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주거 발전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고령자 거주를 위해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창설된 「서비스 부착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코로나상황하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접촉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IoT 기술 도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고령자의 자립이나 간병 돌봄을 배려한 주택의 건설 및 개조의 촉진 사업으로 배리어프리화(무장애화) 사업을 진행하고, 무장애화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비에 대한 보조, 세제 특례 조치, 주택금융 지원기구 대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자 실거주 주택의 자산 가치를 높여 고령기의 경제적 자립도 도모하고 있음

- 고령자를 포함 전 세대가 안심·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지역사회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무장애 환경 정비를 추진함. 공공교통기관 등 이동공간의 무장애화 지원사업에서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재구축함에 있어 복지나 의료 등 고령자 밀집 생활기능과 거주 지역 등과의 연결노선,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쉬운 환경 구축을 위한 콤팩트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고령자가 교통사고와 범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 촉진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 각 분야의 세부 내용은 <표 3-22>와 같음

<표 3-22> 2022년도 고령사회대책 분야별 내용

대책 분야	예산(억 원)	주요 내용
소득 및 일자리 (취업·소득)	13조 2,243	(1) 연령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① 다양한 형태의 취업 기회·근무 형태의 확보 ② 고령자 등의 재취업 지원 · 촉진 ③ 고령자의 창업 지원 ④ 고령자 고용 확보 : 기업·사업주에 대한 취업확보조치 ⑤ 근로자 능력개발 : 리스킬링, 커리어재설계 등 직업훈련) ⑥ 여유가 있는 직업생활의 실현 (2)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의 구축 ① 일하기 방식의 다양화, 고령기의 장기화 · 취업 확대에 대응한 연금 제도의 구축 ② 연금 제도 등의 알기 쉬운 정보 제공 (3) 자산 형성 등의 지원 ① 자산 형성의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② 자산의 유효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건강 및 지역 돌봄 (건강·복지)	9조 7,053	(1) 건강만들기 종합적 추진 ① 생애에 걸친 건강 만들기의 추진 ② 요양필요상태 예방 추진 (2) 지속가능한 요양보험제도의 운영 (3) 요양서비스의 충실(요양간병 종사자 이직률 제로 실현) ① 필요한 요양서비스 인력의 확보 ② 요양서비스 질의 향상 ③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택의료 및 간병제공 ④ 간병과 일의 양립지원 (4) 지속가능한 고령자 의료 제도 운영 (5) 치매 시책 추진 (6) 인생마지막 단계에서의 의료 (7)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 지원 구조 구축

대책 분야	예산(억 엔)	주요 내용
		① 지역의 지원 구조를 통한 생활지원 추진 ② 지역복지계획 추진 지원 ③ 지역에서의 고령자 안심 거주 실현 (8) 코로나 대응
사회참여 및 학습 (학습·사회참여)	199	(1) 학습활동 촉진 ①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기회제공 ② 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기회제공 ③ 사회보장 교육(사회보장에 대한 이해) ④ 고령자 디지털 활용 지원 ⑤ 인생단계별 소비자 교육 (2) 사회참여 활동 촉진 ① 다세대에의한 사회참여활동 촉진 ② 시민활동, NPO활동환경 정비
고령친화환경 (생활환경)	33	(1) 안정된 주거생활 확보 ① 후세대에 계승가능한 양질의 주택공급 ② 순환형 주택시장의 실현 ③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 (2) 고령사회 적합 지역개발의 종합적인 추진 ① 함께사는 사회 실현을 향한 대응 추진 ② 다세대를 배려한 마을만들기, 지역만들기 종합추진 ③ 대중교통기관 등 이동공간의 무장애화 ④ 건축물, 공공시설의 무장애화 (3) 교통안전의 확보 및 범죄, 재해로부터의 보호 ① 교통안전의 확보 ② 범죄·인권침해·악질상법으로부터의 보호 ③ 방재시책의 추진 (4)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

자료: 일본 내각부(2022) 「2022년도 고령사회대책 (令和4年版高齢社会対策)」를 토대로 작성.

3) 영역별 고령자 정책 대응 및 사례 분석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사회대책 영역 중에서 ‘소득 및 일자리’ ‘건강 및 지역 돌봄’ 두 분야에 대한 예산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고령자에 대한 행정시책이 이 두 영역 집중됨을 알 수 있음⁸⁾. ‘소득 및 일자리’ 분야는 주로 은퇴전후인 65세 이상 74세 미만 전기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 및 연금 정책이고, ‘건강 및 지역 돌봄’ 분야에서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의료, 돌봄, 요양보호 관련 정책이

8) 2022년 기준 이 두 분야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99.8%를 차지하고 있음.

해당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일본의 고령정책의 최대 이슈가 정년의 연장과 연금 수급이었으며, 고령자의 건강 및 복지를 일본의 고령화 사회 최대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초고령 대응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음. 두 분야에 있어서의 고령화 단계별 정책 대응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고령화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ee, Lee&Oh, 2018)

□ 소득 및 일자리

(1) 고령화단계별 고령자 고용 대응 조치

- 일본 정부의 고령화대책 중 ‘소득 및 일자리’ 분야, 고령자고용정책의 고령화단계별 조치를 살펴보고자 함.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생애현역사회’구축을 위한 고용안정책으로, 법제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현역을 지원하고 있음
- 고령자고용관련 정책은 일본의 중앙정부(후생노동성)의 관리 감독하여 이루어지며,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헬로워크 라는 일본 공공고용서비스 행정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도도부현의 노동국은 후생노동성 직속 지방 기관이며, 도도부현 노동국 직원은 후생노동성 소속임. 일선의 고용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헬로워크는 도도부현 노동국의 일선기관으로, 중앙정부(후생노동성)의 지휘 체계 하에서 고령자 고용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조성은 외, 2021)
- 고령자 고용을 포함 모든 국민의 생애현역지원을 위한 고용정책이 중앙정부에서 통제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고령화단계 진입 전 시기부터 인구의 고령화를 일본의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취업과 소득분야에의 대응 마련을 위한 시책을 고령화 단계별로 진행하였음
 - 1970년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중장년층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동법을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개정, 60세 정년 노력 의무화를 실시함.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1970년의 일본 총 인구는 1억 467만 명,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740만 명(65~74세 인구 516만 명, 75세 이상 인구 224만 명)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7,212만 명)9.8명에 65세 이상자 1명의 비율이었음
 -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에는 60세 정년제를 법제화함. 고령사회로 진입한 직후인 1995년 일본 인구는 1억 2,557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 1,826만 명(65~74세 1,109만 명, 75세 이상 717만 명)으로 고령화율 14.6%이며, 생산 가능 인구(8,590만 명) 4.8명 당 65세 인구 1명의 비율로 전환됨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2004년에는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의 법적 의무화를 실현함. 고령화율 20.1%로 초고령사회에 안착한 2005년 일본 총인구는 1억 2,777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 2,567만 명(65세~74세 1,407만, 75세 이상 1,160만)으로 생산 가능 인구(8,409만 명) 당 고령인구 비율은 3.3 대 1명의 비율을 나타냄
- 고령화율 29%를 맞이한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조치 노력의무를 위한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개정법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창업지원 조치가 추가되어, 고용 이외의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취업과 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그림 3-5 내각부, 2022년 고령사회백서 고령화 추이와 미래추계 그래프 참조)

〈표 3-23〉 일본 고령화단계별 인구특성 및 고용 대응 조치(2021년 추가비교)

고령화단계 구분	1970년	1995년	2005년	2021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총인구	1억 467만	1억 2,557만	1억 2,777만	1억 2,550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율)	740만(7.1%)	1,826만(14.6%)	2,567만(20.2%)	3,621만(28.9%)
65~74세 인구	516만	1,109만	1,407만	1,754만
75세 이상 인구	224만	717만	1,160	1,867만
생산가능 인구(15~64세)	7,212만	8,590만	8,409만	7,450만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비	9.8:1	4.8:1	3.3:1	2.1:1
고용 대응 조치	‘중장년층 등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조치년도	1971년	1994년	2004년	2021년
주요 내용	고령자고용안정 및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보 및 고용촉진	60세 정년제 도입 (40~65세 연령차별금지)	65세 고용확보 조치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조치 노력의무화

자료 : 일본 내각부(2022) 「2022년도 고령사회백서 (令和4年版高齢社会白書)」의 그래프와 넷세이키초연구소(2013),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2021)을 참조하여 작성.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2/gaiyou/pdf/1s1s.pdf>.

(2) 고령자고용정책 개요 및 시책 현황

- 현재 일본의 고령자고용관련 정책은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나이에 관계없이 활약이 가능한 ‘생애현역사회’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생애현역을 실현하기 위해 정년 이상, 계속 고용, 정년 폐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고용확보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4가지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령자 고용 기업의 확대
 - 일본정부는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법제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하였음. 이와 더불어,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과 고령자 취업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고령자 고용서비스 중 기업대상 시책은 독립행정법인인 JEED(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JEED에서는 기업 대상 상담 및 지원, ‘65세 이상 고용추진 조성금’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 퇴직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무기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 ② 고령자 재취업 지원의 강화
 -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는 퇴직예정 고령자를 위한 ‘커리어인재뱅크사업’이 대표적으로, ‘산업고용안정센터’에서 퇴직예정자와 기업과의 매칭,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전국의 주요 헬로워크에 65세 이상 고령 고령자를 위한 ‘생애현역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재취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헬로워크에서는 ‘특정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등 활용하여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③ 고령자 지역 연계 취업의 지원
 - 지역 차원의 다양한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보를 위해 전국의 ‘실버인재센터’를 활용하고 있음. 실버인재센터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고령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일본 정부에서 신규로 시행하고 있는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지역사회의 고령자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④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이행의 보장

- 2021년에 개정된 법으로 70세 취업 확보조치가 이루어져 65세 이상 70세까지의 고령자 고용확보와 취업기회 확보를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도와 조언 사업을 펼치고 있음
- JEED에서는 고용확보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 사례

- 일본의 고령자 고용에 관련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소관하고 있어 지자체 레벨에서의 벤치마킹에 한계가 있으나,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역고용촉진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살펴보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역의 필요에 의한 고령자 고용기회 발굴 및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퇴직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됨
- 협의회
 - 협의회란 고령자고용안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협의회로 지방공공단체와관계기관이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을 기본으로 한 지자체와 지역 실버인재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 금융기관, 노사관계자, 지역대학, 대학교수 등 고령자의 고용과 관계되는 단체부터 개인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역의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보를 위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령자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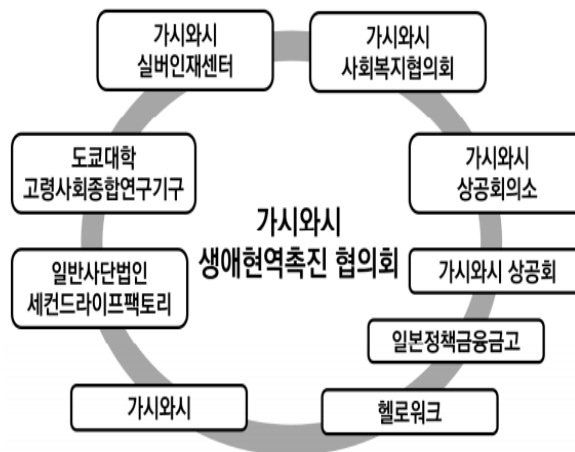
☞ 치바현 가시와시 (千葉県 柏市 生涯現役促進協議会) 생애현역촉진협의회 사업

지역 현황

- 치바현의 가시와시는 도쿄 통근권으로 단카이 세대를 비롯한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쿄 근교지역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지역 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 지역내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거주 고령자들에게 활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대응

- 가시와시에 있는 도쿄대학 가시와 캠퍼스 등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의회를 구성



자료 : 조성은 외(2021). 고령자고용정책 해외사례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사업내용 및 성과

- 다양한 지역 내 취업처로 고령자 구인 매칭 - 일자리 매칭 지원 상담창구 운영
- 고령자 재취업 지원 - 취업세미나와 직업능력훈련강좌 개최
-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의 정비 -워크쉐어링(work sharing) 정책
- 고령자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 가시와시의 사례처럼 인천시 역시 지역 내 우수한 대학 등 교육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전담 연구기관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고령사회대응센터와 시의 노인복지과를 포함한 관과 민간의 주체들이 협업하여 인천 거주 고령자들에게 활약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 및 지역 돌봄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1995년, 의료보험급여 중 고령자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31%를 초과하자 2000년 4월부터 고령자 간병 및 돌봄을 위한 ‘개호보험(간병 요양 보험)’을 도입하여 의료보험과 분리하였음
-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며 고령자 주거복지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2년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공급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유료노인홈,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이 공급하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 등을 운영하며 고령자의 주거와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간병 돌봄 용야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가 평소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인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개호보험 급여 급증에 따른 재정악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실제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는 각 지자체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고령자의 요개호율을 낮추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지역에서 고령자의 의료, 간병, 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도입됨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일본의 단카이세대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25년을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서 고령자의 존엄 유지와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는 초고령사회 고령자 복지 대응책으로 후기고령자가 심각한 요간병 상태가 되어도, 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낯을 잃지 않고 나다운 생활을 삶의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간병·생활 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의 2025년 대응을 위한 지역포괄케어 강조사항은 ① 치매지원책의 충실 ② 의료 및 간병, 요양시스템과의 연결 ③ 고령자 거주관련 정책 연계 ④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중심의 시책으로 지자체차원에서의 지역 제반계획(도시계획 등)과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간 정책 연계를 통해 고령자의 삶을 지지하는 지역커뮤니티 조성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향후 치매 고령자의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치매 고령자의 지역에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인구고령화는 대도시와 지역 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의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에 근거, 지역 특성에 따라 만들어 가는 것이 특히 필요함
- 고령자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고령정책 대응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목표, 기본계획, 기본 방향이 설정된 후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차원의 고령 사회대응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다음에 제시하는 일본의 각 지자체별 대응 사례를 통하여 지역별 사회공간적인 특성의 차이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방식, 대응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점, 대중교통 및 각종 시설, 건강관련 의료 지표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진단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자 함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일본 지자체 사례연구

- 일본의 초고령화사회 대응책인 지역포괄시스템의 지자체 적용 사례를 본 고에서 분류한 4개 영역 기준에 의하여 정리하였음
 - ① 소득 및 일자리
 - 유족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부자(父子)가정으로 확대,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노령·장애·유족기초연금의 수급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각 지자체 레벨의 취업지원, 저소득자 거주 확보, 간병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음
 - ② 건강 및 지역돌봄
 - 고령자가 심각한 요 간병 상태가 된 경우에도 본인에게 익숙한 지역에서 인생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의료와 복지, 간병, 돌봄, 생활지원이 상호 연계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③ 사회참여 및 학습
 - 국가의 일방적, 강제적 제도 시행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위해 주민대상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처방법을 시행함
 - 가고시마현 오시마군 야마토손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없다는 이념 아래 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지원지도 만들기」가 시행됨

☞ 구마모토현 카미야마쿠사시 유지마구 (熊本県 上天草市 油島地区)

사업 배경

- 유지마구는 낙도라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 간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소가 섬 내에 없음. 요간병 고령자는 본섬의 서비스 사업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에 간병 도우미는 단 1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대응

- 주민이 주체가 된 검토 위원회 실시
- 주민 앙케이트 조사를 통한 현상 분석
- 재택 간병 돌봄 양성 강좌 개설 및 인력 양성
- 주민 주체의 간병 돌봄 및 생활지원서비스 기반 정비

소득 및 일자리 효과

- 섬 내 11명의 간병 돌봄 도우미를 양성하여 사업에 활용, 섬주민의 취업과 소득창출, 지역 간병 돌봄 시스템 조성 모두에 대응함
- 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낙도 고령자 지킴이 사업'이라는 배식 사업을 실시
- 빈집인 민가를 개조해 간병 돌봄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간병예방거점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다과회, 재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건강 및 지역 돌봄 효과

- 65세 이상 고령 독거가구 또는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무상으로 상담 버튼과 긴급버튼(소방서에 연결)을 갖춘 긴급 통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음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복지·간병 안내페이지-지역포괄시스템.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dl/mode107.pdf

④ 고령친화환경

- 보다 세밀한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거주와 의료, 간병,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가고시마현 오시마군 야마토손(촌)(鹿児島県 大和村)**사업 배경 및 지역의 과제**

-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고령화율의 오시마군의 촌단위 지자체, 농촌
- 지금까지 가족이나 인근 주민이 자발적으로 담당해 온 '유이'⁹⁾가 희미해져 일상의 곤란함이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남
- '유이'처럼 누구나 부담없이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구조 만들기의 필요성
-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주민주체의 중요성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대책의 포인트

- 지역 주민 스스로 생각하고 대처하기
- '지역 지원 지도 만들기'를 계기로 주민이 주체가 된 간병 돌봄과 생활 지원의 대처가 이루어짐

효과

- 지역주민의 정서적 긍정의 효과와 사회참여 촉진
 - 외출의욕 상승, 집안에만 있는 비율 감소
- 주민 주체의 활동들이 증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매년 증가함)
- 「지역지원지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현상, 현황에 대해 인식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문제에 맞서 생각하게 됨
- 새로운 지역의 사업들이 전개되며 지역민의 사회활동은 물론 수익창출증대
 - 야채재배 지원 사업과 수확물을 활용한 반찬 판매 사업, 판매로부터 배달업까지 발전되고 있음
- 지역의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회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향후 전망 및 과제**

- 주민들의 활동을 개인에서 전체로 연결해 지역이 하나가 된 활동으로 발전시키기
- 행정 조직과의 연계와 제휴 필요

자료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복지 개호 안내페이지-지역포괄시스템.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dl/model09.pdf

9) '유이'란 농작업 등 친족 간 또는 집락촌에서 노동을 제공해 주던 무상의 품앗이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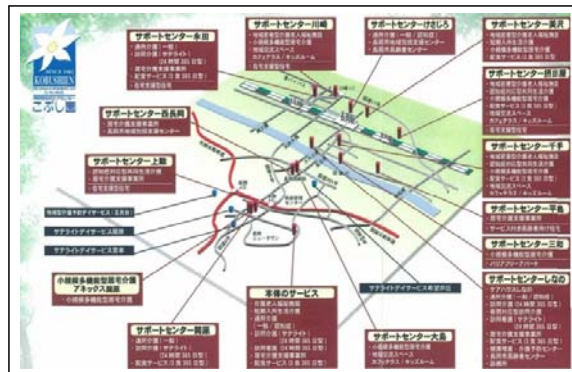
☞ 나가타현 나카오카시(新潟県長岡市)

사업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법인 나가오카 복지 협회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주거환경과 24시간 연속 간호, 돌봄, 입욕, 식사 서비스를 거주지에서 소지역 결합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목표로 독자적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함
-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에 의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나가오카시 관공서의 지원을 받아 민간의 고령자용 주택을 지원센터에 함께 설치하여 고령자의 거주 지속을 지원함
- 행정, 의료기관, 간병 서비스 사업자, 민간 사업자와 제휴하여 결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정비, 나가오카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13개소의 지원센터 설치목표

대책의 포인트

- 시설도 자택도 아닌, 새로운 재택 돌봄의 형태를 민관협동으로 정비
→ 소지역 결합형 지원 센터
- 향후 간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단카이 세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지원센터마다, 거주·의료·돌봄·예방·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결합해 일체적으로 제공 (시의 위탁에 의한 지역포괄지원센터 (2개소), 지역 밀착형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돌봄,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돌봄·간호, 특별요양노인홈(심신에 장애가 있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고령자용 주택, 배식 서비스, 지역 교류 공간 구축 등



대책의 효과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사업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음
- 동네회의 등을 지원 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
- 지역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들르는 친밀한 장소 역할

자료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복지 개호 안내페이지-지역포괄시스템.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dl/mode102.pdf

4) 고령정책 대응 전담기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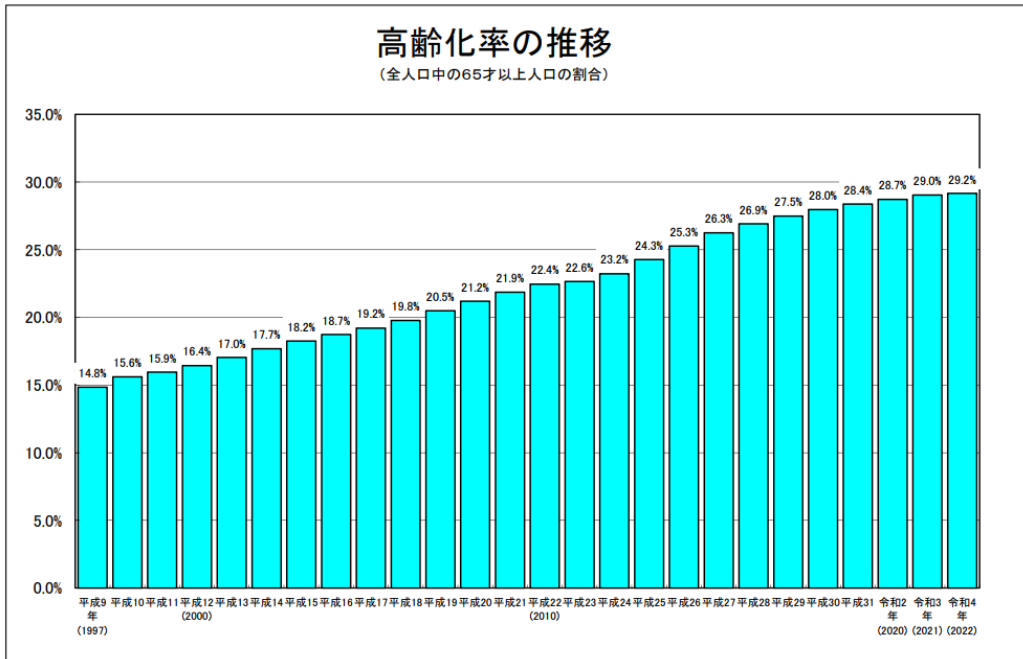
- 일본 지자체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초고령사회 일본의 경우 고령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복지관련 행정조직의 사례로서 일본 효고현 복지 행정조직을 검토하고, 인천시 노인복지관련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돕기 위한 행정조직 개선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더불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같이 고령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을 위한 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어진 고령정책 대응 전담기구의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 관련 복지정책을 계획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일본 지자체 차원에서의 고령정책 대응 전담기구인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1) 일본 효고현 (兵庫県)

□ 효고현 개요

- 효고현 인구 고령화 현황
 - 효고현 인구는 2022년 8월 현재 5,409,237명 (남성 2,570,326명, 여성 2,838,911명)으로 일본 내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7월까지의 현 내 자연증감은 -1,992명으로 출생 2,734인, 사망 4,726인으로 집계되었음. 2009년 인구 5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가 시작되어 2015년에 553만 명, 2040년에는 470만 명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효고현의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인 고령화율은 29.2%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7년 고령화율 14.7%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꾸준한 고령자 수 증가율을 보이며 2007년 고령화율 20.7%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그림 3-6] 일본 효고현 고령화 추이



자료 : 효고현 홈페이지 고령자보건복지관계 자료(https://web.pref.hyogo.lg.jp/kf02/hw07_000000012.html).

□ 효고현 복지 행정조직

○ 효고현 복지행정 조직

- 효고현의 복지관련 행정은 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음. 복지부는 모든 현민이 평생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건강 복지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에 총무과, 지역복지과, 국보의료과(국민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고령정책과, 어린이정책과, 아동과, 장애복지과, 유니버설추진과의 8개 과를 두고 있음
- [그림 3-7]에 효고현의 복지행정조직도를 도식화하였으며, 복지부 산하 8개과의 주요 업무 내용은 <표 3-24>에 소개하고 있음

[그림 3-7] 일본 효고현 복지행정조직도



자료 : 효고현 홈페이지(<https://web.pref.hyogo.lg.jp/org/shakaifukushika/kenkofukushi.html>).

〈표 3-24〉 효고현 복지부 산하 8개 과 주요 업무 내용

부서명	주요 업무 내용
총무과	-직원의 인사, 복리 후생, 복지부의 행정에 관한 중요 시책의 기획, 홍보 업무 외 복지부의 중요 사항의 연락 조정, 복지부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 담당
지역복지과	-생활보호제도의 운영지도 -전몰자 유족에의 원호 -지역 복지 추진, 재해 조금 지급 등 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일 -효고현 사회 복지 협의회·효고현 사회 복지 사업단의 운영 지도 등 소관부서
국보의료과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과)	-사회 보장 시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 건강 보험에 관한 사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관한 사무 -고령자·장애자·유아·아동·모자 등에 대한 의료비의 공비 부담을 실시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활 습관병의 예방을 통한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는 의료비 적정화 계획에 관련한 시책 추진
고령정책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정책 전담 -각 시군구의 지자체 실시 지역 지원 사업 지원 -간병 돌봄 인력 확보, 활력있는 노후만들기 사업 등 고령자 복지 시책 추진
어린이정책과	-누구나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육아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효고현 아이육아 미래 플랜」에 근거한 어린이 정책 및 육아 지원 추진 -보육소·인증 어린이집·방과 후 아동 클럽의 정비·운영, 질병이 있는 어린이, 질병후유증이 있는 어린이 보육에 관한 업무 실시

부서명	주요 업무 내용
아동과	-어린이 가정 센터의 운영, 아동 가정 상담, 아동 학대 방지, 가정폭력 피해 방지, 여성 보호, 아동 양호 시설의 정비·운영, 모자 상담·아동 부양 수당, 아동 수당의 급부 등에 관한 업무 실시
장애복지과	-장애가 있는 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 복지 계획에 근거한 서비스 기반 확보, 인재 양성, 발달 장애인·중증 심신장애인 지원, 멘탈케어 대책 등의 장애자 지원 추진
유니버설추진과	-「효고현 유니버설 사회 만들기 종합 지침」에 근거해, 유니버설 사회 만들기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2013년 4월 시행된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한 장애가 있는 분의 취업 지원, 장애자 스포츠 및 예술 문화 진흥, 커뮤니케이션 지원, 장애아(자) 시설의 운영 지원 등 장애가 있는 분의 자립과 사회 참가를 목표로 한 시책 운영

자료 : 효고현 홈페이지(<https://web.pref.hyogo.lg.jp/org/shakaifukushika/kenkofukushi.html>).

- 복지부 고령정책과는 각 시군구가 실시하는 간병 돌봄 요양보험 사업지원, 고령자의 활력 있는 노후만들기 사업(건강만들기 사업) 등 고령자 복지 시책 추진. 또한, 요양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요양 보험 사업 운영에 대해 각 시군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요양 보험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의 지도·조언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노인 복지 계획(요양 보험 사업 지원 계획)에 근거, 시설 서비스나 재택 서비스의 정비, 돌봄 인력 확보 대책 추진 등의 관계 시책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시책을 전담하는 부서임
- 고령정책과 주요 시책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짐
 - ① 고령자의 지역 생활을 지지하는 시책 추진
 - : 고령자가 그동안 살아온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요간병 예방·생활 지원, 재택 의료·간병 돌봄 제후 강화 등 시군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책을 지원하고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기능 강화 시책을 실시함
 - ② 간병 돌봄 서비스의 충실·강화
 - : 「제8기 요양 보험 사업 지원 계획」과 각 지역 장애 인구 추계를 근거로 하여 특별 양호 노인 홈¹⁰⁾의 대기자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요간병 서비스 기반 정비를 추진함. 또,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간병 간호나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간병·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간병 영역의 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한 지원 등, 고령자의 계속 지역거주를 돕기 위한 요양 간병 보험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함

10) 중증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요간병 고령자가 입소할 수 있으며, 매일 주거비와 식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며 24시간 간호를 받을 수 있음.

③ 돌봄 인력 확보 및 역량 향상/돌봄 현장의 생산성 향상 지원

: 돌봄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국면을 맞아, 돌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면서 간병 돌봄 요양보험 서비스의 안정적인 양적 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돌봄 현장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도모함

- 고령정책과는 다시 기획조정반, 지역포괄케어추진반, 간병기반정비반1, 간병기반정비반2, 간병돌봄인력대책반의 5개 실 부서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음

〈표 3-25〉 효고현 복지부 고령정책과 산하 5개 부서 주요 업무 내용

부서명	주요 업무 내용
기획조정반	- 장수마을 사업에 관한 업무 - 노인복지 계획 및 간병 요양 보험 사업지원계획에 관한 업무 - 요양 급부비 부담금 업무 - 요양 보험 심사회에 관한 업무 - 요간병(요양)인정에 관한 업무 - 간병 요양 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업무(양성 연수 포함) - 무연금 외국국적 고령자에 대한 복지급부금 관련 업무 - 요양보험 사업 통계 관련 업무
지역포괄케어추진반	- 지역포괄케어 추진 조정에 관한 업무 -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 요간병 예방 추진 관련 업무 - 고령자 생활 지원 관련 업무 - 시군구의 재택의료 간병 돌봄 제휴의 추진 지원에 관한 업무 - 지역 재활 추진 관련 업무 - 노인학대방지 업무 - 노인클럽 (고령자 단체) 관련 지원 업무
간병기반정비반1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 간병 간호 서비스의 보급 확대 관련 업무 - 간호 소규모 다기능 형 주택 간병 서비스 보급 확대에 관한 업무 - 돌봄 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업무 - 고령자 시설의 코로나 감염증 대책에 관한 업무
간병기반정비반2	- 요간병, 요양 인정 기준에 관한 업무 -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 - 간병 돌봄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업무 - 고령자 주택 개조 조성 사업 업무 - 간병 요양 보험 시설의 인가 및 지정에 관한 업무 - 지역 간병 요양 거점 정비에 관한 업무
간병돌봄인력대책반	- 간병 돌봄 인력 확보에 관한 업무 - 외국인 간병 돌봄 인력 확보에 관한 업무 - 간병 복지사 학자금 등 대출 사업에 관한 업무 - 간병 복지사 양성 시설의 지정 및 양성 사업에 관한 업무 - 간병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등

자료 : 효고현 홈페이지(<https://web.pref.hyogo.lg.jp/org/shakaifukushika/kenkofukushi.html>).

(2)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東京都健康長寿医療センター)

□ 기관 개요

-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地方独立行政法人 東京都健康長寿医療センター)는 1972년 설립된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가 노인의료센터를 통합하여 지방행정법인화 된 기관으로 (2009) 고령자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도쿄도의 고령자 의료, 가령학(노년학)의 연구거점으로 노인의료센터의 임상부분과 연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쿄의 고령자 건강 및 지역 돌봄 영역 시책사업인 요간병(돌봄) 예방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조직 및 운영체계

○ 조직 구성 현황

-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는 자연과학계와 사회과학계, 치매미래사회창조센터, 연구지원시설, 장기종단연구, 건강장수혁신센터, 도쿄도 요간병(돌봄)예방·노쇠예방 추진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과학계열 연구는 6개 팀으로 구성, 고령자 질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사회과학계열연구에서는 3개 팀이 고령자 사회참여와 생활지원,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임
- 장기종단 연구팀은 건강장수마을 만들기 연구 사업인 일명 계센누마스티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치매미래사회창조센터는 치매나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희망과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치매 미래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장수혁신센터에서는 의료 연구과제 보조금 집행 관리나 산학, 의료연계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쿄도 요간병(돌봄) 예방·노쇠예방 추진 지원센터는 도쿄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수행 부서임(표 3-26)

□ 주요추진과제

- 고령자 질환(혈관질환, 암, 치매 등)중점 의료 관련 연구와 가령학 일반, 노화, 고령자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 중이며, <표 3-26>에 연구소의 조직구성 및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하였음

〈표 3-26〉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 조직구성 및 주요 추진과제 내용

연구소 조직구성		주요 사업내용
자연과학계	노화기구 연구팀	시스템 가령의학 연구
	노화제어 연구팀	생태조절기능연구
	노화뇌신경과학 연구팀	자율신경기능연구, 노화신경생물학연구, 기억신경연구
	노년병태 연구팀	심혈관 노화 등 연구, 근노화 등 연구, 재생의학 연구
	노년병리학 연구팀	고령질환 (암) 연구, 신경병리학연구
	신경영상연구팀	PET 약재연구
사회과학계	사회참여 및 지역보건 연구팀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 연구, 건강한 나이들기와 지역보건연구 대도시 고령자 기반 연구 수행
	자립지원과 정신보건 연구팀	인지, 정신보건 연구
	복지와 생활지원 연구팀	요돌봄 예방 연구, 의료, 돌봄, 간병 시스템 연구 간병 돌봄과 웰다잉 (생애 마무리) 지원 연구
치매 미래 사회 창조 센터		병원, 연구소 협동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동 연구를 추진 예방, 진단, 치료, 케어, 교육, 지역 만들기, 정책 만들기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전략 개발 진행 사업
연구 지원 시설		아이소프트시설, 실험동물 시설, 고령자 건강 증진 사업 지원실, 연구정보관리실
게센 누마 연구 / 장기 종단 연구		건강장수마을 만들기 연구 사업 (게센누마 스터디) 종단 연구
건강 장수 혁신 센터		연구개발 유닛 산학연계, 연구개발 유닛 연구추진, 건강데이터 과학 연구실
도쿄도 요간병(돌봄) 예방·노쇠예방 추진 지원센터		도쿄도 위탁사업

자료 :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 (地方独立行政法人 東京都健康長寿医療センター)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https://www.tmg Hig.jp/research/>

-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조직 중 특히, 지자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도쿄도 요간병(돌봄)예방·노쇠예방 추진 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함

□ 도쿄도 요간병(돌봄)예방·노쇠 예방 추진 지원 센터

- 도쿄도는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증가가 향후 현저하게 진행되면, 고령자 단독세대 또는 후기고령자 부부 2인 거주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도쿄도의 모든 지자체에 「지역 만들기에 의한 요간병(돌봄) 예방 대응」 사업을 시행함

- 도쿄도의 모든 기초 지자체가, 주민 선호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활동의 통행의 장소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지역 차원에서의 요간병(돌봄) 예방 활동을 수행하려면, 사업을 전담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기관이 필요함
- 도쿄도 요간병(돌봄) 예방 추진 지원센터에서는 도쿄도와 제후해 사업을 위탁받고, 도쿄도 각 구의 기초 지자체에 대해 지역의 실정이나 대처 단계에 따른 ① 인재 육성, ② 상담 지원, ③ 평가·효과 분석, ④ 보급 계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① 지역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② 실시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에 상담 지원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③ 사업 평가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지원하고 ④ 요간병(돌봄) 예방사업 추진에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 상기의 4개 사업을 연동시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도쿄도 기초 지자체의 실정에 맞춘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독일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정책

독일은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기술과 관련되어 53개 프로젝트에 총 8,700만 유로(약 1,220억 원, 2017년 현재)를 지원함. 고령화를 경제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매년 3~4억 유로를 의료 및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고령관련 R&D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1) 인구고령화 현황

- 독일은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독일의 고령화 현상은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데 기인함
- 독일은 1970년 구서독 시절 고령인구비율이 13.8%를 기록함. 1980년 15.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 20.1%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2021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 22.09%로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3-27〉 독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7	2010	2017
비율	11.6	13.8	15.5	14.9	16.6	17.5	18.6	19.8	20.1	20.6	21.4

자료 : 노대명 외(2020). 「각국의 고령화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 보고서」.

- 67세 이상 인구는 1990~2018년 사이에 약 1,040만 명에서 1,590만 명으로 늘었으며, 이미 5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39년까지 500만~600만 명이 추가로 증가해 최소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60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임
- 2018년 기준 20~66세 생산가능인구는 5,180만 명이며, 203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4,580~4,740만 명으로 현재보다 400만~600만 명이 감소할 것임
- 독일은 피할 수 없는 고령화가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야기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가개혁 프로그램인 '어젠다 2010'이 진행됨

어젠다 2010

배경

막대한 통일비용과 높은 실업률에 따른 통일 후유증, 세계화와 EU 통합 진행에 의한 국가 간 경쟁의 심화, 기술진보와 수요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주요 내용

- '혁신, 성장, 일, 지속가능성' 표방
- 기업친화적인 관점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고보호 적용사업장 범위를 축소하고 임금부담비용 절감
- 하르츠위원회(노동시장, 기초보장) & 뤼롭위원회(공적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 두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이 입법화를 통해 실행

하르츠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한 내용을 입법화하여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에서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짐 : 하르츠 개혁 (Hartz-Reform)

- 2018년부터 2031년까지 독일에서는 1300만 명이 퇴직하게 되며,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7년 21%를 넘었고 2030년에는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주된 생산연령에 속하는 20~65세 인구는 2017년 61%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30년에는 5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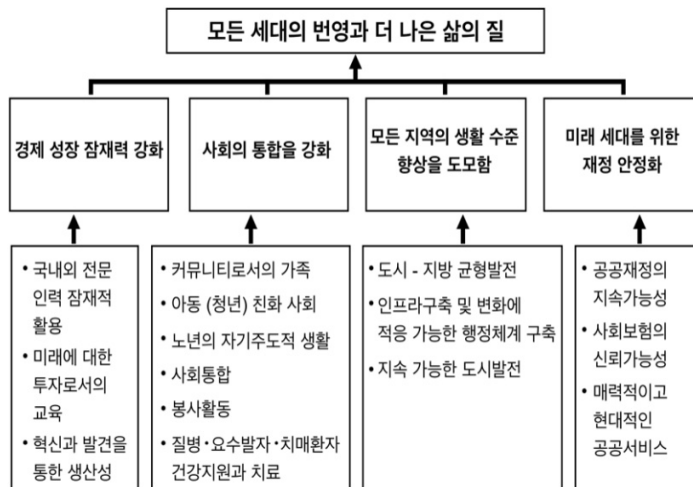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여러 사회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
- 후기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 연령대에 진입한 데 기인하며, 이러한 변화는 건강상의 이유로 의존성이 높아지는 인구 비율이 늘어남을 의미하여 의료, 장기요양 정책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음

2) 고령정책 현황

□ 인구전략(Demografiestrategie)

-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사회적 위기의식이 확산되었으며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슈 등이 제기됨
-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는 슬로건으로 2012년 4월 인구전략이 발표되었고,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구와 경제,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주제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함
- 핵심목표로는 ‘경제성장 잠재력 강화’, ‘사회통합’, ‘모든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가 있고, 각 핵심 목표별 추진과제가 제시됨

[그림 3-8] 독일의 인구전략 체계



자료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5), p.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고령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p.55. 재인용.

○ 2015년 발간된 인구전략 보고서를 참고하여 인구전략 체계에서 고령화 대응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전문인력 잠재적 활용 : 고용률 확대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일 가정 양립, 교육 및 재교육 기회 확대, 이주 노동자 활용 등을 원칙으로 함. 특히 ‘근로 능력 장기간 유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일자리, 상담 제공 방안을 제시함
-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생산성 확보 : 디지털 경제와 사회, 지속 가능한 경제와 에너지, 혁신적 노동 공간,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등의 우선순위 있는 미래 과제를 설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함
- 노년의 자기주도적 생활 :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주택 내·외부 환경을 노인의 활동에 적합하게 조성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질병·요수발자·치매환자 건강지원과 치료 : 예방과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수발서비스 확충 및 기술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원격 의료를 강화하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도 지원하도록 함
-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 : 유럽연합의 안정화·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공적 지출의 우선순위 마련,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 세제시스템 개선, 예산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
- 사회보험의 신뢰가능성 : 공적연금, 건강보험, 수발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 노인보고서(Altenbericht)

- 1993년을 시작으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주도로 매 의회 임기마다 ‘노인보고서’가 발간됨
- 늙어가는 것은 다양성의 하나라고 봄. 연령의 이질성과 고령자의 참여 기회를 기술하며 최근의 주요 변화와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발전을 제시함
- 노인보고서는 고령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노인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지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독일 정부는 고령정책에서 핵심적 이슈를 선정하여 주제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업함
- <표 3-28>은 노인보고서(Altenbericht)의 주요 주제를 정리한 것임

- 1993년 구동독과 구서독 노인의 생활상 차이를 중심으로 다뤘던 1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1998년에 발간된 2차 보고서는 인구학적 변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현상이 가족, 건강, 주거,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노년의 주거’ 현황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 2001년 발간된 3차 보고서는 독립적, 활동적, 생산적 노화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제시하고, 2002년 발간된 4차 보고서는 후기고령인구의 증가에 주목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2006년 5차 보고서는 고용, 교육, 가족과 개인적 네트워크 등에서 노인이 가진 잠재력을 분석하여 제시함
- 2010년에 발간된 6차 노인보고서는 의존적, 수동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노인상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함. 2016년 발간된 7차 보고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심도 있게 다룸
- 2020년 8차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노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2018년에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노인과 디지털화’라는 주제로 고령자보고위원회에 위촉함
 - 노인들이 디지털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노인의 삶의 영역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노년의 사회참여,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 설계, 주거공간 및 사회공간 개발, 구호구조의 설계와 노년기의 유동성 및 생활 등에 관해 다룸

〈표 3-28〉 노인보고서(Altenbericht) 주제

발간 차수(연도)	주제
1차(1993)	구동독과 구서독 노인의 생활상 차이
2차(1998)	인구학적 변화가 가족, 건강, 주거,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년의 주거
3차(2001)	노인과 사회-독립적, 활동적, 생산적 노화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
4차(2002)	후기고령자의 위기, 삶의 질, 지원-치매 환자의 삶의 질 개선
5차(2006)	경제와 사회에서의 노인의 잠재력-세대결합에서의 노인의 역할
6차(2010)	미래지향적 노인상 정착
7차(201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의무, 공동 책임-미래 대응력 있는 사회 조성과 유지
8차(2020)	노인과 디지털 혁신

자료 : BMFSFJ(2020). 노인보고서에서 재구성.

3) 영역별 고령자 정책 대응 및 사례 분석

- 독일의 경우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금, 소득, 고용, 건강, 주거 등 분야별로 주요 법안에 관련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소득 및 일자리

인구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됨. 독일 정부는 ‘중 고령자가 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도록’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는 소득보장영역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OECD, 2019)

○ 독일 공적 연금제도

-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함. 노인들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가치의 추구 및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재정안정화 과제를 가진 연금제도는 수차례의 개혁, 개정, 조정 작업을 거치며 발전함. 이를 통해 최근 사적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1950년대 이후 연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독일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1980년대에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가열됨
- <표 3-29>는 연도별 독일 연금 개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1992년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한 최초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인정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인정급여의 수준을 낮춤. 또한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면 매달 0.3%씩 감액하고, 완전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65세)보다 늦게 수급하면 매달 0.5%씩 증액하도록 함
 - 2001년 ‘리스터(Riester)연금개혁’을 통해 급여수준의 안정보다 재정안정을 우선으로 하여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인 리스터연금제도를 도입함. 당시 19.1%인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는 20%, 2030년까지는 22%를 넘지 않게 하는 목표를 명시함.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세대 간 형평성 조정계수’를 도입하여 평균 연금 수급액을 70%에서 2030년까지 64%로 낮아지도록 함. 단,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연방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2004년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법’을 통하여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금 산정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함. 그 결과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이 악화되면 연금액을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없이도 자동으로 미세한 조정은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의 시행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07년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결정됨.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은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료를 상향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었음. 일반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2012~2029년에 걸쳐 67세로 상향 조정됨(BMAS, 2020).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은 퇴직 시기를 늦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노동시장 자체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독일 중·고령자의 고용 상황에도 많은 변화 초래함
- 2014년 개혁에서는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연금'이 도입됨. 자녀 출생연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1년과 2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통일하여 1992년 이전 출생자녀도 이후에 태어난 자녀와 같이 자녀 양육 인정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한 조치임. 또한 4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는 감액 없이 63세에 조기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에는 조기퇴직을 위해 근로자가 납부하는 추가보험료 납입금 상한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완화함.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은 계속 진행됨. 2017년 1월부터 공식 은퇴연령 이후에도 근로할 경우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기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저소득 고령 근로자의 근로를 더욱 확대하고자 소득 조사 규정을 완화하여 연소득이 6,300유로 미만인 고령 근로자는 삭감 없이 전액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반면 연소득이 6,300유로 이상인 고령 근로자는 추가소득의 40%까지 연금지급액에서 차감됨. 이와 함께 순수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음
- 2018년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주가 추가 기여금의 30%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2019년에는 보장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이 단행되었음. 2025년까지 소득대체율을 최소 48%까지 보장하고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20%를 넘지 않는 이중 보장 장치를 도입함. 이는 보험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 모두를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연방재정을 투입할 예정임

〈표 3-29〉 독일 연금 개혁 연혁

단계	연금 개혁	내용
고령사회	1992	- 조기퇴직 연령 상향 조정 - 부분연금제도(Teilrente) 도입
	2001 노인재산보충법	- 기업연금 확대 -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도입 - 연금액 조정 산식 변경(보험료 부담 부분) - 유족연금 60%에서 55%로 감축
	2002 노인재산법	리스터 지원 도입
	2002/2003 보험료율보장법	보험료율을 19.5%로 제한함
	2004 연금보험지속성법	연금액 조정산식 변경(지속가능성 계수 도입)
초고령사회	2007 연령제한조정법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결정
	2013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단계적 상향 조정 시작됨
	2014	연금조항 변경(모성연금, 63세 장기가입자 연금)
	2017	순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2018	기업연금 추가 확대조치
	2019	2025년까지 소득대체율 최소 48%까지 보장하고 보험료율 20% 초과하지 않는 이중 보장 장치 도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국제기구와 주요 선형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p.128 재구성.

○ 독일 고령자 고용정책

-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중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됨. 1970년대 이후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던 것에서 조기퇴직을 막고 생애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고용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임
- 하르츠 개혁(하르츠 I 법, 2003년 1월 시행)
 -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실업수당Ⅱ로 통합함에 따라 실업부조를 수급하던 고령근로자는 기초 보장 수준의 실업수당Ⅱ를 수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었음. 현금급여 삭감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고령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규정이 도입됨

☞ 하르츠개혁

- 독일의 고용정책에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개혁으로 근로 능력에 따라 이원화된 실업자 대책을 골자로 노동시장 현대화 추구
- 이는 근로 유인을 제공하고, 고용지원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의무를 복지급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독일식 '노동연계복지'의 상징적인 개혁
-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도 개선안 제시
- 2000년대 이후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사회보장과 노동요건의 연계는 더욱 밀접해짐

* 하르츠보고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선 고령실업자(55세 이상)가 이전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면 부족분을 보조금(Kombilohn)으로 보충해 주며, 고용주에게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 외에도 고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업보험료를 면제하고, 단기간 근로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고령자 고용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교량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령자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51세 이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실업에 직면한 근로자가 취업하면 이전 직장파 새로운 직장 임금 차액의 50%를 실업수당 지급권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 지급하는 고령근로자 임금보전 정책이 결정됨
- 계절노동 같은 합당한 사유가 없어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령을 59세에서 53세로 낮추어 고령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함(파트타임기한설정법 제14조 제3항). 이 규정은 2006년 말까지로 적용 기간을 제한했음
- 고령근로자 고용기회개선법(2007년 4월 19일 개정)
 - 고령근로자 임금보전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함.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요건을 12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실업수당 지급권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지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 또한 고령근로자 임금보전 규정이 2009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적용기간을 연장함(사회법전 3편 제421조 제1항, 제2항, 제7항)
 -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령을 59세에서 53세로 낮춘 것이 유럽법원에서 연령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결되자, 적용대상과 적용기간을 구체화함. 즉 적용대상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조업단축수당을 받거나 또는 공공부분에 취업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적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함(파트타임 · 기한설정법 제14조 제3항)

- 사용자에게 지급하던 고령근로자 취업지원금(Eingliederungszuschuss für Ältere)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면서 지급기간을 연장함. 수급요건은 51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실업수당을 수급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또는 공공일자리에 종사하고, 사업주가 1년 이상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취업지원금 규모는 임금의 최소 30%에서 최대 50%이며, 지원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이며, 지원금은 매년 10% 이상 삭감됨
- 고용 상태인 65세 이상의 35%는 노동 소득이 주 수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61%에 해당하는 다수는 연금이나 보유자산이 주 수입원이며 노동 소득은 부가적 수입에 해당한다고 함
- <표 3-30>은 최근 실업 보상 및 고령층 노동시장 관련 정책 도입 현황을 정리한 것임

〈표 3-30〉 독일 실업 보상 및 고령층 노동시장 관련 정책 도입 현황

단계	구분	연도	주요 내용
고령사회	보상관련 실업수당	2004	• 고령층 실업 수당 최대 지급 기간 하향 조정(최대 32개월→ 18개월) • 자격요건 강화 - 이전 경력 기록(2006년 시행)
		2005	• 사회 보조 및 실업 지원 통합(새 실업 수당UB II 정책)
초고령사회		2008	• 고령층 실업 수당 최대 지급 기간 상향 조정(최대 18개월0)24개월)
고령사회	고령층 노동시장 관련	2003	• 실업 상태인 50세 이상(UB / 대상)에게 고용 수당 지급 • 한정 고용 상태 대상 사회 보장 기여금 완화
		2004	• 고령층 포함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고용했을 시 회사에 일시 임금 지원금 지급 • 고령층을 위한 특별 지원을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일반 임시 임금 지원금으로 통합
초고령사회		2007	• 50세 이상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금 재도입 •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임금 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자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2018). 「50+ 해외동향 리포트 2018」. p.33을 참조하여 재구성.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한때 50대 이상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없는 상황임. 다만 취약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중 고령자가 포괄되는 식인데, 특히 「고용촉진법」(사회법전 제3권, SGBIII)은 고용촉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100여 개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고령자 대상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31>과 같음

<표 3-31> 독일 중·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차별점	공통점
노동의 새로운 질 이니셔티브 (INQA)	기업이 중·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차원의 모범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고령 근로자 채용 기업 지원
기업 가치-사람 프로그램		
WeGebAU 프로그램	저숙련근로자 및 45세 이상 중·고령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향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료 : 조광자(2022). 「독일 중·고령자의 고용 및 사회참여」, 고령사회의 삶과 일, 2022 가을호 Vol.8, 17-18. 재구성.

- 이니셔티브 50 plus 어젠다가 추진되는 가운데 ‘고령자 지역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됨. 50+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령 친화적인 작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50+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함. 독일의 고령자 고용 장려 정책으로 Initiative 50 Plus 프로그램과 그 외 Silverstars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음

☛ Initiative 50 Plus & Perspektive 50 Plus

Initiative 50 Plus *독일 연방 사회노동부

- 법적 근거
 - 「고령자 고용 기회 개선을 위한 법」 발효 (2007)
 - 조기퇴직을 줄이고 고용자 근로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모두 유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제시
- 목표
 - 실업 중인 50-64세 대상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중고령자의 근로 능력 향, ‘근로하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업들의 사고 전환 주도
- 정책적 개선 사항
 - ① 새 일자리에서 전 직장에서의 낮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최대 2년간 이를 보상에 줌(첫해는 50%, 두 번째 해는 30%까지 보상). 이는 낮은 임금수준이 자발적 실업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
 - ② 고령자를 고용한 회사에게 임금 및 교육 훈련비를 일정 부분 제한된 기간 동안 제공함. 이상의 피고용인이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업 상태인 고령자도 훈련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인에게는 52세 이상의 피고용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함

Perspektive 50 Plus *고령자 지역 고용지원 프로그램

- 목표
 - 중고령자(만 50~64세) 장기실업자의 고용 기회 개선,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 고령자의 구직활동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참여도 활발하게 돕고자 함

- 특징
 -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에 지역의 높은 자율성 부여
- 주요전략
 - '지역 주도'로 최적화된 고용 패키지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지역 정책수립 단계에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
 - 각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체 고용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
- 주요서비스
 - 정부 부처,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약한 목표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수준이 결정되고 지역 고용센터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별로 스스로 활성화 방법, 조직구조, 제3의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된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함
 - 각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인구 고령화 진행에 따른 시민의식 개선, 시민참여 유도 등 3단계 발전과정을 거쳤고, 2015년 종료됨

Silverstars

- 바덴뷔르템 지역. 23개의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50+ 고용에 관심 있는 회사를 위해 관련 지원혜택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단순 고용센터뿐 아니라 지역 사업자 연합, 지역 교육기관, 무역단체, 종교단체까지 연합하여 이뤄낸 성과로 평가됨

□ 건강 및 지역 돌봄

○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 우선 정책

- 고령자들을 위한 돌봄 관련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주요 인프라를 통해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한 통합 보조 혜택을 지원함
- 노인의 건강은 생산적 자원으로서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예방 컨퍼런스'를 4년 단위로 개최하여 국가의 예방 전략을 작업하고 '예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 지역사회 돌봄 강화

- 독일의 수발보험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의 필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가족의 돌봄 자원은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이로 인해 사회부조 재정이 과부하에 걸려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도입됨
- 독일 전역에 수발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발지속발전법((2008년) 도입 이후 수발수요자와 가족은 적절한 수발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 수발지속발전법에서는 또한 수발휴가법을 도입하여 가족 요양 지원을 강화함

- 인지장애 노인들이 등급 산정에서 신체장애 노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발강화법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결됨. 1차부터 3차까지 이어진 일련의 개혁들은 수발수요자와 가족, 의료 및 수발 서비스 제공자의 생활 또는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신체 기능 장애 외에 인지장애도 고려하고자 함

① 1차 수발강화법(2015년)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수발자에 대한 수발 휴가 지원을 강화함. 수발지원 수당, 가족수발 휴가법이 도입되었고, 수발로 인해 노동시간이 단축된 데 따른 임금손실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됨. 또한 요양시설의 돌봄 인력을 확충함

② 2차 수발강화법(2016년)

'수발필요'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수발등급 판정 도구를 전면 정비함. 이로 인해 치매 등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거나, 새로 수발등급을 받을 수 있음

③ 3차 수발강화법(2017년)

수발보험의 지원 내역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수발가족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 법의 발효 이후 지자체는 수발 상담 내용, 수발교실과 수발지원센터 설립 등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게 됨

- 「제7차 연방정부 노년층 보고서」에서는 돌봄 및 돌봄 업무 설계를 촉구하고, 돌봄 공동체 지침의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복지다원주의를 제시함
- 보충성은 이해 당사자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료 행정을 줄임으로써 국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는 것이 목적임.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국가 외에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복지 생산자들, 즉 시장(기업), 자원봉사 부문(자선단체, 비영리), 비공식 부문(가족, 친구)에 대해 설명함
- 독일은 사회사업의 구상과 실행에 시민, 지역복지협회 대표자, 행정 및 정치 관계자를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사회계획을 추진함
-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독일에서 시행된 노인돌봄계획에 기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과거의 노인돌봄계획과 달리 통합사회계획은 노인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음. 지자체의 업무에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자기 결정권 및 사회, 정치, 문화 참여 증진이 포함됨
- 지자체가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생활 여건에 대한 다층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그러므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젊고 활동적인 고령자와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자의 수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 교육, 건강, 돌봄, 스포츠, 문화, 주택, 도시 계획 등 가능한 한 많은 영역을 서비스 설계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 경제와 노동시장 또한 고령화 사회의 사회계획에서 고려해야 함
- 「제3차 요양강화법」 도입과 더불어 돌봄 인프라와 관련한 지자체의 관리 역량이 더욱 확대됨. 지역 돌봄 상담,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음
- 여기에는 돌봄 조언 등의 자문 서비스와 적합한 주택 공급이 포함됨. 지역의 돌봄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연방 주에 의해 돌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3차 요양강화법에 따라 요양보협기금이 지원됨

□ 사회참여 및 학습

○ 은퇴 후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 은퇴 후 자원봉사 참여는 직업적 지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높은 지위를 가졌던 경우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위의 상실을 자원봉사를 통해 상쇄한다는 보상효과로 볼 수 있음
- 고령층으로 편입하는 연령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상황은 증가하는 고령층 자원봉사를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음
- 독일은 일반적인 자원봉사부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까지 연결하고 있음
- 독일의 퇴직자들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인생2막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 독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대학에서는 겨울학기 동안 3만 8900여명의 청강생이 등록했는데, 이들 가운데 47%는 60세 이상 노인임. 이들의 참여율은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었음. 더욱이 연금생활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은퇴 후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

- 노인의 사회참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60~69세 노인들의 37%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특히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기부재단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음. 현재 독일재단연방협회에 등록된 단체만 1만 3,500개임
- 시니어전문가서비스(Senior Experten Service, SES)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보유지식 및 기술을 등록하고, 국내외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함. 2016년 기준으로

- 등록한 전문가들의 수가 12,000명을 넘었고, 한해에 수행하는 과제가 5,600개에 이르고 평균 연령은 69.4세였고, 농업, 자동차 공업, 교육, 경제, 경영 등 산업분야도 다양함
- 독일은퇴자협회(DSL)는 50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 노령화 관련 질병인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하다 최근 3년 동안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 건강과 복지, 재무설계, 소비자 교육, 여행, 스포츠 등 50세 이상 고령층을 대표하는 비영리민간단체(NPO)로 크게 성장했음
 -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접근은 물론, 사회적 이슈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DSL은 공청회와 캠페인 활동을 자주 시행함
 - DSL은 ‘액티브’라는 잡지도 1년에 4차례, 2만 5000부씩 발간하고 있음. 이 잡지에는 건강을 위한 운동정보뿐만 아니라 질병 생활관련 정보, 소비자 재무정보, 정책관련 이슈 등을 골고루 다루고 있음

독일 시니어사무소(Seniorenburo)

- 주관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의 후원에 의해서 연방시니어 사무소협회가 총괄 운영
- 사업개요
 - 도입 초기에는 44개소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 기준 전국 344개소 운영 중임
 - 목적 :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응집력을 제고함
- 주요 서비스
 - 운영은 노인들의 자원봉사에 기반을 둠
 - 5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자, 지역 여건, 활동 영역에 따라 각기 다양한 형태로 각 사무소별 프로그램이 진행됨
 - 주요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상이하여, 독서멘토, 수학교치, 방과후 숙제도우미, 조부모역할, 교육멘토, 자원봉사관리자, 컴퓨터강사, 문화 및 환경프로젝트 활동, 치매도우미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서 단순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등에 이르는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음



독일 시니어사무소 컴퓨터수업 장면 및 안내게시판

사진출처 : (<http://www.scc-berlin-mitte.de/kontakt.html>). (<http://www.seniorenbueros.org>).

- 독일은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 산업을 진행하고 있음. 노년층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퇴직 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평생 열린 교육

- 노인교육, 노년기 교육, 노인 아카데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독일의 성인 교육의 역사는 1950년대 말, 독일이 경제적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 토대가 마련됨
- 독일의 대학이나 시민 대학에서 제공하는 특수 강좌들은 세분화되어가는 시니어 세대의 관심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1974년에 개정된 연방 사회 보조법 또한 노인의 경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둠으로써 은퇴한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뿐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 평생 교육 체제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고등 교육 체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편성되었으며 ‘대학평생교육(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대학에서 정규 학생을 제외한 일반 성인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라는 개념이 등장함
- 대학 중심의 노인 교육은 최고의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일반 시민을 위해 학문과 지식을 전파하는 사회봉사의 기능을 사회로부터 요청 받아, 본연의 엘리트 교육과 함께 평생 배우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성인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대학 체제의 변용을 수용한 것임
- 대학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독일만의 특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함
- 대학은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학령기 학생은 물론 은퇴 이후의 고령자에게도 적절한 교육 형식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함
 - 노인학과 정규 학생 또는 청강생의 자격으로 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
 - 장노년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규 강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대학마다의 운영 방침에 따라 학위가 수여되기도 함
- 고령자 대상 대학 개방의 의의는 단순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선 인생의 후반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의 문제이므로 해당 세대의 다양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은퇴 이후 중장년층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와 소통할 통로를 제공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표 3-32>는 고령자에게 열린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정보를 정리한 것임

〈표 3-32〉 은퇴자 수강 가능 과목 또는 프로그램 제공 지역별 대학 리스트

지역	학교	형태
바트 마인베르크	빌레펠트대학교	노인 대학
밤베르크	밤베르크 오프리드리히 대학교	청강 제도
베를린	베를린자유대학교	청강 제도(석사 수업 청강 가능)
	베를린공과대학교	청강 제도 *도시, 환경, 영양과학 학부로 제한 *4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브라운슈바이크	브라운슈바이크공과대학	청강제도 *역사, 철학, 예술, 건축 학부로 제한
브레멘	브레멘대학교	청강 제도
캠니츠	캠니츠공과대학	노인 대학 청강 제도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공과대학	청강 제도 *인문, 사회과학 학부로 제한
드레스덴	드레스덴공과대학	청강 제도
에를랑겐/뉘른베르크	에를랑겐/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교	청강 제도
에르푸르트	에르푸르트대학교	청강 제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청강 제도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교육대학교	청강 제도
함부르크	함부르크대학교	노인 대학 청강 제도
하노버	라이프니츠 하노버대학교	청강 제도 *문화학, 미학 교육, 디자인 학부로 제한
카셀	카셀대학교	청강 제도
마인츠	요하네스 쿠펜베르크 마인츠 대학교	청강 제도
원헨	원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청강 제도
윈스터	윈스터대학교	청강 제도
파더보른	파더보른대학교	청강 제도
부퍼탈	베르기슈 부퍼탈 대학교	청강 제도

자료 : www.studieren-im-alter.de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2018). 50+해외동향 리포트 2018 p.61-62. 재인용.

□ 고령친화환경

- 독일의 경우 고령친화와 관련된 별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요 법 안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령친화주거지원을 위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사회법 제12편 71조에 따라 고령자들에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집단주거시설법 3조에 의거하여 집단주거시설은 교통시설, 위생시설 및 유틸리티시설, 레크리에이션, 주거공간과 같은 최소 요건이 보장됨
- 독일 정부는 고령자 주거정책에 초점을 두고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지속거주 희망 고령자의 커뮤니티 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음
-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 실현을 목표로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공간에서도 수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고령자 맞춤형 주거주택으로 개조
 - 독일정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93%가 자기 주택에 거주하고 싶다고 함. 이 같은 선호도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고령자 주거에 적합하게 개조할 수 있도록 대출 승인을 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에 적합한 개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대 5만 유로(약 6700만원)를 10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또한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요양보호법에 의해 요양등급을 취득한 자가 거주 편리성을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할 때 사회법전 11권 양호보호법 40조항에 따라 개인당 최대 4000유로(약 54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요양등급을 취득한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개조할 때는 최대 1만 6,000유로(220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음. 지원금 제도는 자가 소유주뿐만 아니라 월세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요양보험회사가 주택개조와 관련된 지원금 신청을 담당하며 관련 정보는 요양·수발 지원전국 각지의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음
 - 고령자 적합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건축 항목은 아래 <표 3-33>과 같음

〈표 3-33〉 고령자 적합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건축 항목

구분	항목
엘리베이터	• 지면과 같은 높이의 입구. 출입문 확대 및 사용하기 편리한 스위치 높이로 개조 (휠체어 사용자)
계단	• 높이 및 폭 조절 • 난간 손잡이 설치 • 리프트 및 좌식 리프트 설치
중앙현관	• 출입문 크기 확대 • 편리한 시건장치 설치 • 편리한 높이로 우편함 개조 • 저시력자를 위한 눈에 띄는 지번 표시 • 문턱 제거, 자동개폐문 설치 • 인터폰 설치
주거공간 내부	• 욕실 대신 부엌에 세탁기 자리를 설치하여 욕실에서 세탁기로 인한 누수, 누전사고 방지 •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욕실 바닥재로 교체 • 안전한 난방설비로 교체 • 전등 스위치, 콘센트 위치를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바꾸기 • 문 크기 확대 및 문지방 턱 제거 • 응급상황을 위한 비상호출벨 설치
부엌	• 냉온수 조절 용이한 단계형 수도꼭지 •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 경우에 따라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 • 자동개폐장치의 부엌 수납장
욕실	• 기존의 일반형 욕실 설치 금지 • 냉온수 조절 용이한 단계형 수도꼭지 • 욕조에 들어가기 편리하게 설계 변경 • 미끄럼 방지용 바닥 및 특수 세면대 • 특수 샤워부스 설치(욕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변기, 수도시설, 샤워 의자의 높낮이를 입주민에 맞게 개조
침식	• 침대에서 사용이 편리한 전등스위치 및 콘센트로 바꾸기 •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위해 자동접이식 침대 설치

자료 :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5>. 2021.05.25. 복지타임즈 기사.

- 독일 정부는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이고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레겐스부르크시(Regensburg)에서 진행하고 있는 ‘좋은 이웃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음

☞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Regensburgs Nette Nachbarn: ReNeNa□(좋은 이웃 사업)

• 사업 개요

- 주관 : 노인 및 기초사무소(Senioren und Stiftungsamt)
-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여 지역의 노인들을 보살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상담, 돌봄서비스, 사회교육,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이에 포함됨
- 목적 : 노인의 자립적 생활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

• 주요 서비스

- 주거 개선 관련된 서비스 등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큰 규모의 공사는 전문적 설계 서비스와 지역사회자원 및 재정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짐
- 특히, 전문적인 설계는 건축 관련 전문가가 시에 근무하고 있어서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사진출처:

<http://www.regensburg.de/leben/gesellschaft-u-soziales/senioren/hilfe-im-alter/wohnen-leben>

○ 노인복지주택 거주

- 독일의 각 지방정부에서는 기존의 주택단지를 노인이 거주하기 편리한 곳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 최소 60세 이상, 스스로 혹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함
- 주택은 방, 발코니, 부엌, 욕실, 지하실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함. 이외에 주민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기타 편의시설로 도서관 및 체력단련시설을 갖추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은 시내 중심가로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지, 취미활동과 사교를 위한 노인복지관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응급 상황 시 구급차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는지 등도 고려되어야 함
- 담당기관과 연결돼 편리하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임



사진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독일 부동산회사 Gewag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모습」.

○ 독일 연방정부의 주거복지 프로젝트

- 독일연방 예산 규정 제23조와 44조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인 지원'에 의거해 지급함
- 노년의 삶을 자기 집에서 보내기 위해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음

○ 세대통합 프로그램

- 독일의 고령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대 간 통합 실천 프로젝트'에서는 그동안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고안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있음
- 독일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사례로 뉘른베르크시의 '모든 세대를 위한 운동공원' 조성 사업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티브하우스 등을 들 수 있음

☞ Lebens wie gewohnt (기존에 살았던 것처럼 살기) 프로젝트

- 2020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진행
- 건설 부동산 회사, 주택 협동조합 등이 기존의 주택을 고령자맞춤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
- 프로젝트에 착수한 시행사는 건물 내 외부의 공간을 고령자 입주민이 이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조함
- 노인들이 디지털화된 소통 창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프로젝트 내용에 포함됨
- 요양보호사, 담당 주치의, 가족, 노인복지 단체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연결 네트워크를 자택에 설치해 주는 것임
-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전기 자전거를 쉼어링하는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음

☞ Sterben, wo man lebt und zu Hause ist (죽음의 순간까지 집에서 살기) 프로젝트

- 집에서 치료 및 보호를 받으며 자신이 살아왔던 공간에서 생을 마감하게 함
- 2020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진행됨
- 호스피스와 연명치료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인력 확충,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임

4) 고령정책대응전담기구 사례

(1)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이하 BMFSFJ))

□ 기관 개요

- BMFSFJ는 가족, 노인, 어린이 및 청소년, 평등, 복지, 인구변화 대응 등의 관련 정책 분야를 주관함
- 대상별 주요 정책목표
 - 노인 정책: 노년기의 독립적 생활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
 - 가족 정책: 일과 가정, 양육의 병립을 통한 안정적 삶의 영위를 가능하도록 지원함
 - 어린이 및 청소년정책: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출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좋은 양육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보장함

☞ 뉘른베르크시 「모든 세대를 위한 운동공원」 조성 사업

- 뉘른베르크시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출발 단계서는 노인놀이터 조성이 목적이었음.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세대 간 교류 및 통합의 중요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든 세대가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운동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함
- 공용 공간의 운동 공원은 레그트레이너의 강화 운동부터 흔들리는 다리에서의 균형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함. 훈련장비는 모든 연령대에 이상적이지만 특히 노인들에게 적합함. 운동 공원은 일년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사진출처 : https://www.nuernberg.de/internet/sportservice_nbg/bewegungsparks.html

☞ 크리에이티브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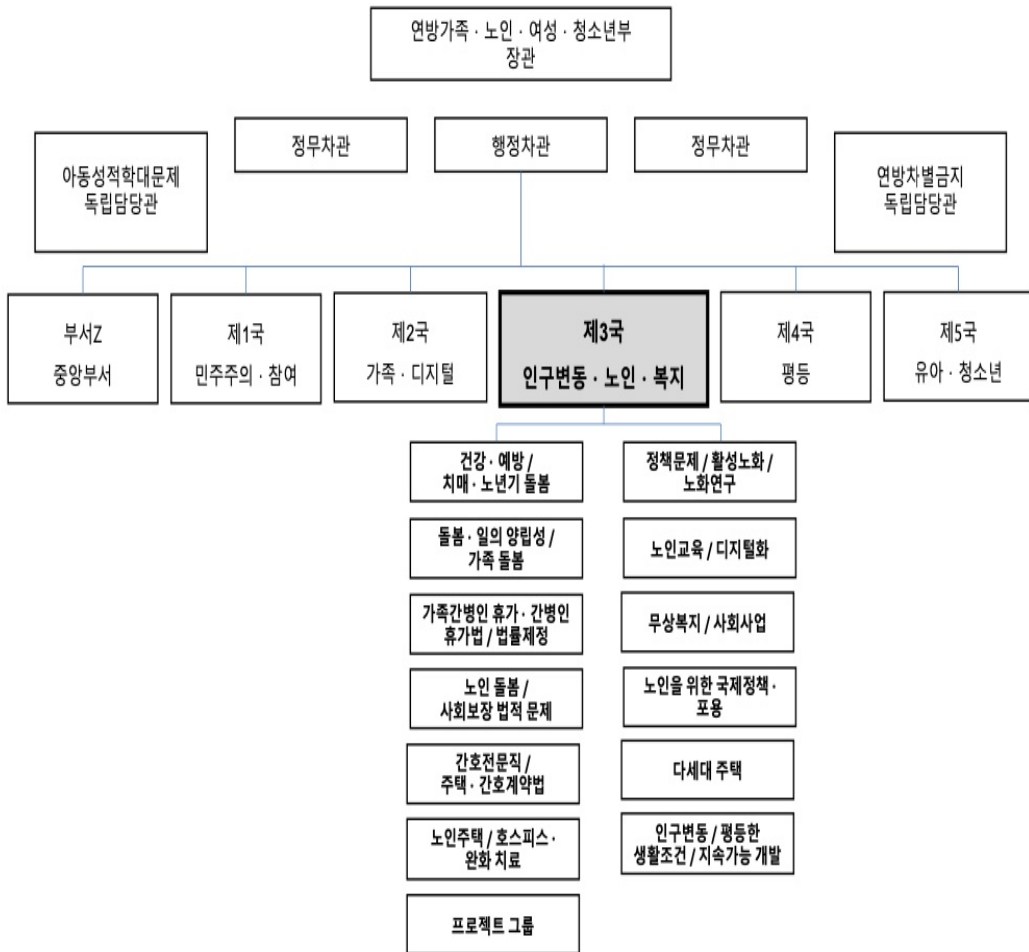
- 동네의 한 공간에서 여러 수업과 이벤트 등을 개최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동네 허브 역할을 담당함. 고령자, 중장년 세대를 위한 피트니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언어 수업, 음악 수업, 청년 연극수업, 프랑스어 수업, 요가와 명상 등 주제가 다양함

- 평등: 여성과 남성은 일생동안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또한 가족 내에서 동일한 기회를 제공 받도록 함
- 참여와 사회활동(자원봉사): 적극적 자원봉사, 협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식 강화, 환경 조성을 지원함

□ 조직 및 운영체계

- 주요 6개부서와 연방 차별 금지 독립담당관실 및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독립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70개의 부서에 약 9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여성 직원이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관리 직책의 59%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
- 부서Z는 전반적 조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제1국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제2국은 가족과 디지털 정책, 제3국은 인구변동, 노인,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제4국은 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5국은 유아, 청소년 관련 정책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 [그림 3-9]는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의 개괄적 조직도로 인구변동, 노인,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3국을 중심으로 재도식화함
 - 제3국은 건강과 예방, 치매와 노년기 돌봄, 간병인에 관한 법률제정 및 사회보장의 법적 문제에 대해 담당하고, 또한 노인주택 및 호스피스 정책, 노인의 디지털화에 맞춘 교육 지원과 무상 복지 및 사회사업, 그리고 인구변동, 평등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도 다루고 있음

[그림 3-9] 독일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개괄적 조직도



자료 : <https://www.bmfsfj.de/bmfsfj/ministerium/ministerin-hausleitung/organigramm>. 재구성.

□ 주요 추진과제(고령정책 중심)

○ 노인 돌봄 정책

- 현재 독일에서 약 430만 명의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하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음. 가족 간병인 휴가법(Family Care giver Leave Act)은 가족의 일과 간병의 양립을 도움

☞ 간병인 휴가법 & 가족 간병인 휴가법

- 간병인들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까운 친척을 쉽게 돌볼 수 있음
- 간병인은 가까운 친척의 급성 치료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조직하거나 이 기간 동안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 10일(근무 일 기준)동안 직장을 비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 이 기간 동안 최대 10일 동안 보호자 보조금이 제공됨
- 직장에 결근할 권리는 고용주와 회사 또는 사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됨
- 집에서 가까운 친척을 장기간 돌보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직장에서 전체 또는 부분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직장 소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
- 간병인 휴가에 대한 권리는 정규 직원이 15명 이하인 사업장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수요를 확보하고 간호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교육을 개편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치매와 함께 생활하고 대처하는 것임.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특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함
- 돌봄 대상자들의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생활의 영위를 돕는 연령에 맞는 생활공간 및 환경의 설계와 지원이 구축됨
- 독일 연방은 유엔(UN), 유럽 평의회, 유럽 연합(EU) 및 파트너 국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기구에서 노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독일 케어 현장’을 통하여 도움과 돌봄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짐. 이러한 권리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제시함
- 투입되는 실무자와 협력하여 훈련 및 추가 교육 자료를 개발함
- 주택 및 케어 계약법(WBVG)을 통해 연방 정부는 가정법 영역에서 간호 또는 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민법 계약을 규제함. 주택 및 케어 계약법은 2009년에 발효되어 다양한 법률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가을에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1995년 장기요양보험과 사회규범 SGB XI가 도입되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발됨
 - 모든 법정 및 민간 건강 보험에 포괄적인 보험의무가 있음.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사회 장기 요양 보험 시스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 이에 상응하는 민간 의무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됨

- 개호 보험의 일차적 목표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스스로 결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험으로부터 받는 시기와 혜택은 간병 기간, 독립성 및 능력에 대한 제한 정도, 간병 유형에 따라 다름

○ 노인 치매 예방, 관리 정책

- 2018년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 보건부는 국가치매전략개발 프로세스를 시작함. 이는 국가, 복지 서비스 협회 및 연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가치매전략의 주요 활동 영역
 - 치매환자 현장 사회참여 구조 개발
 - 치매환자와 가족지원
 -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 및 간호 개선
 - 치매에 대한 우수한 연구 촉진

○ 세대통합 정책

- ‘세대통합 센터’ 운영을 통하여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전국 약 540개의 센터가 운영중임
- 각 지역의 센터는 다른 지역 이해 관계자 및 지역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 인프라를 연결하고 보완함
- 세대통합 접근 방식은 청년과 노인이 서로 교류하며 지식 교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설정함. 세대 간의 상호 작용은 일상적인 기술을 육성하고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며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함

○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 노인의 주택은 삶의 질, 행복, 웰빙을 보장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함
- 관련 정책의 초점은 공유 주택, 연령에 맞는 주택 개조, 주변 지원 주택, 지역 지원 및 자문 서비스, 이웃 지원 계획,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생활 조건 개선에 있음
- 노후 주택 개선은 지역 환경, 기반 시설, 사회적 접촉 및 통합의 문제임
- 사회복지 주택건설지원의 일환으로 장애물이 없고 노인친화적인 주거건설을 지원함
-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s)를 통하여 14개 모범 주택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함

〈표 3-34〉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등대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자택생활	• 젊은이와 노인을 위한 센터 • 지역 발전소 • 자발적 고령자 자문위원 • 어르신들을 위한 터치 포인트
공유 또는 공동주택	• 노인과 젊은이의 상호 지원 •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 • 공유 주택 프로젝트
주변 보조 주택 협동조합	• 세대 간 주택 프로젝트 • 주택 조성 등 • 커뮤니티 사무소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가 생활	• 자기 조직적, 다세대 주택 • 동네 공유주택 • 연령에 맞는 주택
거주 요양원에서의 생활	• 거주 요양원

자료 : <https://www.serviceportal-zuhause-im-alter.de/english/lighthouse-projects.html>. 재구성.

○ 노인 디지털혁신 정책

- 노인의 디지털화는 노년기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므로, 이에 노인 정책의 주관 부처는 노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함
- 디지털 엔젤스(Digital Angels) 프로젝트
 -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함. 노인 클럽 등 노인들의 요구가 있는 곳에 디지털 천사가 방문함
 - 디지털 제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질문과 요청에 응답하여 두려움을 줄임
 - 농촌 등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 다세대 주택, 노인 사무실 또는 성인교육 센터와 긴밀히 협력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엔젤스가 지역 협력 파트너와 함께 독일 전역 투어를 진행하고 있음
- 노인을 위한 디지털화 및 교육 서비스센터(BAGSO)
 - 연방정부 노인 정책 담당부서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배우고 다루려는 많은 노인의 요구를 지원함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 평생교육
 - 출산율 저하 등으로 고령사회의 요구에 따라 직업훈련 등 평생교육 실시함
 - 연방 또는 주정부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은 노인을 위한 특수 강좌를 개설하며 노인고용을 위해 지역 기업과 협력함
- 고령자 고용을 위한 사업수행
 - 조기은퇴를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재고용기회를 확대함

(2) 독일고령문제센터(Deutsches Zentrum für Altersfragen: D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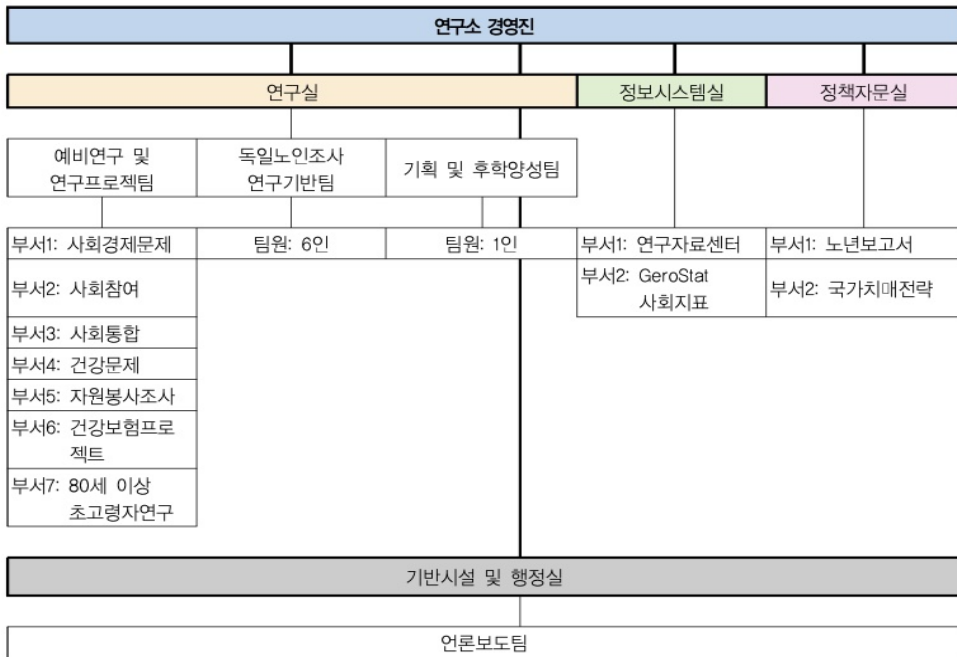
□ 기관 개요

- 독일고령문제센터(이하 DZA)는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후원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1974년 노인의 생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됨
- DZA는 노인의 평생 사회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연방 연구기관으로서 주요 역할은 사회적·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노인의 생활조건, 생활상황 및 생활방식을 조사하는 것임. 이런 연구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적·사회정치적 과제를 위해 학술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자문으로 활용됨

□ 조직 및 운영체계

- DZA의 조직은 회원총회, 이사회, 고문회로 구성됨.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단체의 기부자로서 역할을 담당함
- 법인단체회원은 총 6인으로 구성됨
 -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소속 3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인은 DZA의 이사장, 다른 1인은 이사이고, 학술이사는 대학교수 3인으로 구성됨
- 학술고문회 구성원은 다양한 연방주에 속한 대학교수 총 8인으로 구성됨
- 연구소 인력조직도
 - 연구소 경영진: 연구소장 1인, 연구부소장 1인, 기반시설 및 행정실장 1인, 경영진보조 1인
 - 연구실: 실장 1인, 연구보조 1인
 - 예비연구 및 연구프로젝트팀: 팀장 1인, 부팀장 1인(7개 부서: 23명)
 - 독일노인조사(DEAS) 연구기반팀: 팀장 1인
 - 기획 및 후학 양성팀: 팀장 1인
 - 정보시스템실 실장 1인(2개 부서: 6인), 정책자문실 실장 1인(2개 부서: 1인)
 - 기반시설 및 행정실: 실장 1인, 행정 3인, 정보기술 1인, 도서관 3인
 - 언론보도팀 3인
- [그림 3-10]은 위 내용을 도식화한 독일고령문제센터(DZA)의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나타낸 것임

[그림 3-10] 독일고령문제센터(DZA) 인력조직도



자료: 김춘남 외(2020). 「경기도 고령화 대응 전담기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p. 69.

□ 주요 추진과제

- 독일고령문제센터(DZA)의 주요 업무는 정책컨설팅, 연구, 출판(정보전달서비스)으로 나누어짐
- 정책컨설팅
 - 사회정책 및 고령정책분야에서 필요한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DZA의 중요한 임무임
 - 컨설팅대상은 연방·주·지방정부 차원의 공공행정기관, 사회노년정책과 사회정책의 행위자인 공공복지 및 비영리자율복지단체, 연방·주·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정책과 복지의 영역임
 - 고령정책과제 수립에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연방정부 노년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임
- 연구
 - 고령 문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 정치 및 학술 토론에 연령 및 노화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

- 노인의 생활환경을 고찰하고, 연구프로젝트는 소득활동 및 퇴직, 경제력, 경제적 행동 및 물질적 상황, 건강 및 돌봄·요양, 가족, 파트너십(결혼) 및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에 대한 주제로 수행됨. DZA의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독일노인조사연구(Deutscher Alterssurvey: DEAS)
 - 독일자원봉사조사연구(Deutscher Freiwilligensurvey: FWS)
 - ‘노년의 건강생활-돌봄 필요에 대한 현황’ 연구(독일법정보험공단(GKV) 지원프로젝트)
 - 독일 80세 이상 초고령자 조사연구(Deutscher Hochaltrigkeitssurvey)

○ 출판(정보전달서비스)

- 통계정보시스템에서 간행물과 함께 공식통계, 현장사회조사를 통한 사회노년학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도서관 검색서비스와 간행물을 통해 대중정보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보고서, 정책컨설팅 논문을 출판하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 보급에 기여함
- DZA 라이브러리 서비스
 - 노인학 전문 도서관에는 약 30,000권의 책과 135권이 저널이 있음
 - 노인학, 사회학, 심리학 및 인구학, 노인의 건강관리, 노인 돌봄 및 노인지원, 시민 참여 및 주거, 교육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룸
- DZA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리포트 등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함

[그림 3-11] 독일고령문제센터(DZA) 홈페이지 및 연구보고서



자료 : <https://www.dza.de>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州) 시니어오피스 실무협의회(LaS NRW)

□ 기관 개요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州) 시니어오피스 실무협의회(이하 LaS NRW)는 2010년부터 소속 시니어오피스와 연계하고 지원함. LaS NRW는 주(州)차원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연방 시니어오피스(이하 BaS) 및 NRW의 기타 행위자를 위한 연방 워킹 그룹과 긴밀히 협력함
- LaS NRW는 노인을 위한 연락사무소 및 상담센터 역할을 하는 각 지역의 시니어오피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주요 활동 목표는 모임, 상담, 자격획득교육, 활동촉진 및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자원봉사 및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임
- LaS NRW는 노인과 그 가족의 중심 접점으로서 노년기의 세대 간 공존과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함. 노인 및 지역 파트너와의 집중적인 교류를 통해 노인 사무소는 대상 그룹에 맞는 프로젝트 및 구조를 개발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멤버십 혜택
 - 부처 및 주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노인 사무소의 이익 대변
 - 회원 간 네트워킹 촉진
 - 정기 이메일 뉴스레터
 - 대학교류 지원 및 추진
 - 워크숍 및 세미나 제공
 - 프로젝트 및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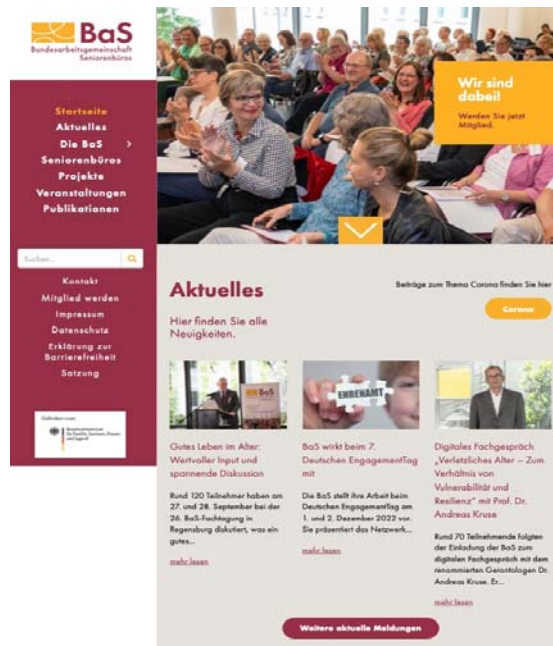
□ 조직 및 운영체계

- LaS NRW는 독일 전역의 약 450개 시니어오피스가 연합한 연방 시니어오피스 BaS에 소속되어 있음. BaS의 구성원은 자동으로 LaS NRW의 구성원이 됨
- 주사무소 : 알렌(Ahlen)시에 위치한 ‘노인과 사회문제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주사무소 운영 및 책임을 맡은 1인이 업무를 담당함
 - 주요 업무로는 다른 주(州)의 시니어오피스 운영 책임자들과 협업, 자격교육과 워크숍 기획 및 실행, 회원 정보전달, 홈페이지 관리 및 광고, 대외업무 등의 홍보활동 등을 들 수 있음

- 운영위원회 : LaS NRW의 내부적 조직과 조정을 위해 구성되고, 2년 임기제로 총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함. 주사무소 및 BaS와 함께 연간 기획을 마련하고, 연례회를 계획 및 수행하며 LaS NRW의 대외대표단에 협력함
- 협력기관 : NRW 주정부 고용·건강·사회복지부(MAGS), BaS를 비롯한 NRW주 노인관련 단체, 치매서비스센터, 주거지원단체, 자원봉사단체, 문화교육기관, 체육활동기관, 학술연구기관 등 16개 기관과 협력 및 연계하고 있음

노인 사무실을 위한 연방 시니어오피스(BaS)

- 약 450개의 노인 사무소 네트워크
-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동기 제공
- 안정적이고 활동적인 자원봉사 활동 여건 조성 및 지원
- 독립적인 후원자 및 지자체 사무소에서 노인 사무소의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주(州) 및 연방 수준에서 정책 문제 해결에 전념함



자료 : <https://seniorenbueros.org>

□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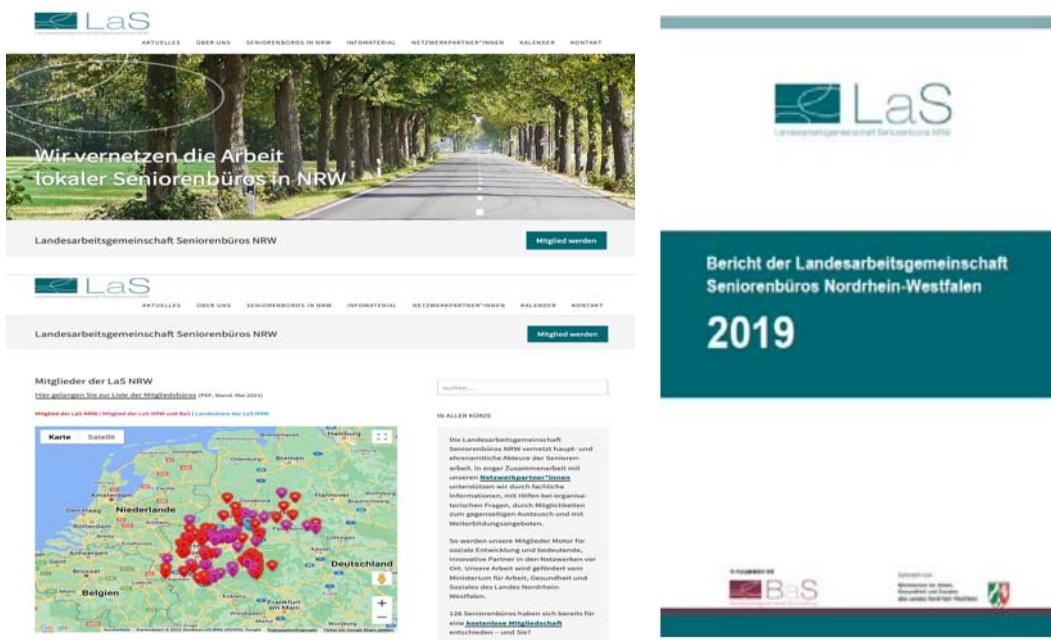
○ NRW 주 고령정책사업 및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전문컨퍼런스 및 자격교육 수행
- 지역 시니어오피스와 협력기관과 교류 및 연계
- 각종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 홍보 활동
- 연간·평가·연구보고서, 지역 시니어오피스활동 사례보고서 발행

○ 각 지역 시니어오피스 주요 실행분야

-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
- 주거, 주거생활환경, 지역사회
- 건강, 예방, 돌봄 지원
- 커뮤니티 조직 및 운영 지원
- 사회적 세대 융합

[그림 3-12] LaS NRW 홈페이지 및 연간보고서



자료 : Landesarbeitsgemeinschaft Seniorenbüros NRW(2020). <http://www.las-nrw.de/>

3. 프랑스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정책

1) 인구고령화 현황

-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알려졌지만, 고령화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느린 편임. 이는, 1990년 중반부터 시행한 강력한 가족지원정책 등 사회정책의 성과와 이민인구의 수용 등으로 출산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성공하여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충격을 선제적으로 잘 통제한 국가로 평가됨(노대명 외, 2020)
 - 프랑스 인구는 65,426만 명으로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음(2021년 기준)
 -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증가율이 2008~2013년 사이는 0.5% 증가, 2014~2016년 사이는 0.4% 그리고 2017년 이후로 0.3%로 낮아지고 있으나 2020년에는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손동기, 2022)
- 프랑스는 이미 19세기부터 인구 고령화를 경험했으며, 특히 1945~1964년에 태어난 프랑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프랑스 인구 고령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손동기, 2022)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3년 16.2%에서 2019년 20.4%로 약 4.2% 증가하여, 프랑스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50년에는 27.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2019년 기준)됨
 -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INED)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 고령화는 2040년 이후에야 느려질 것으로 예측함

2) 고령정책현황(고령화 대응)

- 프랑스 인구관련 정책(가족정책)
 - 프랑스는 19세기 이후 주변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¹¹⁾과 동시에 더딘 인구 증가로 인해, 위기로 인식하여 20세기 초반부터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가족정책을 시행해 옴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3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으며, 출산율 상위 국가 중 지난 50년 사이 출산율 감소 폭도 매우 낮은 편임

11) 1970년대 2.5명대의 출산율이 1995년 1.7명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여 이를 2010년도 2명대에 가까이 끌어올림(프랑스 통계청_이태훈, 2019 참고).

- 197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가 근대적 가족의 해체, 개인화(individualization),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등 가족을 둘러싼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으나,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젠더 불평등 문제와 출산율 문제를 비교적 잘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됨(이상림 외, 2022)
- 1980년대와 1990년대 가족정책은 정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비교적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함. 이에 대한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없이 수당이 지급되는 보편주의적 정책 기조에서 선별 주의적 정책 기조로 이행하였음
 - 둘째,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의 돌봄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서 벗어나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주의로의 이행하였음
 - 셋째, 재정과 통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정책이 출산 정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빈곤문제, 여성의 일·가정 양립문제, 실업문제, 이민자 사회통합문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가족 형태의 다변화, 개인화 등 후기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결과로 이어져 1960년대 초부터 하락하던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직접적 인구정책뿐 아니라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
 -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연금제도 개혁은 퇴직연령을 늦추는데, 1980년대 말의 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은퇴 자격에 대한 기준을 재조정한 것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 연장, 최대연금 지급액을 받기 위한 조건의 강화, 연금 지급 개시 이후 불리해지는 물가연동제 등이 특징임

3) 영역별 고령자 정책 대응 및 사례 분석

□ 고령자 소득 및 일자리

○ 프랑스 연금제도

- 프랑스는 연금 재정상의 수지 불균형 문제, 인구학적인 문제 등 유럽의 여타 국가와 공통된 문제로 연금개혁이 절실하였음. 특히, 프랑스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근로자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37%)로 유럽 평균 50%보다 현저히 낮음

- 이에, 프랑스 정부는 고령자¹²⁾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하고자 1993년, 2003년, 2010년에 연금개혁을 통해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퇴직 연령을 낮추고, 연금 계산 방법을 수정하여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하고자 함(정홍원 외, 2014)
 - 퇴직 연금자문위원회 보고서(2015)에 따르면 연금개혁은 실질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1980년생까지 퇴직 연령을 2.8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치들은 1980년대 말의 연금제도와 비교하면 은퇴 자격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①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② 최대연금 지급액을 받기 위한 조건 강화 ③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세) 인상 등을 특징으로 함
- 프랑스 정부는 고용정책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적연금정책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프랑스 정부가 고령화 단계별로 취했던 정책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35〉 프랑스 고령화 단계별 정책

고령화 단계	대응 정책 내용
고령화사회 (1965년~2000년)	• 실업률 통제를 위해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정책 채택 • 고령층 조기퇴직을 촉진하기 위해 1982년 최대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하향 조정함 • 그러나 연금재정, 사회보장 전체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고령사회 (2000년~2018년)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의 고용유지정책을 명시적 목표로 설정 • 실업률을 낮추는 목표보다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 • 공적연금 지급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여기간을 늘리는 정책
초고령사회 (2019년~)	• 고령자 고용촉진과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 시도 1) 근로 연령층 전체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는 조치(bonus malus) 2) 고용불안계층(precariat)에 대한 사회보험, 특히 실업보험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급여 지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을 연장 3) 레짐 체계를 통합하여 보편적 체계로 단일화시키는 개혁 추진 4) 심화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사회보장세(CSG)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함 5) 1996년 도입되었던 사회보장재정법(LFSS)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재정법을 새로운 법체계로 정비하여 기존 사회보장체계에서 만성적 적자를 유발했던 각 사회보험 레짐의 비합리적 운영체계를 투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료 : 노대명 외(2020). 각 국의 고령화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12) 참고로 프랑스에서 고령자를 규정하는 나이는 유동적인데, 고용 등을 지칭할 때는 50세 이상을 지칭하며, 프랑스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대부분 55세부터를 시니어 인구로 보고 있음. 은퇴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을 지칭함.

- 2019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기여기간을 늘리는 정책¹³⁾에 주력함. 이는 다양한 연금제도 개편안(①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② 사회보험 급여 조정(삭감) ③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세)인상)이 경제성장률(GDP)과 고용,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기초한 것임

○ 프랑스 고령자 고용정책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1970년대 이후 정부들이 취해 왔던 조기퇴직 정책이 형성한 공적연금제도와 노동시장구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2014년 6월에 수립된 고령자고용계획(Plan emploi senior)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유럽 연합의 고령자 고용촉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또한 프랑스 정부는 2017년 이후 고령자 고용촉진을 강력한 정책목표로 설정함(노대명 외, 2020)
- 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① 실질적인 은퇴 연령을 높이는 것과 ②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임
- 고령자 고용정책의 주요 정책은 ①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정책 ② 고령자 일자리 유지 장려 정책 ③ 고령자 재취업 촉진 정책 ④ 고령자 경력관리 정책 등으로 관련된 정책은 <표 3-36>과 같음

〈표 3-36〉 프랑스 고령자 고용정책

정책	대상	내용
고용연대계약 (CES: Contrat Emploi Soidarite)	• 50세 이상 실직자 • 18~26세 취업이 어려운 청년	• 1989년 도입 • 공공분야 사업에 고용기회를 얻어 주 20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고용으로 제공되는 제도로 복지적 측면의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큼
고용촉진계약 (CEI: Contract Initiative Emploi)	•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50세 이상 고령자 • 18~26세 구직자 기타 장기실업자 • 장애인 등	• 1995년 도입 • 취업이 곤란한 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 사회 보험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 면제
해고과세제도 (Taxation des Licenciements)	• 50세 이상 근로자	• 경제적 이유로 해고하였을 때 해당 기업에 특별히 부과되는 과세 • 과세액은 해고대상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급여 수개월분으로 산정

자료 : 손동기(2022). 프랑스 프랑스 인구고령화와 세대간 일자리에 관한 연구 : 정책대응과 시사점.

13) 프랑스에서는 2019년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였으나 퇴직연령이 62세 이상으로 늦춰지는 것 등에 반발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임(2010년에 이미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만 바 있음)(이종은, 2020). 자본시장연구원.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① 전액연금 수급연령 이전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② 연금수급 이후 연령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노대명 외, 2020)

• 고령층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 ① 중고령층(55~64세)의 고용유지정책: 중고령자 고용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50세 이상은 개인훈련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를 받게 함
- ②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촉진 정책
- ③ 중고령자의 경력관리 정책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은 전액연금 수급연령 이전의 고령자와 연금수급 이후 연령의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37〉 프랑스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내용
전액 연금 수급 이전 고령자	고령자 기간 제약 (CDD Senior)	• 퇴직이 임박한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 전액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기여기간을 채우게 목적 • 보통 18개월이지만, 한번 연장하여 36개월까지 계약 가능 • 57세 이상 고령자 대상, 구직등록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경력직 고용계약 (Parous emploi competences: PEC)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을 대상 • 기본 계약기간 2년, 50세면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 58세 이상 고령층에게 전액 연금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일자까지 계약 연장 허용함
	전문숙련계약 (Contrat de professionalisation)	•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자 기술 숙련을 위해 체결되는 계약 • 주로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권장 • 45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국가로부터 약 2천유로의 지원금을 받음
	자유고용계약 (Emploi franc)	•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CDI)이나 계약직(6개월 이상)으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매년 2,500유로~5,000유로를 2~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취약지역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실업급여 관련 지원대책	• 실업보험공단은 고령층 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등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취함(2017.3.28.기점) • 50~52세 구직자 최대 24개월, 53~54세 30개월과 6개월의 훈련 지원, 55세 이상 36개월 수급

대상	프로그램	내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 고령자 역량개발 프로그램 1) Pro-A : 고령의 정규직 노동자 중 저숙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전환 프로그램 2) VAE :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경험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3) Bilan de competence : 이미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구직자를 대상으로 숙련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연금 수급 이후 고령자	점진적 퇴직 프로그램 (Le retraite progressive)	-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노동자에게 공적연금의 일부를 수급 하는 동시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60세 이상, 150분기 이상 연금을 납부한 고령자 중 정규근로시간의 40~80%의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연금가산 프로그램 (La surcote)	- 퇴직 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노동자가 기본연금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 자격조건은 퇴직연령이 되어야 하고, 전액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여기간을 충족해야 함
	노동소득-연금누적 프로그램 (Le cumul emploi-retraite)	- 자유주의적 프로그램으로 공적연금과 노동소득을 함께 유지할 수 있음 -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 자동으로 전액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여기간을 충족시키는 사람, 기본연금과 추가연금 모두를 소진한 사람들이 수급대상임

자료 : 노대명 외(2020). 각 국의 고령화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 p147 재구성함.

○ 고령자 연령별 노동시장 현황 특징

- 프랑스 고령자의 6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낮은편으로, 퇴직자의 2/3가 곧 바로 은퇴를 하고자 하며, 나머지 1/3만이 취업을 하고자 하며, 50대 취업자들은 평균 61.4세에 은퇴를 희망한다고 함(Govillot, 2013) 한국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73세라는 점을 감안 하면 무려 11.6년 일찍 퇴직을 희망하는 것임
- 그러나 최근 공적연금제도 개혁으로 완전연금 수급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고령층 취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노대명 외, 2020)
- 고령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중장년층과 고령자층의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38〉 프랑스 고령자층의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구분	중고령자(50-64세)	고령층(65세-69세)
노동시장 현황	- 경제활동률은 66.9%(2019)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55~59세의 고용률(taux d'emploi) 2003년 55% → 2020년 73%로 증가함 60~64세의 고용률 2003년 13% → 2020년 33%로 급증함	고령층 경제활동률은 1975년 이후 법정 정년 연령이 60세로 낮아짐 1975년 65~69세 14.6%에서 1983년 6.5%로 급격히 낮아짐. 2006년 2.5%에서 최저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높아져 2019년에 7.8%로 오름
특징	- 연금개혁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높아지기 시작함 - 중장년층 경제활동은 특별레짐(des régimes spéciaux) 개혁, 법정 정년 60세 → 62세로 축소와 연금의 전체 요율에 접근하기 위한 기여기간의 증가 및 조기 퇴직 제도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제도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음 - 법정 정년 연령이 62세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임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여전히 중고령자 고용률은 유럽에서 낮은 수준임	- 지난 3년간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는 젊은 층의 두배로, 매년 12%씩 증가함(프랑스 고용청(Pôle Emploi), 2019) - 고령층의 고용률은 6.5%로 중고령자에 비해 크게 떨어짐 - 이는 법정 은퇴연령 62세 전후해서 자발적 은퇴를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65세를 전후로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낮아짐 -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에 있어 고령층에 위한 교육비도 부족함

자료 : 손동기(2022). 프랑스 인구고령화와 세대간 일자리에 관한 연구 : 정책대응과 시사점. 재구성.

○ 정년퇴직 제도 개혁의 성과와 한계

- 프랑스는 1981년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5년 낮추므로 인해 연금 수급 연령도 낮아져, 1980~1985년 사이 조기퇴직제도(Préretraite, 1963년 도입)는 프랑스 국가고용정책의 주요한 정책이 됨
- 조기퇴직자는 구직자 또는 은퇴자도 아니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지 않고, 대체소득은 실업보험(국가고용기금에 의한 지원 포함)에서 지급되고 있어, 구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조기퇴직제도는 국가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으며,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받음
- 이에 프랑스 정부는 조기퇴직제도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1993년 발라뒤르(E. Balladur) 개혁을 통해서 보험료 납부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2003년 피용(F. Fillon)개혁으로 2012년까지 41년으로 연장함

- 프랑스는 사회보장 지출로 인한 국가의 부담이 커져 퇴직연금개혁(2010년)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법정 정년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늘림과 동시에 완전 연금수급연령 또한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함
- 프랑스의 정년퇴직제도 개혁은 결과적으로 프랑스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 또는 재진입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회지출 부담에 대한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손동기,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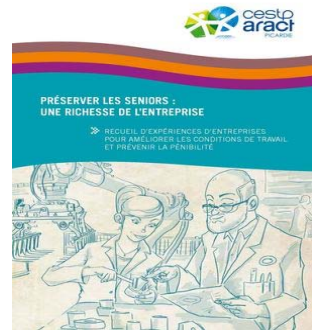
○ 고령자 인적자원의 활용 사례(정은하 외, 2014)

- 프랑스는 고령자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보다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존중받으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음
- 하기의 사례는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 인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임

〈사례〉 프랑스 기업의 고령자 보호 가이드

☞ 고령 인력 활용 안내서(PRéSERVER IES SENIORS)

- 고령 근로자가 일하기 적합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총 40쪽 분량의 안내서 (PRéSERVER IES SENIORS)발간
- 사업장에서 고령 인력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의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적절하게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령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안내서 내용은 연령주의(Ageism)의 문제와 고령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 고령 근로자의 웰빙과 관련하여 고령자에게 특히 힘든 작업 환경, 경력관리 방안, 고령친화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9가지 요인(기계조작, 자세, 진동, 화학약품, 소음, 열기, 냉각, 작업교대, 순간적인 압력 등)을 선정하고 각각의 내용들을 알아보기 간편한 시트로 제공하고 있음



자료 :

<https://hautsdefrance-aract.fr/wp-content/uploads/2018/11/Conditions-de-travail-et-seniors-Def-1.p>

□ 건강 및 지역 돌봄

- 프랑스는 오랜 기간 고령자와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별도로 분리되어 시행(Lesueur & Sanchez, 2011)되어 왔으나, 인구의 돌봄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령기준의 장벽 없이 고령자와 장애인 분야가 일치된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립성 개념을 그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 개혁을 도모함

- 프랑스의 공공정책은 ‘퇴직자와 고령자 대상’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 분리되어 애초부터 서로 다른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박혜미, 2016). 고령정책은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국가가 갚아내야 할 부채 혹은 보답(dette de la Nation)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보험의 원칙, 시민의 의무, 계약주의 등이 강조되며 사회적 보답(dette social)이 아닌 개인에 대한 책임(responsabilisation des individus)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Gucher, 2008)
-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 보상수당(Allocation compensatrice pour tierce personne: ACTP)을 1997년 기존 수급자들 중 60세 이상 대상자를 별도의 의존특별급여로 대체되면서 고령자 장기요양정책의 기틀을 마련함(박혜미, 2016)
 - 장기요양정책은 고령자의 의존성이 아닌 선택, 권리, 자유와 같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지원방식을 강조하고 있음(Fouquet et al., 2009; Campéon & Le Bihan, 2006)
- 프랑스 장기요양제도(Long-term Care: LTC)
 - (1) 구체적 정책 수단: 개인자립수당
 -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는 다양한 정책 영역(보건, 사회, 의료사회)을 아우르며 여러 층의 거버넌스 체계(중앙정부, 레지옹, 데파르트망¹⁴⁾, 코뮌)가 관여하고 있음. 국가의 보건사회 정책은 프랑스 정부가 법률로 정하며, 보건정책과 사회정책 두 영역의 운영과 재정에는 각 지역의 행정 단체가 관여함.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중앙정부의 면밀한 감독 아래 보건정책을 실행하는 데 관여하고, 분권화된 프랑스 자치단체인 데파르트망은 사회정책을 책임짐(블랑시 르비앙-클로드 마르탱, 2018)
 - 장기요양제도는 ‘피부양특별수당’ 또는 의존특별급여(Prestation spécifique dépendance: PSD)로 199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2년 PSD에서 개인자립수당(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며 더 이상 공공부조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써의 수급권을 강화(Le Bihan & Martin, 2007)하고 부양의무 및 상속분 회수의 원칙을 탈피(Le Bihan, 2010)함

14) 프랑스의 기초단체인 코뮌과 광역단체인 레지옹 사이의 중간자치단체로서 사회정책을 책임짐.

- APA는 60세 이상의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립성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화 혹은 개인화된 지원방식을 그 원칙으로 함(Fouquet et al., 2009; Campéon & Le Bihan, 2006)
- 수당 수급자 수는 2012년 이래 변화가 거의 없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2030~2040년 고령에 이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때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40년 수급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블랑시 르비앙·클로드 마르탱, 2018)

〈표 3-39〉 개인자립수당 특징

수급 자격	• 60세 이상 고령자 • 의존성을 6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 의존성 심사 기준에 따라 중간부터 높은 등급의 의존성(4등급에서 1등급) • 소득 수준에 비례: 월소득이 800유로 미만인 수급자는 돌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월소득이 2945유로 이상인 수급자는 돌봄 비용의 90%를 지불함
최대 수당 금액(월)	• 1등급(최고 의존성 등급): 1713유로 • 2등급: 1375유로 • 3등급: 931유로 • 4등급: 662유로
수급자	• 125만명(60세 이상 인구의 8%) • 수급자의 60%는 자택에 거주하며 40%는 시설에 거주함 • 수급자의 45%는 의존성 4등급(중간 등급)을 받음 • 수급자의 50%는 85세 이상이며, 여성이 수급자의 4분의 3을 차지함

자료: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France(2015) (블랑시 르비앙·클로드 마르탱, 2018). 재인용.

(1) 고령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제도

- 프랑스 돌봄제도의 첫째, 재가돌봄과 시설보호 모두에서 제공되는 사회·보건 서비스와 두 번째, ‘돌봄 조정’, ‘돌봄 통합’과 관련되며, 마지막은 비공식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것임
- 첫째, 재가돌봄과 시설보호 서비스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가정과 시설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공식부문의 돌봄노동이 발전함. DREES¹⁵⁾의 조사에 따르면(Muller, 2017) 2015년 기준 72만 8000명의 고령자가 시설보호를 받았는데, 이는 2011년보다 4.8% 증가한

15) DREES(La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는 프랑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2011년 시행된 APA의 수급자와 주거 공공부조에 대한 조사(Le recueil de données individuelles de l'APA et l'aide sociale à l'hébergement(ASH) par la DREES en 2011)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였다(박혜미, 2016).

수치이며, CARE 조사(Brunel & Carrère, 2017)에서는 가정에 거주하는 고령자 수가 대략 40만 명(의존성이 높은 고령자들만 포함)과 150만 명(중간 정도의 의존성을 가진 고령자들까지 포함)으로 추산됨

- 둘째, ‘돌봄 조정’(care coordination), ‘돌봄 통합’(care integration)은 보건과 사회돌봄 영역의 서로 다른 전문가들, 프랑스 장기요양정책에 관여하는 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음. 이러한 관점에서 1996년 ‘고령자돌봄 네트워크’(réseaux gérontologiques)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돌봄의 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해 MAIA(자립성 촉진을 위한 통합 돌봄 프로그램), PAERPA(자립성 상실의 위기에 처한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PTA(돌봄 조정 플랫폼 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됨
- 마지막으로 비공식 돌봄 종사자들로, 돌봄을 받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친족이며 그 중 44%(60세 이상 고령자)는 배우자임(Weber, 2015). 이들에 대한 재정적 보상보다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블랑시 르비앙-클로드 마르탱, 2018)
 - 돌봄 휴가제: 고령자 및 장애인 돌봄자 대상
 - 「2015년 고령사회적응법」에 돌봄자 휴가권이 도입됨: 연간 최대 500유로
 - 2009년부터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훈련 실시(「2009년 보건법」)
 - 정보 서비스: 2013년에 국가 포털을 수립했으며, 지역정보·조정센터(CLIC)를 수립해 가족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시작함
 - 돌봄 휴가 플랫폼(respite platforms): 돌봄자와 피돌봄자에게 조언 및 해결책을 제안함
- 이처럼 돌봄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과 비공식 돌봄자의 ‘돌봄 관리자’(care manager) 역할이 부각됨(Da Roit & Le Bihan, 2011). 예산 삭감의 기조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자 돌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공식 돌봄자(친족뿐 아니라 이웃 혹은 친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러한 역할이 「2015년 고령사회적응법¹⁶⁾」(loi relative à l'adaptation de la société au vieillissement)에 반영됨(블랑시 르비앙-클로드 마르탱, 2018)

16) 「2015년 고령사회적응법」은 프랑스 장기요양정책의 전환점으로, 이 법률은 의존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이 맞춰진 1990년대의 노령에 대한 보상적·의료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화’(Delaunay, 2017) 등 예방을 지향한다. 이 법의 주요 과제는 첫째 자립성 상실에 대한 예방, 노인 고립의 예방 및 퇴치 둘째 2017년까지 8만 채의 민간 주택 개조 프로젝트 추진 및 ‘자립요양원’(autonomy residence)으로 이름을 바꾼 요양시설 개선, 셋째 재가돌봄을 우선으로 자립성을 상실한 노인 지원하기이다.

〈사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식사

☞ 아그드(Agde): “Le Jardin de la Calade” 프로그램

- 지역 내 몇 개 식당을 거점으로 은퇴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고령자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고 모임 등의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여름 기간 마감 오후 3시)
- 수용 인원 200명



출처 : <https://www.ccas-agde.fr/age-d-or/les-foyers-restaurants>

□ 사회참여 및 학습

-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년기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프랑스 고령자는 노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 프랑스는 1980년부터 고령자들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제3의 인생’과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지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고령자들(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을 일컫는 ‘제4의 인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3의 인생’ 구간에 있는 프랑스 고령자들은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노후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전 생애주기에서 가장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Nathalie Augris and Catherine Bac, 2009)
-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문제까지 정책적 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한 예로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2003년부터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후 잘 보내기(Bien Vieillir)’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음(손동기, 2015)
 - 이 프로그램에는 고령자들의 건강,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사회적, 예술적, 문화적 참여 증진(Le renforcement du rôle social des seniors en favorisant leur participation à la vie sociale, culturelle, artistique)’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 프랑스 고령자들의 노후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고령자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화하고자, 파리시에서는 문화 공공정책¹⁷⁾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1)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 파리시는 2010년 2월부터 5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카드 소지자는 다양한 스포츠(아쿠아짐, 스트레칭, 태권도, 테니스, 노르딕 워킹 등)를 허가된 3개월 동안 무료로 즐길 수 있음
- 외국인이라도 55세 이상이고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스 또는 전기료 고지서 등)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파리의 16개 구(arrondissements)에서 17가지 이상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새로운 공간의 확보나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공영 체육시설, 공원)을 그대로 이용하여,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고령자들의 여가활동 선택과 기회를 더 용이하게 해줌
- 이처럼 고령자들의 신체활동 증진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질병에 대한 위험 요소 감소’, ‘신체적·인지적 기능 향상’ 그리고 ‘적극적 인생 참여’의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손동기, 2015)

(2) 파리 평생(상설)대학(Université Permanente de Paris)

- 파리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고령자들을 위해서 파리 평생대학(Université Permanente de Paris): UPP)을 운영하고 있음
- 파리 평생대학은 다양한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초가 부족한 이들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이들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함
- 파리 평생대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파리에 거주를 해야만 하고 65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며,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기 은퇴자들의 경우는 은퇴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함
- 컨퍼런스, 아뜰리에, 하이킹(randonnés), 실습,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1년에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시즌 이렇게 세 번 제공이 되며, 대부분의 활동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야외에서 이뤄지는 하이킹이나 문화 체험은 소정의 실비 정도의 비용이 청구됨

17) 공공문화정책은 다양한 개인의 문화적 취향(Le goût culturel)을 인정하고, 문화 접근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게 돕고 있다(손동기, 2015).

(3) 시니어 클럽(Clubs Seniors)

- 파리사회복지센터의 시니어 클럽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전용 시설로 각 구별로 1개 이상씩 있으며, 파리시에 거주한다면 구에 제한 없이 여러 시니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이수진, 2018)
- 시니어에게 다양한 무료 체험활동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 된 참가료를 받고 아뜰리에 실습을 제공하고 있음
- 수공예 및 수작업, 예술, 체육, 멀티미디어, 문화, 건강 클럽, 놀이 및 게임, 행복한 은퇴생활 하기, 세대 간 어우러진 활동, 이벤트 등 매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음
- 시니어 클럽은 파리 시내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신체적으로 이동성이 뛰어나지 않은 노인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4) 자원봉사(Devenez bénévole)

- 파리시에는 약 50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 스포츠, 학습보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정책은 고령자들의 자유시간을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프랑스 고령자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므로 개인적으로 여가를 잘 활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참여 및 기여도가 낮아, 파리시는 고령자들의 개인적인 역량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지은정 외, 2014)
- 대표적인 자원봉사 단체로는 ‘Ressac’과 ‘Astré’가 있으며, 이 두 단체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전 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단체들임
-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협회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함
-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협회 스키프르 포퐁레르포퐁레르(Secours Populaire Français)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파리에 10개의 지점이 있으며 3,3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음(이수진, 2018)
- 대부분 은퇴 후 자신의 능력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줌

- 이와 같은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지원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민간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함

(5) 어린이 후원 활동(Parrainages, services et activités intergénérationnels)

-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홀로 남는 고령자들 또는 홀로 남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나 고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할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몇몇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짐
- ‘어린이 후원 활동’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다양한 경제적·문화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들은 소외감이나 고립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 간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함
- 이 후원은 프랑스 어린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이 가능함

〈사례〉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 파랭 파르밀(Parrains Par'mille)

파랭 파르밀(Parrains Par'mille)

- 1990년 민간협회로 창설함
- 같은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들을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고령자를 연계하여 같은 문화 활동을 하거나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영화 관람, 문화센터 가기, 등하교 돕기 등 다양한 도움을 주며 아이들의 발달과 고령자 삶에 활력을 줌



출처 : 민간협회 파랭 파르밀(<https://ppm-asso.org/decouvrir-ppm/>)

〈사례〉 프랑스 시민공간 (Espace citoyen)

☞ 프랑스 시민공간(Espace citoyen)

- 고령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함께 발전하는 활동과 워크숍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반갑고 친근한 공간을 조성하여 교류 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보 또는 참여형 워크숍을 제공함
- 시민 공간은 시민권을 증진시키고, 고령자들이 은퇴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에 투자하고 도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을 지원함



출처 :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espace-citoyen/>

○ 프랑스의 고령자 라이프스타일은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임(이수진, 2018)

- 은퇴 직후 고령자들의 민간협회 참여는 매우 활발한 편이며, 휴식보다는 어딘가에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직시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민간협회를 이끄는 운영진으로 참여함
- 참여하는 민간협회는 주로 자선 및 구호단체, 사회운동 분야이며, 문화활동, 예술, 스포츠, 여행, 각종 배움 교실 등으로 약 130만 개의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은퇴자의 38%가 민간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환경

○ 프랑스 국립주거청(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령자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독립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함. 주거지원청은 연간 5억 8천만 유로를 지원하는데, 이 중 13%인 5천7백만 유로를 고령자의 거주환경 개선에 할애하고 있음(이수진, 2018)

- 파리시에서는 은퇴 전에 살고 있는 집에서 임대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거주할 능력이 없거나 은퇴자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싶은 고령자를 위해 시에서 은퇴자 전용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음
 - 월 임대료는 은퇴연금 액수, 즉 소득수준에 따르며, 각 구별로 고령자 전용 클럽을 운영하고 있음. 고령자 전용클럽은 65세 이상만 출입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73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젊은 고령자들은 여러 개의 민간협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는 고령자를 위해 공화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적 문제, 노인성 질환,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 중에서 특히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들의 주거지원정책은 강화하고 자립이 가능한 고령자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연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의 고령자 주거정책의 최초는 1854년 어느 한 기업가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집단 거주지를 마련하고 이를 나폴레옹 3세가 지원하면서부터 시작 됨
 - 이후 빈곤 노동자들을 위하여 무상 주거제공 법률안이 1894년에 제정되었고 18년 후인 1912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택 건설 공공사무소가 설립되면서 이것이 오늘날 ‘저가 임대주택(HLM)’으로 변화됨
- 프랑스에서는 1950년에 들어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16.2%를 초과하면서 고령자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는 곧바로 ‘임차인 신분의 고령자 주거시설 수용에 관한 1957년 8월 7일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법’(La loi-cadre sur l’urbanisme du 7 août 1957, permet d’accueillir dans une structure d’hébergement des personnes âgées conservant leur statut de locataire) 제정으로 이어졌음
 - 이후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분류에 병원, 호스피스, 양노원이 포함되었고, 고령자 주택수당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78년에는 자택거주 고령자를 위한 가정간호사 제도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1년, 고령자를 위한 개인 자립 수당(APA, L’allocation personnalisée à l’autonomie)이 신설되어 자택 거주 고령자에 대한 보호 등이 강화됨

〈사례〉 프랑스 세대 간 주택 개척 협회
(Association pionnière dans le logement intergénérationnel en France)

☞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제도

- 방을 무료로 빌려주고 저녁, 밤, 몇몇 주말에 정기적으로 젊은이가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거나, 저렴하게 요금을 내고 방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자는 협회에서 정한 헌장을 준수해야 하며, 1개월간 시험 기간을 거쳐서 상호 계약을 통해 들어감. 숙소를 이용하는 데 앞서 젊은이와 고령자 간의 나눔이라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여김
- 젊은이가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령자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장보기, 우편물 부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음



자료: 민간협회 르 파리 솔리데르(<https://www.leparisolidaire.fr/>)

4) 고령정책대응 전담기구 사례

(1) 프랑스 고령자복지정책의 총괄부처: 사회·보건성

- 프랑스의 16개 행정부처 중 고령자 복지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는 사회·보건성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으로 조직의 개관은 다음과 같음(정홍원, 2014)
 - 첫째, 사회·보건성에는 두 명의 담당 장관이 각각 가족·고령자·자율성 분야와 장애인·배제 극복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담당 장관이 독립적 기구의 책임자는 아니며,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음
 - 둘째, 1명의 장관과 2명의 담당 장관의 관할 하에 사회·보건성은 3개의 총국, 2개의 국, 1개의 사무처와 1개의 사회 문제 감사실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음. 총국(Direction générale)은 우리나라 행정부처 조직의 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Direction)보다 더 큰 조직으로 하위조직으로 Service, 부국(sous-direction) 등을 두고 있음. 현재 사회·보건성

에는 보건정책 총국(DGS), 돌봄제공 총국(DGOS), 사회적 결속 총국(DGCS)등 3개의 총국이 있음. 국(Direction)은 총국보다는 적으나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위임(임도빈, 2002).

- 셋째, 하위조직 중에는 사회보건성의 ‘직속부서’가 있는 반면, 여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협력부서’가 많음. 이는 프랑스 행정조직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이른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정홍원, 2014)

(2) 고령자복지정책 주관 부서와 집행기구

- 프랑스 고령자 복지정책은 사회보건성 산하의 하위조직 중 고령자 복지정책은 1명의 담당 장관, 1개 총국, 1개국, 4개의 부국에서 맡고 있음(정홍원, 2014)
- 가족·고령자·자율성 담당 장관은 고령자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질적 업무는 부국 혹은 서비스(service)와 하위 단위인 과(bureau)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령자 복지정책은 아래 <표 3-40>처럼 영역별로 4개 부국이 맡고 있음

<표 3-40> 프랑스 사회·보건성 산하 고령자 복지정책 담당 부서

부국 명칭	상위조직	하위조직	영역
장애인 및 고령자 자율 부국	사회적 결속 총국(DGCS)산하 사회의료정책서비스	• 고령자 자율성 및 일상생활 상실 예방과 • 장애인 통합, 시민권 일상생활과 • 보상권리 및 원조과	사회서비스
돌봄 접근, 가족 급여 및 산재 부국	사회보장국(DSS)	• 보편의료 및 건강급여과 • 가족급여 및 주거지원과 • 산재 및 직업병담당과	의료보장
연금 및 보충 사회보호제도 부국	사회보장국(DSS)	• 기본연금레짐과 • 특수레짐과(공무원, 군인연금 등) • 퇴직연금 및 보충적 사회보호제도과	소득보장 (연금)
사회적 포용, 편입 및 빈곤극복 부국	사회적 결속 총국(DGCS)산하 사회의료정책서비스	• 긴급구호 및 생활시설과 • 권리인정, 사회편입, 사회연대 경제 담당과 • 기본소득 및 사회부조과	소득보장 (공공부조)

자료 : 프랑스 사회·보건성 홈페이지 조직도(<http://www.social-sante.gouv.fr/>).

4. 미국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정책

1) 인구고령화 현황

- 미국은 2014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까지 걸린 시간은 72년으로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짐
- 미국은 젊은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출산율(1.64명, 2020년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 속해 외견 상 미국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는 아님
- 실제로 미국으로의 이민 규모는 2060년까지 매년 150만 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는데, 이민자의 대부분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인구층(working age adults) 임(Population Reference Bureau, Population Bulletin, 2015)
- 그러나 1946년~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가 고령인구에 들어 섰고, 고용시장과 노동시장, 미국 전체의 경제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정건화, 2018)
- 미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면, 총인구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24세 이하 인구는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25~64세 인구의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3-41〉 미국 총 인구 수, 연령대별 비율 전망

구분		197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2050	2075
총인구(만)		20,951	25,212	28,171	29,499	30,901	32,087	33,100	34,964	37,941	40,999
연령대 비율	15세이하	28.1	21.7	21.7	20.9	20.2	19.2	18.4	17.5	16.6	16
	15-24세	17.3	14.8	13.8	14.3	14.2	13.9	13.1	12.3	11.7	11
	25-64세	44.5	50.9	52.1	52.5	52.6	52.3	51.9	49.9	49.4	46.8
	65세이상	10.1	12.6	12.3	12.3	13	14.6	16.6	20.3	22.4	26.3

자료 : United Nations(2019). 각 연도. 조성은 외(2022). 재인용.

2) 고령정책현황(고령화 대응)

○ 미국의 주요 고령화 제도와 정책

- 미국의 고령자 관련 제도와 정책은 1960년대부터 틀을 갖추기 시작함. 고령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는 법적 제도로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 등이 있음(정건화, 2018)
- 이들 제도 장치들은 지금까지 미국 고령층의 노후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그리고 여타의 사회적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3-42〉 미국 고령정책의 주요 법적 제도

고령정책 제도	내용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일정 연령(대략 65세 기준) 이후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공적 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 고령자 및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미국의 노인 빈곤 상황은 1966년대 30%에서 2014년 10%로 감소하여 현저하게 개선됨
메디케어 (Medicare),	• 고령자 및 장애인, 빈곤층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196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개정을 통해 등장 •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경우 제공되는, 노년층을 위한 건강보험 • 메디케어 실시 후 건강보험이 없던 고령인구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되었음
메디케이드 (Medicaid)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의료보호 제도임 • 메디케이드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년층에게도 의료보호 혜택이 적용됨으로써 미국의 모든 고령자를 포함하고 있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미국의 많은 주에서 전체 예산의 1/3에 차지하는 정도로 재정 규모가 큰 프로그램임 • 최근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메디케이드의 혜택 범위를 가정과 지역사회를 기반 돌봄 서비스 영역까지 넓힘
미국고령자법 (Older Americans Act)	• 1965년 존슨 행정부 시절 제정되어 9차례의 개정을 거친 미국고령자법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함께 고령정책의 기본방향과 틀을 제공함 •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고용', '은퇴 후 적정소득'과 '건강유지', '경제적 수준에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육체적 참여와 기여',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독립적 생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독립적 생활', '자기결정'과 '사회적 보호'등 다양하고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제시됨

자료: 정건화(2018)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호.

3) 영역별 고령자 정책 대응 및 사례 분석

□ 고령자 소득 및 일자리

○ 미국 연금제도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인 공적연금제도¹⁸⁾(Old Age, Survivor,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와 공공부조인 보충소득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정홍원 외, 2014)
 - (공적연금제도) 1937년 사회보장연금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걸쳐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었음. 1983년에 처음 재정 안정화 개혁을 추진하여 사회보장세를 5.4%에서 5.7%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65세→67세)하였으며,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또한 급여액을 물가지수와 임금인상 지수 중 낮은 지수에 연동, 연방공무원의 국민연금에의 통합일원화 함. 이후 미국은 '복지에서 취업으로(Welfare to Work)를 정책목표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개인책임 및 취업기회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1996년에 제정함(강성호 외, 2013)
 - (보충소득제도)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모두를 포함한 자산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의 범주적 공공부조임. 1972년에 도입하여, 기존에 주정부가 운영하던 고령자, 시각장애인 기타 장애인 대상 소득지원 프로그램(Old-age assistance, aid to the blind, aid to the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을 통합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일화한 것임(김원섭, 2019)
- 미국은 2019년 발효된 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2019, 연금 관련 법안을 개정함(이종은, 2020)

〈표 3-43〉 SECURE ACT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주요 내용
개인연금관련	• 개인연금(IRA)가입 제한연령을 72세로 상향 • 연금 최소인출의무가 적용되는 나이를 72세로 상향 • 자녀의 탄생 또는 입양에 대해 연금 조기수령 가능 • 상속받은 연금의 10년 이상 이연을 제한
기업연금관련	• 기업연금 가입 제한을 완화하여 소규모 기업에게도 가입을 허용 •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기업퇴직연금의 가입을 허용

자료 : 이종은(2020). 미국 연금법 개정(SECURE Act)의 특징과 의미. 자본시장연구원.

18)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기초한 노인·유족·장애연금보험제도(OASDI)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미국 고령자 고용지원 법제

- 미국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 법제는 고용연령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과 인력혁신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이 있음(조성은 외, 2021)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 미국 평등고용기회 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은 4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고용의 모든 면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으로, 1967년에 제정됨
- ADEA는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사실상 미국에서 근로자의 퇴직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됨
- ADEA 제정 초기에는 보호대상의 연령을 65세로 설정했으나, 이후 1978년 개정에서 70세, 1986년 개정에서 70세 이상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함. 1996년 개정에서는 ADEA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대상(경찰 등)의 정년이 설정됨(유각근, 2011)
- ADEA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①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 특히 해고 시 재취업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함
 - ② 직무 수행 역량과 무관하게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고 이는 고령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③ 숙련, 근로의욕, 고용가능성 저하를 가져오는 장기실업이 고령 근로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 고용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④ 고용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은 상업과 상업의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인력혁신기회법(WIOA)

-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력혁신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은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임

-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직업훈련파트너십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과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거치며 발전해 왔으며 현재의 WIOA는 2014년 7월 오바마정부에 의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됨
- WIOA는 기존의 원스톱 커리어센터를 아메리칸 잡센터(American Job Center)로 변경하고 지역내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로 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내 인력개발 계획 수립 시 고용주의 참여를 강화함(Department of Labor, 2014)
- 각 프로그램은 그 성격에 따라 노동부와 교육부가 주관함
 - 노동부는 성인, 구직자 및 청년층 대상의 고용 및 훈련 서비스와 「와그너-페이지법」에 근거한 고용서비스를 위한 각 주의 예산 지원을 주관하고, 기존의 ‘Job Corps’, ‘Youth Build’와 같은 프로그램 및 복미 원주민, 이민자, 노동근로자 등의 특정 취업집단을 위한 고용 및 훈련지원 서비스를 승인함
 - 교육부는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고용 장벽이 있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관리함
- WIOA의 핵심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1/3 이상의 참여자가 중장년 구직자로 특히 실직자 프로그램 참여자 중 45세 이상은 45%에 해당함(Bauman & Christensen, 2018)

〈표 3-44〉 WOA 핵심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성인 서비스 프로그램 (Adult Service Program)	• 구직자 대상 견습 프로그램, 맞춤형 훈련, 한시적 일자리 포함 경력 및 훈련서비스 지원 •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참여자 소득제한은 없으나 저소득, 저숙련, 복지대상자 우선 지원
실직자 프로그램 (Dislocated Worker Program)	• 구직자가 실직자 대상 훈련, 노동시장 정보, 진로상담, 구직기회, 교통 및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 18세 이상 최근 실직자 및 장기실업자 우선 지원
와그너-페이지 프로그램 (Wagner-Peyser Program)	• 구직지원, 취업알선 형태의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 • 지원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원스톱센터 스텝이나 온라인 등으로 지원 가능
성인교육 및 문해 프로그램 (Adult Education and Literacy Program)	• 읽기, 쓰기, 수리, 영어, 문제해결 등 기초역량 향상 위한 수업 제공 • 16세 이상 영어 학습중인 자, 저소득층, 이민자 대상
재활 프로그램 (Rehabilitation Service Program)	• 신체, 정신 장애 보유자 대상 상담, 신체 및 정신건강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 장애인, 저소득층, 저숙련자, 기타 공공지원을 받는자 우선지원

자료 : Bauman, K., & Christensen, C.(2018). 재구성.

○ 미국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 미국은 고용 및 직업소개 서비스, 고용서비스 제공 시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과, 복지의존성을 줄이려는 근로 우선원칙의 기조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보다 원스톱센터를 통한 통합적 고용정책이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미국의 고령자 대상 고용정책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고용정책으로 볼 수 있음(김경선, 2017)
- 이러한 고용정책 배경으로 고령자에 특화된 고용정책이 활발하지 않으나, 일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고령자지역고용서비스(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와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중 50세 이상인 고령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재고용 무역 조정 지원 프로그램(Reemploymen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RTAA)이 있음

(1) 고령자지역고용서비스(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 미국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은 SCSEP에 대한 규칙에서 프로그램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조성은 외, 2021)
 - SCSEP는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을 희망하는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및 비영리기관에서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교육과 현장경험을 얻을 수 있음
 -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여자가 보조금 없는 고용으로 진출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는 것임(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2018)
 -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며 직업이 없고 가구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65세 이상, 장애인, 퇴역군인, 노숙자 또는 노숙위험에 처한 자, 영어 또는 문해력이 낮은 자 중 하나의 요건을 지닌 사람에게 참여 우선순위를 부여함
 - 참가자들은 지역에 따라 육아 돌보미, 고객센터, 보조교사 등의 직종과 보육센터, 노인센터, 학교, 병원 등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고, 1주에 20시간씩 6개월 참여 후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는 영구적인 직업을 탐색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음(민상기 외, 2015)

(2) 재고용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Reemploymen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RTAA)

- 무역법(The Trade of Art of 1974)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고용 무역 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에 따르면, 2016년 개정 시에는 TAA 대상 근로자 그룹으로 인정 시 RTAA 적용에 별도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21년 개정 시에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50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쉽게 이전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산업 내 경쟁요건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그룹 내 근로자가 RTAA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실직 후 26주 이내 재취업해야 한다.
 - ②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재취업으로 50,000달러 이하의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 ④ 각 주에서 정의한 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여야 한다.
 - ⑤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업과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위 조건을 만족한 경우 50세 이상 무역조정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는 재취업 임금과 이전 임금의 차이분의 50%를 최대 2년, 1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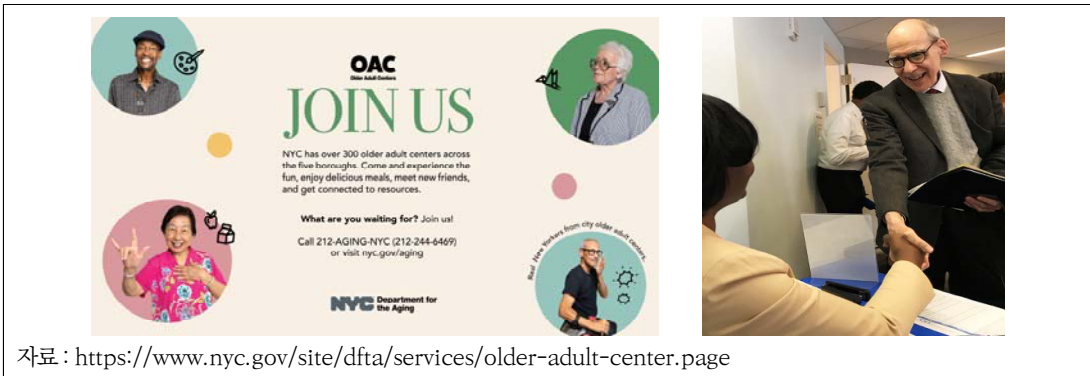
○ 미국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

- 뉴욕시의 고령화 문제 관리국(Department for the Aging)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뉴욕시를 대비하고자, 고령인구가 직면하고 있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고령자 삶의 질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뉴욕시의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사례〉 뉴욕시의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 ①

☞ 고령자 고용서비스 부서(Senior Employment Service Unit)

- 고령화 문제 관리국은 연방정부의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의 일부로 고령자 고용 서비스 부서를 운영함
- 고령자 고용서비스 부서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데이터처리, 행정, 고객지원, 보안, 항공, 가정 의료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참가자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 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 활동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구직 방법, 인터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 대상은 55세 이상 뉴욕시 내 5개 구(borough)에 거주하고 현재 실업 상태이며, 가정 임금이 연방 빈곤 임금 기준의 125%를 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을 기꺼이 배우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있어야 함(함민지, 2022)



자료 : <https://www.nyc.gov/site/dfta/services/older-adult-center.page>

〈사례〉 뉴욕시의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 ②

☞ 리서브 프로그램(ReServe Program)

- 50세 이상의 은퇴자는 뉴욕시의 고령자고용 서비스 부서를 통해 비영리단체인 ReServe, Inc가 운영하는 재고용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
- 리서브 프로그램은 은퇴자들이 뉴욕시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일부 영리단체에서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며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참가자는 일주일에 10~20시간 일을 하게 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술을 습득하며 젊은 직원들에게 그들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 할 수 있음
- 고용주가 예산의 한계로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은퇴자의 연결을 통해 제한된 예산으로 전문적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움
- 사회복지, 법, 마케팅, 인사, 의료, 교육, 소매, 경제, 통상, 군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은퇴자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어 예산상 제약을 가진 많은 기관들이 전문가 고용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음(함민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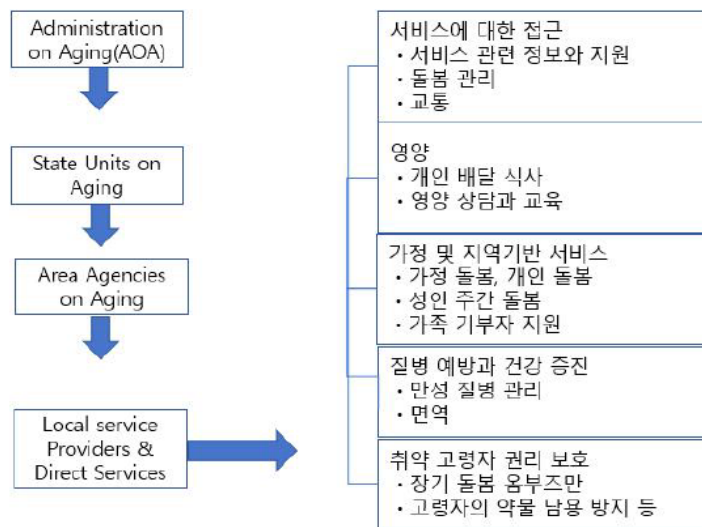
자료 : RESERVE 홈페이지 <https://www.reserveinc.org/brochures>

□ 건강 및 지역 돌봄

- 미국의 고령자 돌봄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보다는 민간에 의해 공급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임(김주영, 2022)

- 미국의 고령자 돌봄 체계에 대한 법제는(Old American Act), 고령자의 건강이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취업 등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 고령자의 돌봄 체계와 관련된 기관들은 중앙정부의 고령화 담당기관(Administration on Aging: AOA)이 있으며 각 주와 지역 차원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됨(Coleello and Napili, 2018)
- 고령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돌봄 전달체계는 [그림 3-13]과 같음

[그림 3-13] 미국의 고령자돌봄 전달체계



자료 : Coleello and Napili(2018); 김주영(2022). 재인용.

- 미국의 고령자 돌봄은 기본적으로 지역거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사회거주 관리국(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사회거주 관리국(ACL)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또한 지역사회거주 관리국 산하에 고령자와 장애인 자원센터(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가 있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한 번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고령자 서비스 결합주택은 미국의 장기돌봄제도에 편입되어 있어서 시설의 이용자들은 이용 비용의 일부를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며 주정부가 이들 시설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
 - 고령자 지원주택 내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해당 시설의 기본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만 일부 서비스들은 선택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기도 함
- 지역사회거주 관리국(ACL)은 고령자, 장애인, 가족 및 그들의 돌봄자들이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서 삶을 영위하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사례〉 미국 지역사회 돌봄 지원 프로그램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

- 미국 지역사회거주 관리국(Administration Community Living)에서 시행 중
- 1965년 제정된 고령자복지법에 의거해 2000년 개설되었으며 가족돌봄자 및 비공식 돌봄자들이 가정에서 최대한 장기간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서비스 보조금을 지원
- NFCSP의 다섯 가지 핵심 서비스
 - ① 돌봄자들에게 해당 사회의 가용 서비스와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 ② 돌봄자들의 각자의 돌봄 필요를 가능하여 필요한 자원을 이용하기 쉽게 지원
 - ③ 돌봄자 상담, 지지 집단, 돌봄자 교육을 통해 돌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돌봄 역할과 관련된 각종 문제 해결
 - ④ 단기 휴식을 지원하여 돌봄자들이 잠시나마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줌
 - ⑤ 단기 휴식 지원과 추가 서비스는 주 돌봄자와 가족 친척 돌봄자만 이용할 수 있음
- NFCSP 대상 기준
 - ① 60세 이상 성인을 돌보는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비공식 돌봄자
 - ② 연령에 상관없이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환자를 돌보는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비공식 돌봄자
 - ③ 18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55세 이상의 부모 외 친척
 - ④ 18~59세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55세 이상의 부모 포함 친척



- NFCSP의 지원을 받은 돌봄자 대다수는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 덕분에 더 나은 돌봄자가 되어 고령자 가족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도록 도울 수 있었다고 평가(노현진, 2020)

자료 : <https://acl.gov/programs/volunteer-opportunities-and-civic-engagement>

〈사례〉 미국 낙상예방 프로그램

☞ 낙상예방 프로그램 (How to Prevent Falls)

- 낙상예방연합(NYC Falls Prevention Coalition)에서 낙상예방 웹페이지와 안내서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함
- 낙상예방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에 대한 관리와 집안 환경의 정비하도록 권고함
 - 시력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안과검진, 복용하는 약물의 확인,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유지
 - 집안에서 미끄럼 방지 제품 사용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 정비 안내(노현진, 2020)



자료 :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public/dohmhnews9-04.pdf>

□ 사회참여 및 학습

○ 자원봉사를 통한 고령자의 사회통합 이슈

- 고령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미국 정부와 자원봉사 단체는 모든 경제 계층의 고령자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을 이롭게 하는 이중의 사명을 갖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함
-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이상적인 설계 방안은, 전략적인 공공기금 사용과 개별 고령자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생산적인 기회 제공이라는 두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지만 쉬운 일은 아님
- 예컨대, 공공기금을 사용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경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특정 인적서비스, 교육 또는 환경 프로그램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함
- 한편, 일부에서는 고령자의 고립을 완화하는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자’의 업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두 입장의 차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액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장벽을 제거’하는 이슈와 더불어 미국의 자원봉사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임(Tess Scannell, 2015)
- 참고로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일반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임금(wage)’과 구분하기 위해 ‘수당(stipe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고령자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 미국의 시니어 봉사단(Senior Corps)
 - 시니어 봉사단(Senior Corps)은 1973년에 처음 생긴 이후 1999년에 개정된 국내자원봉사서비스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하에서 재인가 됨(최상미 외, 2017)
 - 시니어 봉사단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자선단체와 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등 수천 개의 비영리조직 및 지방기관들과 협력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임
 - 세부 프로그램으로 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FGP), 시니어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SCP), 퇴직 시니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이 있음
 - 프로그램별 활동 및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45〉 Senior Corps 활동 및 운영

구분	활동 내용	대상자 및 기간	보상
양조부모 프로그램 (Foster Grandparents Program)	지역사회 내의 롤모델과 멘토,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튜터링, 돌봄 서비스 제공	5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주당 15~40시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간당 \$3의 수당, 활동비(각종 보험과 교통비, 건강검진비용 식비 등) 지원
노인동반자 프로그램 (Senior Companions Program: SCP)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집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5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주당 15~40시간	
퇴직노인 봉사프로그램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	시니어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튜터링·멘토링, 방범활동, 집수리, 이민자에게 영어수업 제공 등)	5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주당 40시간 미만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봉사활동에 소요된 활동비 지원 (최소경비 실비지원)

자료: 최상미 외(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p56 재인용.

○ 고령자가 참여하는 환경활동과 지원조직

- 자원봉사 활동은 자선적 활동과 시민참여의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시민 활동인 환경활동연합(Environmental Alliance for Senior Involvement: EASI)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돌보고 보호하는 시민참여를 확장하기 위해 고령자의 환경적 윤리, 활동과 기여를 촉진하여 활동하고자 설립함
-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고령자 환경자원봉사단(Senoir Environment Corp: SEC)의 연합체로서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독려하는 활동을 수행함
- 고령자 참여 환경활동연합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실천방안을 고령자가 먼저 교육받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프로그램은 공해 예방, 학교방문 환경교육, 에너지 절약, 보건 환경교육, 대기 및 수질 환경 모니터링, 고령자 대상 Green Gym 보급 활동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세계 물의 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정은하, 2014)

〈사례〉 고령자를 위한 여가활동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 로드 스칼라(Road Scholar)

- 엘더호스텔(Elder Hostel)은 1975년 뉴햄프셔주의 대학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관(고령자 평생학습기관)
- 교육과 모험이 혼합된 형태(learning adventures) 프로그램을 통해서 60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더욱 풍부한 인생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보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엘더호스텔은 “로드 스칼라(Road Scholar)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음
-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부터 크루즈까지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
- 프로그램은 크게 바다와 강을 탐험하는 ‘선상 모험(Adventures Afloat)’, 손자와 함께 여행하는 ‘세대 간 여행(Intergenerational)’,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 등으로 분류



자료 : <https://www.roadscholar.org/collections/>

□ 고령친화환경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 고령인구의 96% 이상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며(Roberts et., 2018) 고령인구의 약 77%가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살기(aging-in-place)를 바란다고 함(Binette, 2021)
 - 그러나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적 변화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사는 것이 어려워져, 노인의 3분의 1이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를 떠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미국은 고령친화도시 즉, 나이와 장애에 관계없이, 노화로 인해 신체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들에게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최연진, 2022)
- AARP(전미은퇴자협회)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 네트워크가 함께 고령인구 증가가 가속화된 도시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임(AARP, 2016)임.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 교통지원 프로그램, 고령자 및 가족요양인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1) 고령친화도시 사례들

- 시애틀시는 2016년 7월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위한 ‘AARP의 고령 친화 커뮤니티 네트워크(AARP Network of Age-Friendly Communication)’에 가입함. AARP 네트워크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의 제휴 프로그램으로 AARP의 해당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나 커뮤니티는 자동으로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됨(박지연, 2018)
- 미국 도시들은 AARP의 네트워크 가입 후 계획수립(1-2년차), 실행(3-4년차), 평가(4-5년차)라는 ‘다단계 과정(multi-step process)’을 통해 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평가보고서로 제출함으로써, 5년 주기로 관리를 통해 회원 자격을 유지함
- 시애틀 시의 복지과 연 예산은 약 1억 2,780만 달러(Seattle gov. 2016 기준)이며, 복지과는 고령인구 관련 단체에 3,28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투자했음(박지연, 2018)

☞ 시애틀시의 이노베이션 펀드

- 시애틀시의 복지과는 ‘고령친화 도시, 시애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노베이션 펀드(Innovation Fund)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소규모의 지원금을 수여하고 있음
- 시애틀 복지국의 6개 우선 과제는 1) 청소년 성공 지원 2) 노숙자 문제 해결 3) 공중위생 증진 4) 접근 가능성 및 거주 적합성 지원 5) 성 기반 폭력 6) 건강한 노후 증진을 포함함
- 이노베이션 펀드 기금은 총 22만 5천 달러(2017년 기준)이며, 그 중 ‘건강한 노후 증진’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금은 12만 5천 달러로 ‘건강한 노후 증진’ 부문은 이노베이션 펀드 수상 기관 중 가장 큰 부분임
- 기관 당 수령액은 10,000달러(약 1,114만 원)에서 21,000달러(약 2,339만 원) 사이다(Seattle gov. 2017)

자료 : <https://humaninterests.seattle.gov/2017/08/08/1584/>

(2) 앙코르U 이니셔티브, 고등교육 기관들의 앙코르 캠페인 참여

- 앙코르U(EncoreU)의 U는 유니버시티(University)의 약자로 앙코르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등교육 기관들(대부분 대학 및 대학원)을 의미함. 앙코르U 이니셔티브는 ‘앙코르 세대’의 ‘평생교육(student for life)’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됨(박지연, 2018)
- 많은 50+세대들이 은퇴 후 새로운 경력을 위해 다시 학생이 되기도 하며,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20대 학생들에게 커리어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앙코르U 캠페인의 프로그램 구성은 대학별로 상이하며, 2년제 및 4년제 대학 그리고 여러 사립 및 공립대학들이 앙코르U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 상세 프로그램 설명은 다음 <표 3-46>과 같음

<표 3-46> 앙코르U 기관(EncoreU Institutions) 명단

대학명	세부 설명
아리조나주립대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총장실과 공조하여, 동문회 및 아리조나 비영리 기구(Arizona Nonprofit Alliance)가 노령인구를 위한 다양한 워크샵 개최
코넬대학 (Cornell University)	대학 은퇴자 및 중간경력자(mid-career employees)를 위한 앙코르 커리어 프로그램 제공
그랜드 라피드 커뮤니티 칼리지 (Grand Rapids Community College)	앙코르 커리어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리소스 제공
해럴드 워싱턴 칼리지 (Harold Washington College)	시카고에 위치한 사립 대학으로 석사학위를 소지한 중년들에게 앙코르 커리어 기회 제공

대학명	세부 설명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ersity)	어드밴스드 리더십 이니셔티브(Advanced Leadership Initiative)를 통해 사회 리더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교육 리소스 제공
하워드 대학 의과대학 (Howard University Medical College)	의과대 직원의 인식년 동안 '노령 인구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뉴욕대학교 (New York University)	다양한 앙코르 커리어 프로그램 및 미국 노령화에 대한 분기별 초청 연사 시리즈(Speakers Series)를 운영
포틀랜드주립대학 (Portland State University)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사회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직업 프로그램 운영
리오살라도 커뮤니티 칼리지 (Rio Salado Community College)	AARP, 경험단(Experience Corps) 등과 공조하여 대학 내 온라인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50+를 채용
스탠포드 대학 (Stanford University)	스탠포드내 커리어 센터를 통해 비즈니스 및 학계 등 사회 리더들이 앙코르 커리어를 찾도록 도움
툴레인 대학 (Tulane University)	40,000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졸업생(40세 이상)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앙코르 프로그램 제공
코네티컷 대학 (University of Connecticut)	대학의 비영리기구리더십 프로그램(Nonprofit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앙코르! 하트포드(Encore! Hartford)를 운영
미네소타 대학 (University of Minnesota)	교직원, 교수, 미네소타 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앙코르 전환: 다음 생애 준비(Encore Transitions: Preparing for Post-Career Life)" 프로그램을 제공
워싱턴 대학(시애틀, 워싱턴 주)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 총장 및 교무처장의 공식 지원 하에 대학 은퇴 직원(교수진 포함) 및 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앙코르 기회 제공
워싱턴대학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 주) (Washington University)	워싱턴대학 출신 고령자들을 위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 제작 중

자료 : Encore.org.(2017). 박지연(2018). 50+해외동향 리포트. 서울시50플러스재단_미국. 재인용.

○ 연방정부의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 미국의 연방정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에도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주거 환경을 마련 해주고자 주택 개보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최연진, 2022)
- 연방정부 내 고령자 대상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담당 부처는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가 대표적임

〈표 3-47〉 고령자 대상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담당 부서	주요 내용	자격
고령자 임대주택용자 보험 프로그램 (Section 231 Mortgage Insurance for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주택도시 개발부 (HUD)	62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 한 다세대 임대주택의 개보수와 건축을 위한 융자보증 프로그램	- 영리 및 비영리 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입 가능 -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만 해당
집수리지원사업 (Section 504 Home Repair Program)	농무부 (USDA)	-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고령자 대 상 보건·안전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최대 7500달러 지 원) 또한 비(非)고령자 저소득 주 택 소유자 대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출을 지원함 - 지원 가능한 거주 지역 제한되어 있음	- 주택 소유 및 실거주자이며, 가계 소득이 거주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함 - 고령자 대상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 우 62세 이상 고령자가 지급 대상 이며, 주택 개보수를 위한 대출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지원 가능
주택에너지 지원사업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에너지부 (DOE)	-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에너지효율 을 증대함으로써 주거부담금을 경 감시키는 목적으로 시행 -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주거 환경의 보건·안전에 향상시 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	DOE가 규정하는 빈곤선의 가계소 득 200% 미만의 가구 및 생활보조 금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급 가구, 저소득 아동 가 구 지원 연방정부 프로그램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수급 가구, 60세 이상 고령 가구, 장애인 가구, 아동 가구에 지원 우선권이 주어짐
저소득층 대상 주택에너지 지원사업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보건복지부 (DHHS)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보시 관련 공과금 및 에너지 관련 주택 개보수를 지원함	- 소득 기준으로는 연방정부 기준 빈 곤선의 150%이하 저소득가구 또 는 해당 주(州) 중위 소득의 60% 미만 가구에 해당함 - 고령자, 장애인, 아동 가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함

자료 : 박소정·강은나(2021). 미국의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재구성.

○ 고령자를 위한 교통지원 프로그램

-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성·이동성은 고령자의 자율성과 건강 유지에 필수지만, 시력과 인지 기능 감퇴 등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와 반응 속도 저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높여 고령자들이 운전하는 것을 어려워함
-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교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비영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 노인법(OAA)의 교통지원 프로그램은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이 집행함(최연진, 2022)

〈사례〉 고령자를 위한 택시바우처와 버스운행(미국 뉴욕시·브룩클린타운)

고령자 전용버스(브루클린), 택시 바우처(뉴욕)

- 고령자 전용버스는 낮에 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인근의 상점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
- 택시바우처는 지역사회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일정한 소득수준을 넘지 않는 고령자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할인된 가격의 택시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지원



출처 : <https://www.nyfsc.org/support-services/free-transportation/>
<https://www.brooklinecan.org/transportation.html>

4) 고령정책대응 전담기구 사례

(1) 미국 국립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

□ 기관 개요

- 미국 국가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는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고령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국가공공기관임
- NCOA는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노화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 삶의 목적, 공정과 상호 배려를 실현하는 사회를 추구함
- 2030년까지 4천만 명의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개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1년까지 1천9백만 명의 목표를 달성함(NCOA, 2022)
- NCOA는 정부 및 협력 기관들의 보조금, 멤버십 서비스, 투자수익 등으로 운영됨

□ 조직의 발전과정 및 주요 업적

〈표 3-48〉 미국 국립고령화위원회 주요 업적

년도	주요 업적
1950년	• 국가사회복지회에서 국립고령화위원회 구성
1970년	• 국립 시니어센터 연구소 설립
1990년	• NCOA는 고령자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건강증진연구소 조직
2002년	• 전국에서 가장 종합적인 온라인 혜택 심사 도구(수단)인 Benefits Check UP 착수
2005년	• NCOA는 고령자에게 증가하는 낙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2명으로 구성된 낙상 방지 이니셔티브(Falls Free Initiative) 착수
2009년	• NCOA는 고령자를 위한 경제적 사례연구에 접근 방식으로 Economic Security Initiative를 시작하여, 2013년에 고령자들이 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인 EconomicCheckUP을 시작
2013년	• NCOA는 고령자의 장수를 돕기 위해 Aging Mastery Program을 시작
2014년	• NCOA Services는 사람들이 Medicare 보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My Medicare Matters를 시작 • NCOA는 고령자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Senior Hunger Initiative를 시작 • NCOA는 지역 조직에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National Falls Prevention Resource Center를 설립하기 위한 연방 기금을 받기 시작
2015년	•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건강은 Canary Health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자료 : NCOA 홈페이지(<https://ncoa.org/page/history>).

□ 조직 및 운영체계

- NCOA 경영진은 위원장(CEO), NCOA 이사회 의장/임시위원장, 마케팅 및 비즈니스 개발 최고책임자, 정보 최고책임자/정보기술부문 부사장, 고객대응 최고책임자, 행정 최고책임자, 수석 부사장/재무 최고책임자 총 7인으로 구성됨(김춘남, 2020)
- 이사회는 NCOA 이사회 의장/임시 위원장/CEO(건강 및 의료정책 전문가)와, 선출의장(식품 및 소매업 전문경영인), 비서 및 재무책임자(행정 및 재무, 법률 및 인사 전문가), 직전의장(노인 및 장기요양분야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 등 총 14인으로 구성됨

- 이사의 전문가 구성은 자원봉사 및 비영리단체 전문가, 브랜드 및 마케팅 전문가, 노인·건강·장기요양정책 전문가(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서비스 및 커뮤니티 센터 전문운영자, 건강 및 사회서비스 개발 전문가(교수, 전 공증보건의사, 벤처기업 운영자) 총 10인으로 구성됨

○ 내부센터

- 국립시니어센터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enior Centers)

개요 : NISC는 시니어센터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국가 회원 조직

- 프로그램밍의 모범사례와 혁신, 네트워킹 및 교육 기회를 통해 시니어센터를 무료로 지원함
- NISC는 모범사례, 전문성 개발, 옹호, 연구, 국가 표준 및 인증을 통해 전국 11,000개 노인 센터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멤버십은 무료이며 혜택으로는 NISC 제휴사로서 관심 있는 문제(신청할 수 있는 자금, 보조금 및 수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e-뉴스레터를 받을 수 있으며, 시니어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리소스와 전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접근 가능

- 혜택이용센터(Center for Benefits Access)

개요 : 혜택이용센터는 전문가가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를 혜택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

- 주 및 지역에서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성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청 자격이 있는 혜택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

메디케어 환자를 위한 주요 혜택

협력사와 함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혜택의 등록을 위해 노력하며, 주요 관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메디케어 파트 D 추가 지원/저소득 보조금(LIS)
- 의료보험료 절감 프로그램(MSP)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이전에는 푸드 스탬프로 알려짐)
- 메디케이드
-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 건강노화센터(Center for Healthy Aging)

개요 : 건강노화센터는 고령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 주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지원함

- 국립낙상예방자원센터
- 국립 CDSME 리소스 센터
- 고령자 센터 리소스 센터
- 증거 기반 프로그램

- 협력기관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단체, 기업스폰서(37곳:각종분야), 재단후원자(14곳:각종분야),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 부처(총 5곳), 대학 및 노인관련 협의회(총 13곳)이 있음

□ 주요 추진과제

- NCOA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루는 영역은 경제적 안정, 건강한 생활, 공공정책 크게 3가지로 구성됨(김춘남 외, 2020)

〈표 3-49〉 미국 NCOA의 주요 사업

NCOA 영역	사업 내용
경제적 안정	• (저소득 고령자 지원) 재정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와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 의약품, 의료케어, 음식, 주택 난방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함 • (주거안정 지원) 집은 있지만 생활비용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다른 지역사회와 주거환경 탐색을 지원함 • (직업 및 훈련 지원) 은퇴 후 고령자 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결해줌. 1965년부터 "시니어 커뮤니티서비스 고용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을 통해 55세 이상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음 • (자금관리 지원) 빈곤한 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고령자에게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Age Well Planner를 활용하여 맞춤형 평가 가능함
건강한 생활	• (낙상예방 지원) NCOA의 "국립낙상방지리소스센터(National Falls Prevention Resource Center)"가 고령자의 낙상방지프로그램 구현을 지원하고, 모범사례와 도구들을 소개하는 정보센터 역할을 함 • (만성질환관리 지원) NCOA의 "건강노화센터(Center for Healthy Aging)"가 "미국고령화 지역사회생활 관리국(U.S.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s Administration on Aging)"의 지원을 받아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의 만성질환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 및 지역사회를 위한 리소스센터 역할을 함 • ('1억 명의 건강한 생활(100MLives)' 지원) 전 세계 건강 및 건강관리 개선을 선도하는 "헬스케어개선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IHI)"와 1억 명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허브(Hub) 역할을 함. 이른바 '100MLives'를 위해 세계적으로 건강개선과 웰빙(well-being)강화하려는 사고와 행동을 변화하는데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노인 기아예방 및 영양지원) 혜택이용센터(Center for Benefit Access)와 건강노화센터(Center for Healthy Aging)가 함께 노인이 건강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원함 • ('에이징 마스터리(Aging Mastery®)' 'Aging Mastery Program®' 수업과 자기 주도적인 'Aging Mastery® 스타터 키트(Starter Kit)' 2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며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개인성장 및 지역사회 참여의 측면에서 노화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신체활동 수준, 건강한 식습관, 발전적 계획 활용, 사회적 연결성, 자기관리 기반의 참여가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NCOA 영역	사업 내용
공공정책	- 고령자 분야에 투입되는 연방예산 삭감 방어 등 예산배정 문제에 관여함 - 저소득층 고령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보험 수급자 관점에서 더 나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에 개입함 -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원(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LTSS): 고령자와 장애인이 계속해서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머물며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미국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 OAA): 고령자의 식사와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수당 신청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OAA에 정책을 제안하고 영향력을 행사함 - 고령자의 권리보장법과 미국고령자법(OAA)에서 고령자 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함 - 변호 툴킷(Advocacy Toolkit): COVID-19, 2020 대선, 연방예산, 의료케어, 낙상방지, 영양관리 등 노인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관한 팁과 자료를 제공함 - 공공정책 및 변호담당 부사장, 공공정책 및 변호담당 이상, 선임 규제정책 전문가 3인의 변호사가 NCOA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함

자료: 김춘남 외(2020). 경기도 고령화 대응 전담 기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복지재단. 재구성.

[그림 3-14] 미국 국립고령화위원회(NCOA) 홈페이지



자료: National Council on Aging(2022). <http://www.nco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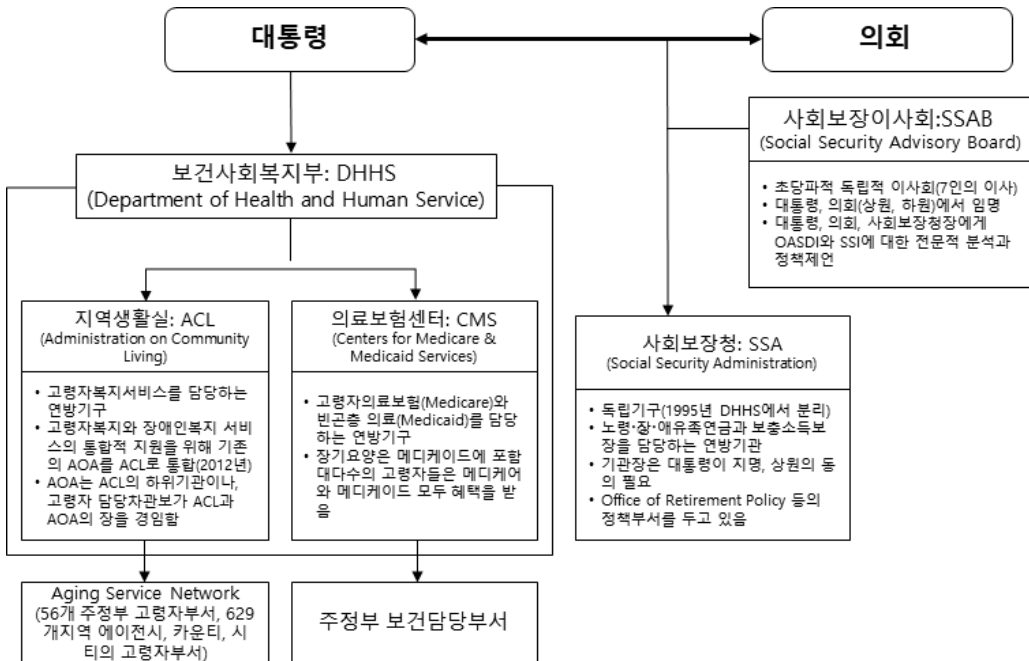
(2) 미국의 고령자복지정책 추진체계

- 미국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 OAA)에 의해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들의 운영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미국 고령자담당기관(Administration on Aging: AOA)은 연방 보건사회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내에 설립

되었고, 각 주별로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책 결정과 운영을 위한 주정부 고령자 부서(State Unit on Aging: SUA)들이 설립됨

- 미국의 고령자복지정책 추진 체계[그림 3-15]를 보면, 중앙정부는 고령자복지정책의 방향과 각 프로그램의 목적을 제시하고 총괄적 예산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주정부나 그 이하의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
-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청(SSA), 의료보험센터(CMS), 그리고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지역생활국(ACL), 노인복지실(AOA)은 각각 고령자복지정책 영역에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결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연방 행정 기관임

[그림 3-15] 미국 고령자복지정책 추진체계



자료: 정홍원 외(2014)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현황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4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제언

제1절 고령정책 영역별 제언

제2절 고령정책 방향 및 추진 체계(안)

제1절 고령정책 영역별 제언

1. 고령정책 자문 의견 분석

1) 자문의견조사 개요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방향 연구」의 질적 제고를 담보하고 주요 영역별 정책 제언과 방향성 탐색 및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
- 자문의 주요 영역은 일자리 및 소득, 건강 및 지역 돌봄, 사회참여 및 학습, 그리고 고령친화 환경 등 4개 영역으로,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탐색에 기반함
- 고령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고령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문단들을 섭외함. 영역별 정책 이슈 및 한계점, 개선점과 인천시의 초고령사회 대비한 정책 제언을 자문 받아 내부자의 시선을 넘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천시에 부합하는 고령정책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
- 모든 자문은 대면으로 이루어졌고 자문 시간은 1시가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됨. 사전에 이메일로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연구개요 및 자문 의견 요청 사항을 포함한 사전 자료와 자문 의견서를 발송함
- 자문의 주요 질의 내용은 공통질의와 주제영역별 개별 질의로 구성함
 - 공통질의: 연구과제명에 대한 의견
 - ‘2027년’ 연도 표기의 상징성 및 논리적 판단
(제언 과제명 - 2027년 초고령사회 대비 인천시 노인정책 단계별 방향 연구)
 - 노인정책 또는 고령정책으로 어떤 대표성이 더 명확한지의 검토
 - 정책제안을 위한 주제영역별 작성이 고려될 경우 ‘단계별’의 의미 논의
 - 개별질의
 - 참여 자문위원들의 주요 활동 영역
 - 참여 자문위원들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정책의 사례 소개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점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될 때, 현재의 고령정책 기조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유지 또는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
 - 초고령사회로 이행될 때, 가장 시급한 문제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 초고령사회 대비 인천시에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초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제언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 영역, 참여 자문단의 직위 및 주요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음

〈표 4-1〉 자문 영역 및 질의 내용

고령정책 영역	주요 질의 내용
• 소득과 일 • 건강 및 돌봄 • 여가 및 사회참여 • 연령통합(고령친화)환경	• 고령정책 또는 고령사회정책 용어 사용의 정합성 • 의견 제시를 위한 영역별 고령정책 추진 내용 및 상황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이행 시, 현재의 고령정책 기초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유지 또는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이행 시, 가장 시급한 문제와 중점 정책과제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 및 방향 제안

2) 영역별 자문의견 결과

(1) 소득과 일

□ 고령정책 추진 내용 및 상황

○ 정부 주요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음

정책	내용
고용안정지원	• 사업주 대상 지원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보조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수 증가한 기업에 임금보조
재취업지원	• 고용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기업, 중장년 대상 단계별 맞춤 고용서비스,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 고령자 인재은행 : 취업능력 낮은 고령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층 대상 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전직지원 의무화 : 1,000인 이상 대기업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50~70세 퇴직전문인력 일경험을 통한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50세 이상 신중년을 적합직무(사전 공표)에 채용 및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제공
직업훈련 지원	• K-Digital 기초역량훈련 : 구직자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훈련 (35~54세 구직자대상) • 지역산업맞춤형 중장년 ICT훈련 : 실업 전후 중장년의 직무능력향상, 기회증대를 위한 ICT활용분야 훈련 • 국가기술전략산업직종훈련 중장년 특화훈련 : 국가훈련 직종 중 중장년 취업률 높은 11개 직종의 훈련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 5060세대 맞춤 기술교육(폴리텍 캠퍼스별 특화전공 운영)

“고령정책 분야는 특히 중앙 사업을 지역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타 지자체 사업과 비슷합니다. 노인대상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 아젠다이므로, 전혀 새로운 정책들이 지역에서 나올 수는 없고, 지역 특성에 따라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는 수준의 차별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A 지역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높고, 지역에서의 일자리 부족문제로 청년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으로 고령층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고령자의 일자리, 특히 저소득 고령자의 일자리나 경제적 지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복지차원의 일자리이긴 하지만 ‘노인일자리 분야’에 내년도(2023년) 사업 예산에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했고(아직 의회 통과 안 된 상태) 사업 편성을 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A)

□ 추진 정책에 대한 한계점

- 고령자 고용 정책의 홍보부족으로 저조한 참여도를 보임
- 정책 실무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애써 발굴해 놓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들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정책이나 사업 시행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대상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며 보수적인 부분은 물론 고용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 자문의원으로부터 수집됨
- 고령자 고용복지 정책은 현금성 복지정책이나 공공근로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는 직접일자리 창출 또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므로 고용유지가 어렵고, 복지성 공공일자리를 통한 고령기 수익창출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고령기의 경제적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음

“고령자 대상 정책들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정책대상자의 체감도,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F)

“현재 고령자 고용정책은 경력을 살린 일자리,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일하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의 경우 고용주 대상으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요, 고령자 고용 영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취업이라 사료되는데, 현재는 재취업 기업의 질과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취업의 질을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문위원 F)

“빈곤 수준이 높고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어있는 고령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생계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재정 상황도 아니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봐야겠죠.

고령기의 '일'이 필수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율이 높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 고령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과업이 아닙니다. ...중략....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특히 노인만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라는 것이 기존의 공공 근로 사업 같은 경우로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고령자가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고령기의 경제적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자문위원 A)

“정부의 재정 여건상 계속해서 세금으로만 만들어 내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략...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본전략인 공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공익활동과 지역사회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영역으로 일자리를 계속 발굴 해 나아가야 하는데, 예산을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자문위원 E)

“현재 고령자 고용복지 정책은 현금성 복지정책이나 공공근로 등 정부지원을 받아 하는 직접일자리 창출 또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므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 D)

□ 고령추진 정책에 대한 개선점

- 현재 정부 추진 일자리 정책에서 고령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양질의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
- 은퇴 후 고령자의 직무 경험, 지식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
- 고령자의 재취업, 전직 지원, 생애설계 같이 일자리 유지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각 기업에 유연근무제 도입 권장 등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필요함
-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지역 기반 기업 및 기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 정권의 교체나 지자체장의 변경 등의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정책 방안들은 영속성을 보장하여 유지하면서 보완을 하는 노력이 필요함. 시책의 시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인사이동에 따라 애써 발굴해 놓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들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등이 개선되어야 함
- 대표적인 고령자 고용 정책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위해서는 더욱 권장해야 합니다. ...중략... 해외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일본 지방에서 60세 이상만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례라던가...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해요.” (자문위원 D)

“국가보조나 공적 부조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계층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자체의 안전점검 일자리가 있는데, 안전 점검은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도로 패임, 각종 표지판의 높이확인(너무 낮아서 사고를 유발한다던가), 교량 파손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같은 직무입니다.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 지 등을 찾아가고 보수로 연결하여 일 년 내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것이죠.” (자문위원 A)

“고령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양질의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자문위원 F)

“전략.... 초고령사회 진입 특히, 베이비부머로 지칭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고령력의 노인인력 증가 및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니즈를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개선점이 요구 됩니다.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특히,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사업 및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및 고령친화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기관(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 한데,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은 사회복지법에만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의 특성 상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민간기업 등이 다양하게 민간형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직업훈련센터, 건전한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 해 보입니다.” (자문위원 E)

“추진 정책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지역 기반 기업 및 기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은퇴 후 고령자의 직무 경험, 지식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자문위원 D)

□ 초고령사회 대응 중점 과제

○ 주요 과제

- 빈곤 수준이 높고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어있는 고령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고령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 고령기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준비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고령자 그룹을 세분화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국가보조나 공적부조로 생계를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형 일자리의 창출, 신규 편입된 베이비부머를 위한 생애교육, 전직교육, 재취업 교육, 후기고령자나 경제적 필요가 약한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참여 목적이 강한 공공형 일자리 공급 등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요구됨

“지금도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고령자 사이의 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갭이 점점 벌어질 겁니다. 고령자도 같은 고령자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더 심화되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책이 지금처럼 차별화되지 않게 진행이 되거나 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고학력자나 경력, 전문성을 갖추고 직업생활을 해 왔던 고령자들은 그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그간 시행하는 고령자 대상 일자리라는 것이 단순일자리들이 많지요. 이렇게 양 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D)

“노후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노후준비가 된 고령자와 준비가 되지 못한 고령자의 갭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는데, 고령자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은 결국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이 덜 투입되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자산포트폴리오 관리 등 경제교육, 고령기에 대해 가이드해 주는 그런 교육 등을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비스 대상은 50플러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A)

“고령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돈 문제(일자리)와 건강문제로 적어도 둘 중에 하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보다는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선별된 대상에 대한 집중 투자(소득창출과 건강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중략.....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특히 지자체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돌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일자리에의 연결이 가능할 수 있고,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문위원 A)

“고령화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의 대상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으로, 늘어난 고령자의 수만큼 더 다양한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으로 편입하면서, 급격한 고령층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신규편입 베이비부머 층이 기존의 고령자와는 교육수준이나 소득, 자산수준, 연금수급 현황 등 상이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전기 고령자)에게 맞는 정책의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 거죠. 특히 이들에 대한 퇴직, 재취업, 창업 교육 등과 함께 새로운 노인일자리정책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문위원 A)

“인구구조 상 변화는 사회 많은 부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령정책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며, 연금, 노후보장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됩니다.” (자문위원 F)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젊은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은퇴가 아닌 계속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영역의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F)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 복지는 단순히 돈을 지급해 주는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생산적복지, 서비스 복지 확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요양 서비스나, 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중략..고령자의 재취업, 전직지원, 생애설계 같이 일자리 유지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D)

“이는 인천 뿐 아니라, 중앙 정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알선사업 등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D)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제언

- 인천시 인구구조 및 고령화 현황, 산업구조 등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령정책 수립의 필요성
- 인구 구성상 50플러스 이상 비율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 산단을 활용한 일자리 정책, 지역 내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 위주의 노동시장 개선, 원활한 고령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등의 제안이 도출됨
 -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의미있는 활동이 가능한 공공일자리 개발 : 박물관 미술관 등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나 안전 점검 등의 파트타임 일자리.
 - ②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알선사업 등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 ③ 체계적인고령정책에의 연구 : 고령자 일자리 모델이나 해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인천시 고령정책 시행계획의 핵심과제중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노후준비 지원’관련하여,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인력개발 및 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업(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문위원 E)

“전략.... 인천시는 50대 비율이 많고, 공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공단 중심지의 노후화, 인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내의 고령화를 편차가 심하며, 높은 고령자 빈곤율 등을 나타내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각종 통계나 인프라 같은 것이 구축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선포를 하였는데 관련 예산이나 재정확보가 미흡하고...중략.....”

“일자리 중심으로 보았을 때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 희망 직종과 희망임금 수준의 불일치가 전반적으로 심한 편이며, 50플러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일자리 부족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들이 많아, 인천시 거주 50플러스의 서비스 종사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거주 50플러스 이상자는 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많으며, 소득양극화도 특히 50대에서 가장 심합니다. 인천시의 50플러스 지원 조례도 남동구에 있고 다른 구에는 조례관련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직업훈련이나 평생학습 참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어요. 지역의 특성에 관한 파악을 명확히 한 후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현재 갖추고 있는 인프라, 인천 지역 내 산단, 산업체들에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업 환경이 고령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 등으로 백업 할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조례라던가 제정하여 백업하여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자영업에 몰리고 있는 50플러스 이상자들에게 지역의 산단을 활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시의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자문위원 D)

“인천시는 지역 내 사업체(산단)을 활용하여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젊은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은퇴가 아닌 계속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영역의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F)

“인천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정권의 교체나 지자체장의 변경 등의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방안들은 연속성을 보장하여 유지하면서 보완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책의 시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인사이동에 따라 애써 발굴해 놓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 등... 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자문위원 A)

(2) 건강 및 돌봄

□ 고령정책 추진 내용 및 상황(한계점)

- B 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고령자 관련 정책 및 사업으로는 ① 2019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② 2022년부터 B 지역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그리고 ③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전국의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세부 사업 중 하나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경우 대부분은 저소득 뇌혈관 환자가 응급치료 후 퇴원 후 요양병원 전원이거나, 자기 집으로 퇴원하여 통원 치료+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연계하고 있음(자문위원 B)
- 고령사회대응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법률 미제정, 전담조직문제,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을 지적하였으며, 고령화보다는 출산율 제고, 생산연령인구 확충으로서 청년정책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목함. 이에, 고령자 돌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함

“노인장수복지과에서 타부서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고령사회정책 총괄하는데 한계 있으며, 현재 정책기획관의 비전.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정책 총괄하고 있으나, 고령화보다는 출산율 제고, 생산연령인구 확충으로서 청년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령사회대응 정책은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자문위원 C)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경우 법률제정이 되지 않고, 성과가 아직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상 지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초기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인식오류, 사업부재, 전담조직문제, 법률지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 보건으로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병원 중심이어서 병원-동(洞)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는 가능하지만, 병원-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직접적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자문위원 B)

“건강과 돌봄을 연계한 소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B 지역 및 자치군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위하여 어떤 기관들과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자문위원 B)

□ 초고령사회 대응 중점 과제

- 초고령사회 이행에 앞서 고령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건강과 돌봄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관 중심 민간협력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막혀 있는 공공 기관들 간의 협력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자문위원 B)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정책의 대상은 전통적인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중산서민 건강한 노인도 포함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자문위원 B)

- 고령정책 대상자의 특성에 기반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고령자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한 고령자 등 세분화하여 고령자 돌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고령정책의 기초는 유지하되 정책의 폭과 깊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함

“건강 관련은 저소득계층 예를 들면, 국가보조나 공적부조에 의지하는 계층에 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고,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므로 향후 정책 반영시 대상자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문위원 A)

“1955~1970년 정도까지 베이비붐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고령자 즉,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며,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하는 고령자 집단과 상대적으로 중산/서민층의 건강한 고령자가 큰 규모로 계속 고령인구를 구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정책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두 개의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로 연결은 되지만, 강조점이 다른 두 개의 고령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자문위원 B)

“초고령사회에서는 베이비붐세대가 온전히 고령층으로 편입 완료한 시점이 되며, 2023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층 진입에 대비한 재가돌봄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문위원 C)

- 자문위원의 대부분이 고령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고령자의 ‘일자리’와 ‘건강’ 관련 정책을 지목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고령정책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함

“고령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자 일자리와 건강 문제이므로 관련 정책으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문위원 A)

“고령정책을 다룰 때 다양한 영역이나 분야별 필요한 노력, 대응들이 있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돌봄지원 등이 있습니다.”(자문위원 A)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제언

- 공동 돌봄체계 강화,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고령자 정책자문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주거,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위 네 가지 영역을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경우, 인식요류, 사업부재, 전담조직문제, 법률지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전국의 권역/지역책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세부사업 중 하나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 뇌혈관 환자가 응급치료 후 퇴원 후 요양병원 전원이나 자기 집으로 퇴원하여 통원치료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연계하고 있으나, 병원중심이어서 병원 동(洞)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는 가능하지만 병원-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직접적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복지분야에서 또 하나의 중앙정부/광역지자체 보조금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금지하고,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일반적 교육 이외에, 보건복지부 및 다른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등이 필요합니다.”

“100세까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노인!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함께 합니다!”(자문위원 B)

“인천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조직인지 고민하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조직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뒷받침 해주고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권의 교체나 지자체장의 변경 등의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방안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인사이동에 따라 애써 발굴해 놓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자문위원 A)

“공동 돌봄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고령정책자문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 예를 들면, 4차산업시대 스마트 돌봄환경 조성, 건강한 노후를 위한 요양서비스 지원,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신 노년문화 조성, 예방 의료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문위원 E)

(3) 여가 및 사회참여

□ 고령정책 추진 내용 및 상황

- 고령친화환경 조성 사업으로 제2차 노인복지 및 기본계획(2023~2027) 9대 영역(외부환경 및 건물, 교통 및 이동, 주거, 생활 안정 및 고용, 여가 및 사회활동, 의사소통 및 정보, 존중 및 사회통합, 건강 및 지역돌봄 지역C 특화)에 78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노인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노년 인식 개선 교육, 어르신 해양치유/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됨(자문위원 C)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5~50여명의 봉사단체를 운영할 경우 1인당 최대 1.6만원의 봉사활동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활동유형으로는 주거 및 환경보호, 생활편의지원, 안전지도, 상담 및 안내, 교육지도, 문화예술, 보건의료, 특성화 활동, 기타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되어야 함(자문위원 E)

□ 초고령사회 대응 중점 과제

- 초고령사회로 이행될 때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령자의 노후 준비 교육이 요구됨. 정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고령자만의 고립된 정책을 지양하고 세대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간구해야 함.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건전한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함

“초고령사회로 이행될 때 고령자만의 고립된 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세대 분리가 아닌 세대 교류와 통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자문위원 C)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가문화 보급 및 사회참여 지원 관련,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확대, 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방형(테마형)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지역 격차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화교육의 기회도 더욱 늘려야 합니다.”(자문위원 E)

“노인·노년·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AIP(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또한 고령자의 외출 및 교류 등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고령자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부엌 등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자문위원 C)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직업훈련 센터, 건전한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문위원 E)

“노후준비가 된 고령자와 준비가 되지 못한 고령자의 갭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자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은 결국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이 덜 투입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50플러스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자산포트폴리오 관리 등 경제교육, 고령기에 대해 가이드해 주는 그런 교육 등을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자문위원 A)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제언

- 인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불가피하며, 지역 기반의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교육,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고령정책 연구를 병행해야 함

“향후 고령정책은 복지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됩니다. 사회적 고립감 및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우울감 해소를 돕기 위해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자존감의 회복,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 기반의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교육, 여가 활동 및 자원봉사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자문위원 D)

“인천시는 지역 내 고령화를 편차가 심한 편이며, 특히 50플러스 이상자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들은 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직업훈련이나 평생학습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므로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고령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자문위원 D)

“고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젊은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은퇴가 아닌 계속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영역의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자문위원 F)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신 노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자문위원 E)

(4) 연령통합(고령친화) 환경

□ 고령정책 추진 내용 및 상황

-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환경조성 지원책들을 추진 중에 있음 주거지원으로는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를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지원 사업이 있는데,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돌봄 등 복합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고령자 서비스 연계주택 모형을 개발하고 있음

- 이동권 보장을 통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공공형 택시(전국 61개 시), 버스(전국 65개 시)지원 사업, 소형버스 및 100원 택시 사업(전국 82개 군)등이 시행되고 있음
-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는 ICT 스마트케어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스마트재활제품, 고령자 건강관리 제품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립 하고 전국에 혁신센터 3개소를 설치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C지역의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자문을 받아 추진 정책에 대한 내용 과 한계점 등을 정리하였음

“C지역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고령친화환경 조성 사업으로 제2차 노인복지 및 기본계획(2023~2027)(안)이 9대 영역(외부환경 및 건물, 교통 및 이동, 주거, 생활안정 및 고용, 여가 및 사회활동, 의사소통 및 정보, 존중 및 사회통합, 건강 및 지역돌봄, 제주특화)에 78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용 버스노선도/시간표 책자 제작(고령친화적 디자인) 보급, 스마트 경로당 운영 확대, 동네공원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 노인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고령친화상점 운영 지원, 노인/노년 인식 개선 교육, 어르신 해양치유/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이 새로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C)

□ 추진정책에 대한 한계와 개선점

- 추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부처 간 통합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

“고령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고령친화환경 조성은 어느 한 부, 실, 국에서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부처간 통합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C지역의 노인장수복지과에서 타부서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고령사회정책 총괄하는데 한계 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관의 비전.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정책 총괄하고 있으나, 고령화보다는 출산율 제고, 생산연령인구 확충으로서 청년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령사회대응 정책은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C)

□ 초고령사회 대응 중점 과제

- 고령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고령정책을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노인”에만 한정된 정책을 지양하며 전세대 통합 정책을 제시해야 함

- 고령화에 관한 사회적인 공론을 이끌어 내고 국민, 지자체, 국가가 함께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종합적인 고령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초고령사회 이행에 따른 개별과제들이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따라서 정부의 초고령사회 대비 기본계획(정책)의 조기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문위원 E)

“노인/노년/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고령친화산업 육성), AIP(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문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어르신 이동지원(외출, 교류 등을 위한) 서비스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의 역할을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C)

“예를들어 인구 변화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일어하고, 아직 나지 않은 미래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 현안에도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총괄할 정책 리더십이 요구 됩니다.” (자문위원 E)

“초고령화사회 문제에 대해 깊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가 필요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 지역 사회, 가족, 개인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임에도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해왔죠.” (자문위원 E)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제안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 추진 제안
- AIP(지역사회계속거주) 정책 활성화 방안 필요

“인천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에이지테크(AgeTech), 고령친화산업(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육성 추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동네, 마을 단위로 고령친화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령친화환경조성은 고령자가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는 특히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계속거주 정책과 다양한 실외 프로그램등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자문위원 C)

2. 고령정책 영역별 방안 제언

□ 소득과 일

- 고령자를 위한 소득, 일자리 영역의 정부 주요 추진 정책은 고용안정 지원, 재취업지원,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고용안정 지원책에는 고령자 채용에 친화적인 기업을 위한 임금보조 정책을 들 수 있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 대상 각종 카운슬링,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통한 재취업을 돕는 지원 정책이 있음
 - 퇴직 후 고령 전문인력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고 이들을 채용 및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고용장려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이는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일-경험의 차세대 전달 등을 통하여 세대통합의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음
 - 중장년 구직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교육 지원이 수반되어야 업무 적응 및 업그레이드된 자격 취득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됨
- 지자체별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적 부족분의 보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음
 - 실무자의 인사이동이나 홍보 부족의 이유로 참여도가 저조한 편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의 성격이 고용의 지속성 담보 측면에서 볼 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고령자 고용복지 정책은 주로 현금성 복지정책이나 단순 공공근로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고용유지가 어렵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의 연계도 용이하지 않음
- 은퇴 후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단절은 소득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노후 경제적 빈곤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점검 및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은퇴 고령자의 직무 경험, 지식을 인정하고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채용 기업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됨
 - 전문경력을 보유한 은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고령친화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함
 - 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필요하고, 지역 기반 기업 및 기관, 시설과의 협력이 필요함

- 기존의 지자체 단위의 획일적 고령정책의 수립이 아닌 고령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소득 지원 및 일자리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고령자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정책 창출

- 50플러스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업 및 산업공단을 활용한 일자리 정책 마련 및 열악한 노동시장 개선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령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등이 마련되어야 함
-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지원, 고용유지가 담보되는 공공일자리 개발, 전직 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알선사업 등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급함
- 고령사회 대응 방안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검토 등 체계적인 고령정책 관련 연구가 필요함

□ 건강 및 돌봄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및 돌봄 정책은 주로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와 연계한 사회서비스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정책은 크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강 및 지역 돌봄 사업 수행에 있어서 수정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자문 의견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한 법률의 미제정,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전담조직의 부족, 지역과 기관 등의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이 지적됨에 따라 고령자 맞춤 돌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

○ 건강 및 지역 돌봄 정책에 대한 과제로 법적 장치 마련 및 고령자 그룹을 연령별, 특성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의 시급함을 지적함

- 초고령사회 대비 전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함
- 2023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기고령자 대상 재가 돌봄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

○ 지역 기반 돌봄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 공동 돌봄체계 강화,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서·심리 케어 지원, 고령자 정책자문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 돌봄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함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관련 통합돌봄 사업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 4차 산업에 맞는 스마트 돌봄환경 조성,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예방 의료차원의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함
- 핵심 전담조직의 활성화로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여가 및 사회참여

- 고령자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 적극적,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 및 평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노인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 해소 등을 돕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활발한 참여 유도를 위해 봉사활동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주거 및 환경보호, 학교 귀가길 안전지도, 문화예술 관련 가이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고령자 대상의 사회참여 및 학습 프로그램이 지자체 단위 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별 세분화된 구분을 통하여 맞춤형 차별화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요구됨
-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함
 -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고 중장년 대상 노후 준비 교육도 필요함
 - 고령자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세대 간 갈등의 완화에 초점을 둔 세대통합을 고려한 적합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함
 - 보다 광범위하고, 건전한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세대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고령자 대상 디지털 정보화교육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함
 - 중장년 대상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직무교육, 생애설계, 경제교육 등 노후준비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에도 주력해야 함
- 인천시 지역 기반의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 평생학습 운영 확대
 -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교육,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를 돕기 위한 사회일원으로서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연령통합(고령친화) 환경

-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 및 안전한 생활 영위를 돕기 위한 주거, 교통 등 고령친화환경 조성 정책이 추진중에 있음
 -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돌봄 등 복합적 생활지원서비스를 지향하는 고령자 서비스 연계주택 모형을 개발하고 있음
 -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취약지역에서의 공공형 택시, 소형 및 100원 택시 사업 등 대중교통 편의 사업이 전국 82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음
 - 고령친화적인 스마트 재활 제품, 건강관리 제품 개발 보급 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고령자의 노후생활의 자립을 돕고자 함
- 초고령사회의 도래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지원하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 사업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 시행의 효율적, 효과적 측면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부처 간 통합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정부, 지자체 등 고령친화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가 세워져야 함
 - 초고령사회 대비 세대 간 갈등 야기에 대비해서 세대통합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함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고령자’에 국한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전 사회적,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함
- 인천시의 인구구성, 산업 현황 등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요구
 -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 추진, AIP(지역사회계속 거주)를 위한 정책 활성화 방안이 시급함
 - 익숙한 환경에서의 거주를 선호하는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거주 환경 조성 사업은 심리적, 정서적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음
 -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진 초고령사회의 고령친화환경 조성 사업 관련 사례 검토 등의 연구 활성화도 필요함

〈표 4-2〉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영역별 정책 제언

영역별 고령정책 제언		
소득과 일	- 지역기반 기업(관) 연계망 구축 - 생산적 고령자 일자리 컨설팅과 창출 - 고령자 일 환경 개선 및 조성 - 고령정책지원 관련 법제 정비 - 고용안정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 분야 제공기관의 다양성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강화 - 체계적인 고령정책 일자리 연구 및 사업 - 대상자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정책 프로그램 - 이·전직, 재취업 지원 의무화 및 직업훈련 강화 - 고령친화기업 및 산업 육성
건강 및 돌봄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개발 및 모니터링 - 돌봄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 핵심 전담조직 활성화로 정책 기조 유지 - 건강 및 돌봄(예방의료 서비스) 증진	-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 정부사업의 지역적 특성과 연계성 반영 - 정서·심리 케어 지원
여가 및 사회참여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강화 - 사회참여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연계 지원 - 고령자 대상 세분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연령통합 (고령친화) 환경	- 연령통합도시 지역 환경 조성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추진체계 검토 - 고령자 및 고령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 고령사회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고령친화환경 조성 관련 연구 활성화

제2절 고령정책 방향 및 추진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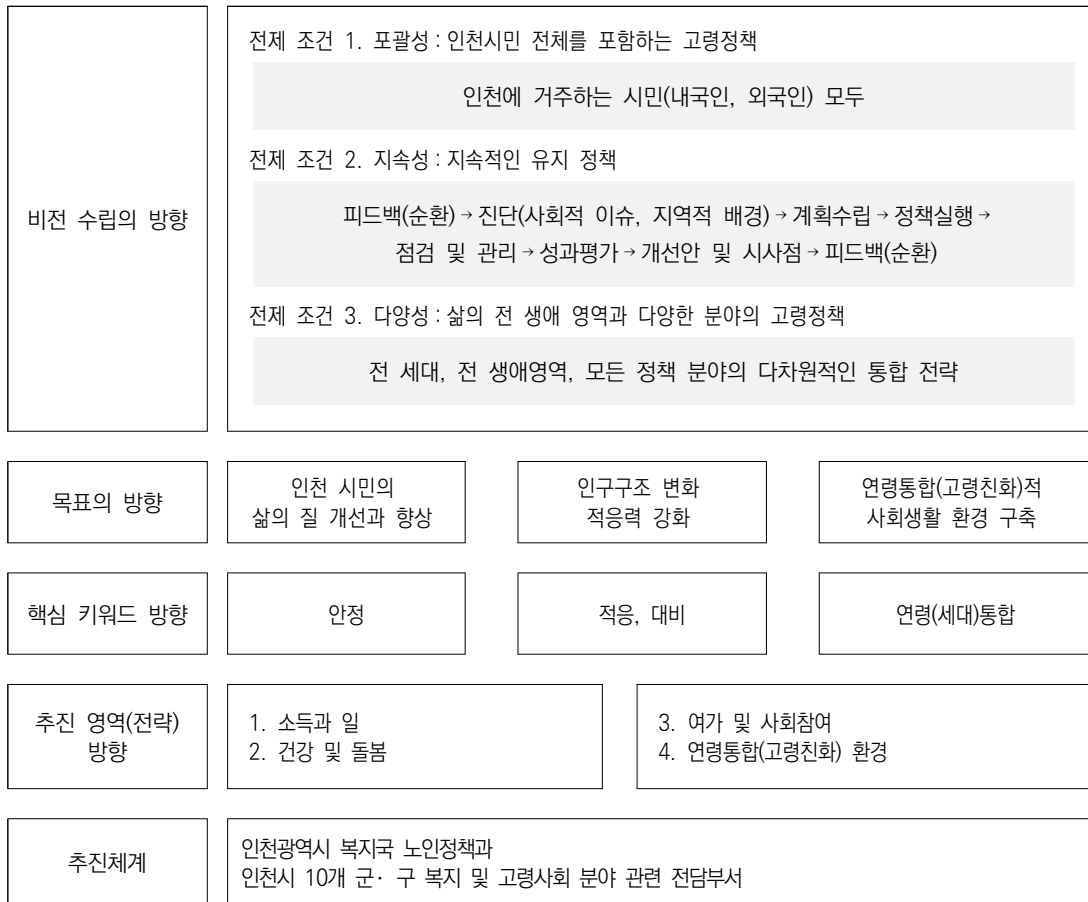
1.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방향

- 인천시는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과 향후 진입할 지역 등으로 나뉘고, 내륙과 섬을 지닌 지형적 특성, 산업 유형의 다양성(농촌, 어촌, 산촌, 도시(원도시, 신도시), 산업단지 등) 등의 기준들에 의해 제각기 다른 특성으로 성장하는 액티브(active)한 자치단체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천은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군·구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와 적응을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2019년부터 고령사회 분야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시 전체를 포괄하는 고령정책의 실질적인 방향은 2023년 추진될 제2차 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기본계획(2024~2028)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수립될 예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룰

고령정책의 추진 방향은 기존의 정책과 향후 마련되어야 할 정책의 가치를 검토하여 지향해야 할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관점의 지향점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여 모든 정책의 기본적 토대로 공통적 요소로 삼음. 이후 설정된 기반 위에 세부적인 고령정책 영역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초 공정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음
-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방향(안)을 다음 [그림 4-1]과 같이 제시함
 - 단,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방향(안)은 제2차 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기본계획(2024~2028) 수립 이전에 다루는 내용으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제안하는 사안임

[그림 4-1]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방향(안) 모형



2. 인천시 고령정책 추진 체계(안)

-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인천시 행정조직 체계 중 고령정책을 최우선으로 담당하는 복지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 보훈과로 총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총 17개 팀으로 구분되어 세부 업무를 수행함. 총 인력 구성은 86명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임(그림 4-2)
- 특히 노인정책과는 노인정책담당, 행복한인생담당, 노인돌봄요양담당, 장사문화담당의 5개 팀으로 총 23명의 담당자로 배치되어 구성되어 있음

[그림 4-2] 인천시 복지국 조직도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제28회 행정감사 주요업무보고.

- 노인정책과 내 세부 업무를 살펴보면,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대응 계획 수립과 노후 복지 서비스 제공,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전 도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인프라 확충, 자연친화적인 장사인프라 구축의 내용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표 4-3)

〈표 4-3〉 인천광역시 복지국 부서별 주요사무

부 서 명	주 요 사 무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 자활사업 종합지원 계획 수립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복지서비스과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긴급·틈새 돌봄 추진 ○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 ○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 노숙인 등 안전보호 및 사회복지 도모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립생활 기반 제공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 사업 ○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가족 서비스 활성화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대응 계획 수립 ○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 복지서비스 제공 ○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전 도모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인프라 확충 ○ 자연 친화적인 장사인프라 구축
보 훈 과	○ 보훈관련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 보훈단체 관리·지원 ○ 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운영 ○ 과거사 관련 사항 지원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제28회 행정감사 주요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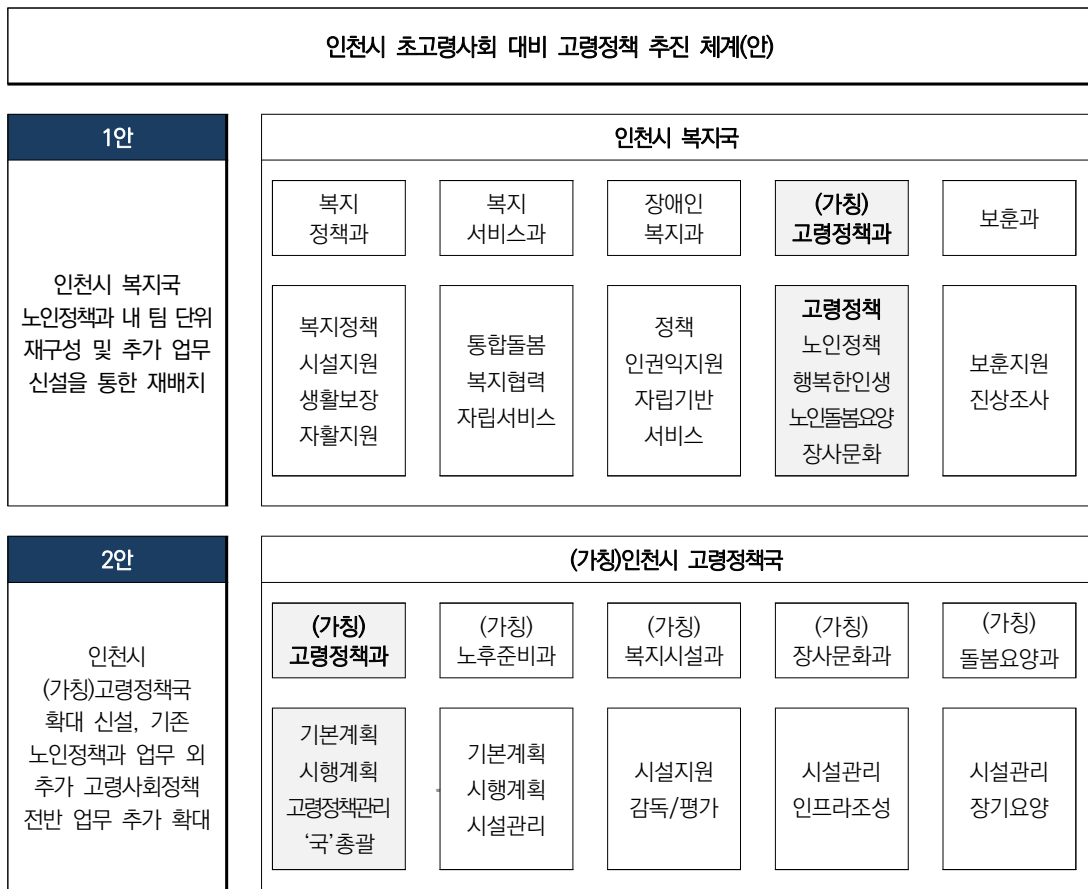
- 인천시는 초고령사회 대비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고령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조직체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증가하는 고령인구 만큼 특성을 파악

하고 정책을 계획해야 하는 범위의 확대를 예측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2가지 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함(그림 4-3)

-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및 민선8기의 정책 환경을 반영해 낼 수 있고,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할 수 있는 논의의 시작을 마련코자 함
- 1차 논의의 제안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나, 근본적인 실효성의 검토는 인천시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충분한 공감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기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슈가 됨
- 따라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의 구체화는 2023년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 번째 1안은 현재 인천시 복지국 노인정책과는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9년부터 고령사회 분야의 내용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요구됨
 - ‘과’의 명칭도 노인정책에서 ‘(가칭)고령정책과’로 포괄적 의미를 담으며, 1팀을 신설하여 기능과 역할의 확장을 모색해 봄
 - 고령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행정조직 내 다양한 부서와의 연계도 필요함. 주거계획, 교통계획, 교육계획 등 고령정책의 기초가 제시되지 않는 분야를 손꼽아야 하는 상황임
 - 이런 측면에서 (가칭)고령정책과 내 고령정책팀을 신설하여 각 부서마다 산재된 고령정책을 일원화하고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제안으로 검토가 요구됨
- 두 번째는 ‘(가칭)고령정책국’의 확대 신설을 도모하는 방안임
 - 복지국은 기존의 복지정책서비스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직접 업무의 내용이 많음. 현재의 노인정책과 역시 복지분야에서 추진해온 과업이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커다란 기초의 변화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1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정책은 모든 정책의 기초로 전제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그래서 하나의 팀의 업무로 추진하기에 담당 부서 간 협조 및 협력과 통합적 정책 관리에 무리가 예상됨
 - 따라서 별도의 ‘국’체제로 상향하여 정책계획 - 이행 - 결과 -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인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논의의 초점을 제시함

- (가칭)고령정책국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의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업무를 ‘과’로 승격하여 추진하며, 고령의 포괄적 의미를 기존의 정책과 예방적 대비 관점에서 ‘(가칭)노후준비과’를 고려해 봄
- 이는 노인정책과일 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집중되었고, 현재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룸. 그러나 예비고령인구로 볼 수 있는 중·장년세대를 지원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정책관점의 차원으로 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음
- (가칭)고령정책국 내 ‘과’ 구성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이므로 추후 ‘국’설치에 대한 논의가 추진될 시 충분히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림 4-3]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추진 체계(안)



[참고문헌]

- 강성호·이상우(2013). 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 대응 전략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고영호 · 한승연 · 김영지 · 김명연 · 오성훈 · 김경래 · 이윤경 · 황남희 · 진화영 · 임리사 · 김재열(2020) 포용적 고령친화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수탁연구보고서.
- 관계부처합동(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 권미애 · 김제희 · 김신경(2019). 제1차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인천여성가족재단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김경선(2017). 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주요 현안과 정책 대응 : 정보통신기술발달을 기반으로 한 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린 · 배지영 · 안서연 · 허선영 · 김혜인(2020).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수현(2018). 독일 50+의 일자리. 50+ 해외동향 리포트 2018.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김원섭(2019).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김주영(2022).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주택도시금융연구 22; 7(1), 49-64.
- 김춘남·송영신·박지환·이사라(2020). 경기도 고령화 대응 전담기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복지재단.
- 남현주(2019). 인구고령화와 주요 선진국의 사회정책분야 대응 사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이슈페이퍼.
- 노대명 · 김상호 · 우해봉 · 최영준 · Goishi Norimichi · 김예슬(2020). 각 국의 고령화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 보고서.
- 노현진(2020) 미국 내 가족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 지원 제도 :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사례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정부(2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 대한민국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대한민국정부(2022). 「제4기 인구정책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 대한민국정부(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 민상기·이명훈·문세연·길대환·노경희(2015). 중장년 대상 적합한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박소정·강은나(2021) 미국의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겨울호 Vol.19, 87~107.
- 박지연(2018). 50+해외동향 리포트. 서울시50플러스 재단(미국).

- 박진경·김상민(2020).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복 노인복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혜미(2016). 프랑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정책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349-376.
- 법제처(2021).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보건복지부(2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2년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2년도 시행계획-지자체)」
- 블랑시 르비앙, 클로드 마르탱(2018).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와 사회적 돌봄.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 Vol.7, 5~15.
- 서울시복지재단(2010). 「WHO 세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전략」.
- 손동기(2015). 프랑스 공공문화정책과 ‘노후 잘 가꾸기(Bien Vieillir)’를 위한 여가활동 : Paris시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3(4), 103-128.
- 손동기(2022). 프랑스 인구고령화와 세대간 일자라에 관한 연구 : 정책대응과 시사점. EU연구. 2022년 제 63호
- 송민혜 · 홍은선 · 이병길 · 김영석 · 정건화 · 민보람 · 박선영(2019). 해외 50+정책 사례분석. 서울특별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송혜진(2018). [글로벌] 독일BMFSFJ, 제8차 고령자보고서 작성 추진. 소비자정책동향, 제93호.
- 유각근(2011).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 미국헌법연구, 22(3), 259-282.
- 이미화 · 유해미 · 권미경 · 이정원 · 김나영 · 이재희 · 윤지연 · 장문영(2017).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인천광역시·육아정책연구소.
- 이상림·권오용·박해남·임소정·김석호·김미영·박효민·유경원·유재언·이동규·임동균·장덕진·정준호·지은숙·하상웅·홍민기·임지영·차정음·배운정(2022).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수진(2018). 50+해외동향리포트 서울시50플러스 재단.
- 이윤경 · 강은나 · 황남희 · 주보혜 · 김세진(2019). 고령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재 · 기윤환 · 배은주 · 안내영 · 이미애 · 이왕기 · 정혜은 · 조혜정 · 최태림(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인천연구원.
- 이종은(2020). 미국연금법 개정(SECURE Act)의 특징과 의미. 자본시장연구원. 2020(4).
- 인천광역시(2022). 「제1차 인천고령사회대응 중장기 계획(2019~2023) 2022년도 고령사회대응 시행계획(안)」.
- 인천광역시 · 인천교육청(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고령사회정책분야)」.

- 인천광역시·인천교육청(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고령사회정책분야)」.
- 임도빈(2002). 프랑스의 정치행정체계. 법문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정건화(2018).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호.
- 정연택·김근홍·김상철·김상호·김원섭·김진수·남용현·남현주·박경순·박수지·박지순·심성지·오윤섭·유근춘·윤조덕·이신용, 이용갑·이진숙(2018).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 정은하(2016).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World & Cities Vol.12, 24-33.
- 정은하·김미현·송인주·이순성·홍주희(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정혜은(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 정홍원·심창학·한은희·황규성·류진아(2014).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현황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광자(2022). 「독일 중·고령자의 고용 및 사회참여」. 고령사회의 삶과 일. 2022 가을호 Vol.8, 16-21.
- 조미정(2016). 50+세대 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부산복지개발원.
- 조선아(2018).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독일의 대학 개방. 50+ 해외동향 리포트 2018.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조성은·안준기·이주원·김민서(2021). 고령자 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주보혜(2019). 독일의 노인 주거 정책 동향: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여름호 Vol.9, pp.68-77.
- 주보혜·임정미·노법래·신영규·임새아·정희선(2019). 국제기구와 주요 선형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은정·원영희·김영미·김진·손동기·김현지(2013).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I : 주요국가 시니어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상미·신경화·이혜림(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p56.
- 최연진(2022) 미국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가을호 Vol.22, 26-34.
-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
- 통계청(2022.5.26.). 보도자료 :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 통계청(2022.9.5.). 보도자료 : 2021년 장래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함민지(2022). 분권 레터 뉴욕시의 노인 고용 증진 정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황경란(2020).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해외사례. 복지이슈FOCUS 제11호 2020-11. 경기복지재단.

■ 사이트

<https://www.bmfsfj.de/bmfsfj/themen/aeltere-menschen>.

Encore.org.(2017) <https://encore.org/encoreu/programs/>.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11>.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11>.

<https://acl.gov/programs/volunteer-opportunities-and-civic-engagement>.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espace-citoyen>.

<https://hautsdefrance-aract.fr/wp-content/uploads/2018/11/Conditions-de-travail-et-seniors-Def-1.p>.

<https://silvertime.co.kr/health-welfare/세계보건기구who-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지자체/2021.4.18.실버타임> 기사.

<https://www.brooklinecan.org/transportation.html>.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4&tstat=000000090001&cycle=7&tclass1=000001011679>.

<https://www.nyc.gov/site/dfta/services/older-adult-center.page>.

<https://www.nyfsc.org/support-services/free-transportation>.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public/dohmhnews9-04.pdf>.

Le Jardin de la Calade” 프로그램 <https://www.ccas-agde.fr/age-d-or/les-foyers-restaurants>.

NCOA 홈페이지 <https://ncoa.org/page/history>.

www.seattle.gov/city-budget/2016-proposed-budget/human-services.

고령 인력 활용 안내서(PRESErVER IES SENIORS).

고령자 전용버스(브루클린), 택시 바우처(뉴욕).

고령친화서울 홈페이지(http://afc.welfare.seoul.kr/afc/index_new.do).

낙상예방 프로그램 (How to Prevent Falls).

논산시청 홈페이지 <https://search.nonsan.go.kr/RSA/front/Search.jsp>.

뉘른베르크시 홈페이지. <http://www.sportsservice.nurnberg.de>.

뉴욕 노인 고용 서비스 부서(Senior Employment Service Unit).

뉴욕시 리서브 프로그램 <https://www.reserveinc.org/brochures>.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11>. 독일, “고령인력이 나라 살린다”...민간단체 중심 활발한 사회활동 유지. 2021.10.29. 시니어신문 기사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5>. ‘독일, 죽음의 순간까지 자택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다’. 2021.05.25. 복지타임즈 기사

-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
- 로드 스칼라(Road Scholar)(<https://www.roadscholar.org/collections>).
- 민간협회 르 파리 솔리데르(<https://www.leparisolidaire.fr>).
- 민간협회 파랭 파르밀(<https://ppm-asso.org/decouvrir-ppm>).
- 시애틀시의 이노베이션 펀드(<https://humaninterests.seattle.gov/2017/08/08/1584>).
- 인천데이터포털(<https://www.incheon.go.kr/data/index>).
- 일본정부통계종합창구.
-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22). 「시·도 인구 추계 피라미드」. <https://sgis.kostat.go.kr>.
- 통계청(2019a).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 통계청(2019b). 「장래가구추계」. <https://kostat.go.kr>.
- 통계청(2020). 「인천광역시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https://kostat.go.kr>.
- 통계청(2021a). 「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https://kostat.go.kr>.
- 통계청(2021b). 인구총조사. <https://kostat.go.kr>.
-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
- 통계청(2022.5.26.). 보도자료 :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 통계청(2022.9.5.). 보도자료 : 2021년 장래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프랑스 시민공간(Espace citoyen).

■ 해외문헌

- Bauman, K., & Christensen, C.(2018). Improving Skills through America's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BMAS 홈페이지 <https://www.bmas.de/EN/Home/home.html>.
- BMAS(2020). Social security at a glance 2020.
- Brunel, M., & Carrère, A(2017). Les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vivant à domicile en 2015, Premiers résultats de l'enquête CARE «ménages », Drees. Etudes et Résultats, n°1029.
- Campéon A., & Le Bihan B(2006). Les plans d'aide associés à 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Etudes et Résultats, 461. DRESS.
- Colello, K. J., & Napili, A. (2018). Older Americans Act: Overview and fund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 Da Roit, B., & Le Bihan, B. (2011). Cash for Care Schemes and the Changing Role of Elderly People's Informal Caregivers in France and Italy', in Pfau-Effinger B. and Rostgaard T. (eds), Care between Work and Welfare in European Societies, Palgrave, pp. 177-203.
- Department of Labor(2014). WIOA resource Page.
-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2018). Senior Community Services Employment Program Performance Accountability Final Rule 2018.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7/30/2018-16216/senior-community-service-employment-program-performance-accountability>.
- Fouquet A., Laroque M., & Puydebois C. (2009). La gestion de 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Synthèse des contrôles de la mise en oeuvre de l'APA réalisés dans plusieurs départements. Rapport d'IGAS.
- Govillot, Stephanie(2013). Le passage de l'emploi a la retraite: travailler pendant la retraite, une situation qui se developpe, Insee Premiere, n, 1449, juin 2013.
- Le Bihan B. (2010). La prise en charge des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n France. Vers la création d'un cinquième risque? Informations sociales, 157, pp.124-133.
- Le Bihan B., & Martin C. (2007). Cash for Care in the French Welfare State: A Skilful Compromise? in Ungerson C. et Yeandle S. (dir.), Cash for Care Systems in Developed Welfare States (pp.32-59). Londres: Palgrave.
- Lee, Lee & Oh (2019). Aging in Korea: What should we prepare for?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Japan's super-aged societal issues and policies. The Asia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 Sciences 18(2), p 1-12.
- Lee, Lee & Oh (2019). Aging in Korea: What should we prepare for?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Japan's super-aged societal issues and policies. The Asia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 Sciences 18(2), p 1-12.
- Merkel, Sebastian, Langer, Henrike(2022).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를 위한 독일의 지역사회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가을호 Vol. 22, pp. 17-25.
- Merkel, Sebastian, Langer, Henrike(2022).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를 위한 독일의 지역사회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가을호 Vol. 22, pp. 17-25.
- Muller, M(2017). 728 000 résidents en établissements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en 2015, Premiers résultats de l'enquête EHPA 2015. Etudes et Résultats, n°1015.
- Nathalie Augris and Catherine Bac, "Évolution de la pauvreté des personnes âgées et minimum vieillesse", Retraite et société, No.56 (javier 2009), 15-23.
- OECD(2018). Key policies to promote longer working lives: Germany.

- OECD(2019). Working Better with Age: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Paris: OECD Publishing.
-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5, Population Bulletin 70-2, Dec. 2015.
- Roberts, A. W., Ogunwole, S. U., Blakeslee, L., & Rabe, M. A. (2018). The Population 65 Years and Older in the United States: 2016.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ensus Bureau.
- Tess Scannell(2015).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 Weber, A. (2015). Des enquêtes nationales pour connaître l'aide apportée par les proches en raison d'un handicap ou d'un problème de santé. Informations sociales, n°188, 42-52.
- ニッセイ基礎研究所 홈페이지 <https://www.nli-research.co.jp/?site=nli>
-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
-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지역包括ケアシステム.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
- 内閣府(2022). 「令和 4年版高齢社会白書」令和4年度高齢社会対策.
- 地方独立行政法人 東京都健康長寿医療センター 홈페이지 <https://www.tmghig.jp/research/>
- 효고현 인구추계 https://web.pref.hyogo.lg.jp/press/20220831_11051.html
- 효고현 고령복지관련자료 https://web.pref.hyogo.lg.jp/kf02/hw07_000000012.html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시니어연구 2022-07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정책 방향 연구

발 행 일 || 2022년 12월 31일

발 행 인 || 황흥구

발 행 처 ||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편 집 인 ||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권미애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0층(제물포스마트타운)

전 화 || (032)715-5491 팩 스 || (032)715-5319

홈페이지 || <https://www.inwf.kr/>

인 쇄 || DESIGN편집(032-710-6480)

ISBN 979-11-92210-30-8 : 비매품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으며,
본 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9 791192 210308
ISBN 979-11-92210-30-8